

이 보고서는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의 기초연구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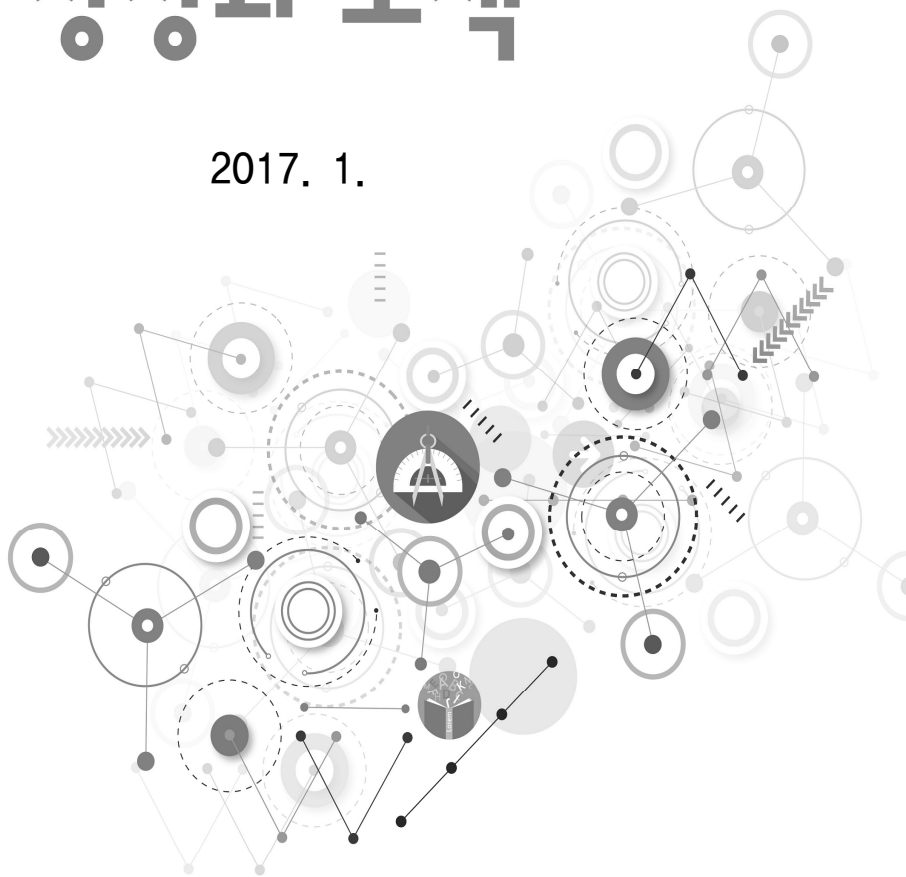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www.sen.go.kr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 기초연구보고서

서울미래교육의 상상과 모색

2017. 1.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



격려사

「서울미래교육의 상상과 모색」으로 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의 첫 발을 떼며

2016년 여름은 폭염이 맹위를 떨친 계절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던 날 「서울미래교육의 상상과 모색」을 위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 위원들의 노력으로 「서울미래교육의 상상과 모색」이라는 기초연구보고서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혁신미래교육이라는 지향 아래 다양한 교육 개혁과 학교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인공지능시대에 조응하고 지구촌시대라는 현실 인식 아래 그간의 혁신 교육과 학교 개혁의 노력을 어떻게 확장, 심화, 풍부화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서울교육가족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는 뜨거운 8월부터 겨울 문턱인 12월까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고민하였습니다.

첫째, 서울학생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을 탐색하고,
둘째, 이를 지원할 미래교육체제의 밑그림을 구상하며,
셋째, 미래교육에 대비할 교육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이 보고서는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의 연구와 저를 포함한 우리교육청
식구들이 참여한 내·외부 토론, 그리고 각계에서 있었던 여러 관련 미래
교육포럼에서 함께 논의하며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미래교육의 상상과 모색을 넘어 서울교육가족 모두가 참여
하는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4차 산업
혁명시대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상상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며 만들어가는 활동
입니다. 이는 ‘열린 질문’에 학교와 교육청의 각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미래교육의 상상과 모색」이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의 마중물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그 동안 서울미래교육의 큰 밑그림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1.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발 간 사

서울미래교육의 담론을 모아

2016년 3월 알파고 충격 이후 미래교육은 교육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도 미래예측에 근거하여 한 세대 앞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인 ‘교육비전 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8월에 실무협의체 성격의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대에 학교체제 변화, 새로운 교육방법 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울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인공지능을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서울미래교육의 큰 그림을 상상해 보고 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미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측면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35명의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 위원들이 협업을 통해 집단 지성의 힘으로 끌어낸 담론적 결과물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럼, 토론, 자문 등에 참여하여 서울미래교육 방향성 설정과 이를 구체화하는 미래의 학력과 인성 탐색, 서울미래교육체제 변화 모색, 미래교육 의제 발굴 및 세부 정책과제 제안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학교, 교육청, 교육공동체가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장기적인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의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1.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 위원장
인현고등학교장 이 혜 련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문제 3
3.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 3
4. 서울교육의 과제 5

II

서울학생 미래역량

1. 역량이란? 11
2. 교육도시 서울의 미래 21
3. 서울학생 미래역량 제안 28
4. 미래역량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38
5. 미래역량 정책과제 제안 48

III

서울미래교육체제 구상

1. 서울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체제 구상 53
2. 미래지향적 교육청의 역할 65
3. 학교-마을 연계 구상 80
4. 미래교육체제 정책과제 제안 87

IV

미래교육의제

1. 국가교육과정	92
2. 평생학습 체제	98
3. 학교 체제	104
4. 일반고 중심의 평등한 고교체제	110
5. 대학입시제도	116
6.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구현	125
7. 국가수준 교육 거버넌스	130
8. 교원 인사제도	137

[참고 문헌]	142
---------------	-----

[특별기고]	149
--------------	-----

- 교육불평등과 ‘정의로운 차등’: ‘성공’한 ‘추격산업화’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평등 정책 151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 미래교육 글로벌 트렌드 분석 178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전략특임팀 팀장
- 미래변화와 유아교육 189
양애경 한서대학교 교수
-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의 변화 방향 199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 변화하는 미래와 학교의 역할 211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래’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말이다. 지난 3월 ‘알파고 충격’은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미래에 대한 설렘보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준비한다면 ‘불안한 미래’는 ‘행복한 미래’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 초연결 시대이다. 이의 연장선인 미래사회는 스마트 도시화, 인간형 로봇의 발달, 지구촌·다원화 사회, 100세 시대 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양극화, 환경 문제 심화, 저출산·초고령화 등도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우리의 학교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처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교육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을 전망하고 우리 서울교육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미래역량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미래역량 신장을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구상하고자 한다. 아울러 긴 호흡으로 미래교육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함께 사유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사회에 필요한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은 무엇인가?

둘째,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서울미래교육체제 구상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제는 무엇인가?

3.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

교육은 본래 미래지향적이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은 미래 세대가 일구어갈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가꾸어 가는 과정이다. 이제까지의 교육 역시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가 주요한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게 된 데에는 ‘알파고 현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가 ‘현실감 있는 미래’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50%를 상회하는 비정규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환경생태 등도 미래세대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미래사회이다.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와 함께 현실에서 이어지는 미래가 보다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의 변화가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인간 복제 등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도록 요구하는 시대이다. 인공지능으로 대별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의 범위와 위계, 고용의 안정성, 시간 활용 등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버스 승무원과 톨게이트 수납원이 사라진 것처럼 자율운행차량에서 인간은 운전 대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과학기술이 이끌어낸 변화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구축하고 그 안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며 서로 간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다. 클라우드 슈밥은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네 가지 능력을 제시한다. ‘상황 맥락(contextual) 지능(정신)’, ‘정서(emotional) 지능(마음)’, ‘영감(inspired) 지능(영혼)’, ‘신체(physical) 지능(몸)’이 바로 그것이다. “자동화와 로봇으로 인한 직업의 지형도, 대학과 학습 등 교육 시스템, 로봇시대가 직면하게 될 도덕적 딜레마, 새로운 감정적 관계의 대상, 외부에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기억과 기능의 범위 등”이 피할 수 없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과제이다(구본권, 2015). 이에 대비하기 위해 최적화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구조화된 저출산 문제로 2010년에 5천만 명을 넘어선 인구는 2020년 4천9백만 여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50년 4천2백만 명대까지 감소한다고 예측된다. 이에 반해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93억 명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감소와 노동력 필요에 의한 외국 노동자 인력의 증가가 불가피해지고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기대 수명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9월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2050년에 87.4년까지 늘어난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2017년에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14% 이상), 2026년에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생학습시대에 맞는 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인생 이모작 사업 등을 본격적



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30년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

주형미 외(2016) 연구는 2030년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을 ‘① 인구구조의 변화, ② 지식기반사회의 심화, ③ 과학·정보기술의 발달, ④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 ⑤ 환경 문제 및 자원 부족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⑥ 생활 방식, 가치관 등의 다양화’의 여섯 개로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에 미칠 영향과 역할, 필요한 대응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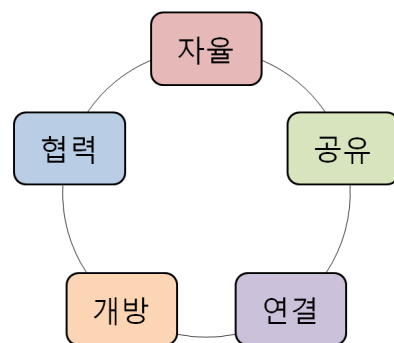
현재 한국 교육은 입시 대비를 위한 암기식 지식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력과 업종 간의 사회적 격차와 차별이 낳은 대학서열체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력을 기르는 교육이 학생들을 ‘공부기계’로 만들고 있다. ‘기계의 인간화’가 출현한 시기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간의 기계화’ 교육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아이들을 기계처럼 공부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없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인간적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간이 되고 있는’ 기계와 ‘기계가 되도록 닦달하고 있는 교육’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이다(조희연, 2016).

4. 서울교육의 과제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여, 서울교육은 미래교육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바탕으로 풍부화된 혁신교육이자 ‘미래’적 조건에 맞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미래교육’을 서울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서울교육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미래교육은 혁신미래교육에서 추구해온 자율, 협력 등의 가치와 미래교육에서 강조되는 개방, 연결, 공유 등을 중심으로 핵심가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자율: 개인 또는 공동체가 타인의 구속 없이 스스로 세운 원칙에 따라 학습하고 일할 때, 개인의 잠재력 발현과 공동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 협력: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서로 도와 힘을 합할 때, 개인의 미래역량이 풍부해지고 활성화되며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림 1-1]
서울미래교육의 핵심가치



- 개방: 제한을 풀어 자유롭게 드나들며 소통하고 참여할 때, 개인의 책무성과 조직의 공공선을 고양하여 열린 교육 생태계를 지향할 수 있다.
- 연결: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끼리 관계를 맺을 때,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과 조직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추동할 수 있다.
- 공유: 다중이 물리적 실체 또는 정신적 가치를 공동으로 소유할 때,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여 모두의 학습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미래사회는 새로운 학력관을 필요로 한다. 교과기반 교육과정의 학력관은 지식을 중시해 왔으나 급변하는 사회대응을 위해 지식 습득 뿐 아니라 지식의 종합능력, 활용능력, 상상력을 촉발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역량기반교육이 필요하다.

서울학생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주체적인 삶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적 성장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갖게 되는 역량인 ‘미래학력’과 인격적 성장 과정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인 ‘미래인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입시용 지식을 중심으로 한 학력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 산업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재능과 자질이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함양된 학력,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읽고 인류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인성적 가치가 결합된 지적 능력으로서의 학력이 필요하다. ‘미래학력’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암기식 교육과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는 교육, 감성과 인성이 결합된 학력이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과적 지식을 넘어서서 인류의 삶에 관계된 모든 다양한 지식과 가치로 역량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미래인성은 협력적 인성, 공유적 인성, 공동체적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성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산업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가 ‘독점에 기초한 영리추구의 원리’ 위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공유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가올 인공지능시대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집단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협력적 미덕을 갖는 인성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적 인성과 공감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인공지능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커진 창의적 교육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능력은 기계가 갖지 못한 감성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인문학적 상상력, 문화예술적 감수성, 협력적 인성, 감성능력¹⁾ 등을 포함한 창의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표방하여 왔다.

교육비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혁신미래교육은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의미한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은 경쟁, 서열, 성과 위주의 교육보다는 자율과 창의성을 기르는 민주적인 교육, 협력의 원리에 기초한 지성·감성·인성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교육,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교육을 지향한다.

서울미래교육은 이러한 혁신미래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역량을 기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혁신의 과제는 여전히 엄존하고 있고, 맹목적인 입시경쟁교육의 폐해는 서울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지성·감성·인성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및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함양”을 본격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하지만 낡은 세계와의 결별과 다가올 미래와의 만남이 동시대적인 과제인 시대에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는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 자율운영 체제를 본격화하여 학교교육 혁신의 기반을 강화하고, 마을(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바람직한 미래교육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교복입은시민프로젝트, 학부모회 법제화를 제도적 기반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체제를 통해 학교를 학습과 교육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은 지식 중심 교육에서 삶을 가꾸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아이들에게 미래사회에 필요한 더불어 살아가는 협력적 인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위해서도 유효한 학습의 장이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를 할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미래교육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체제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에 대한 질문과 토론, 대안을 함께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드는 서울미래교육은 실현될 것이다.

1) 구본권(2016)에 따르면, 인간이 기계와 구별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 의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사람이 지닌 결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II

서울학생 미래역량



II 서울학생 미래역량

21세기 서울학생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은 무엇일까?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시대 등의 과학기술의 발달,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문화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21세기 서울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며, 이것이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더불어 해법 찾기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역량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앞으로 서울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서울의 모습을 그려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서울학생 미래역량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미래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방안에 대하여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미래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을 그려볼 수 있는 밑돌을 놓았다. 하지만 이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앞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서울학생 미래역량의 적합성 검증 및 유·초·중·고 학교급별 체계화, 이에 따른 미래역량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 및 발달 단계별 역량요소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1. 역량이란?

가. 새로운 학력의 필요성

미래사회의 변화는 교육의 내용과 환경, 교육의 방법에 이르는 교육의 제 영역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바람직한 성장이다. 잘 성장한 인간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그 자신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험을 재구성한다. 또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이 때 학습해야 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통적인 교육은 지식 그 자체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그 형태는 ‘교과’로 조직되었고, 학교교육에서는 교과가 교육받은 사람을 형성하는 틀로 간주되었다. 학습해야 할 것을 정선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잘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교과가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은 사회적 선발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취급된 것은 시험이라는 절차였다. 선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험은 보다 객관적이며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 요청되었다. 결과적으로 시험을 위한 공부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학습자들은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 ‘무엇을 아는가’를 중심으로 지식의 속성에 접근하였다. 전통적인 교육이 체계화된 지식을 단순 전달하는 방식에 집중하게 된 데에는 이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21세기 사회에서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과에 담아 전수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래사회에서 지식은 목적이 아닌 문제해결의 수단이며, 지식의 습득 및 축적과 더불어 지식의 종합능력, 활용능력,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 촉발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학생 누구나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이다. 세계 각국은 학생들에게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울러 역량의 개념에 접근함에 있어 미래사회의 변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초고령 사회의 도래²⁾ 등은 경제와 복지의 문제, 개인과 국가의 역할을 포함하여 역량의 개념에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상식 외(2015)는 새로운 학력관 정립을 위하여 탈교과적 일반 능력으로서 역량 개발 교육, 학습모형으로서 비선형적 학습, 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전통적인 학력관과 새로운 학력관은 교육관과 교육과정에서 상이한 측면들을 보인다. 새로운 학력관에 담겨있는 지식의 속성에 대한 논의는 ‘역량’의 근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초이다. 전통적인 학력관과 새로운 학력관을 비교해 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학력관의 비교(최용환, 2015.)

구분	이전 학력관	새로운 학력관
교육관	계통적인 지식·기능(유일성)	목적적인 지식·기능(다양성)
	계획적인 주입·습득(성과비교)	각 주체가 획득·구조화(성과비교 불가)
	교사가 교육을 주도	교사는 학습을 지원
교육과정	교과기반 교육과정	역량기반 교육과정

2)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경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구성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나. 역량의 개념

‘역량(competency)’이란 본래 직업 교육이나 훈련 분야, 혹은 성인 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역량에 대한 관심은 OECD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핵심역량이나 교육성과지표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학문적 논의에 역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초기 연구자인 화이트(1959)는 역량의 개념을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규정하며, 역량을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 것으로, 성숙이나 욕망, 본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유기체를 둘러싼 환경을 다루기 위한 선택적이고, 지속적이며, 유목적적인 동기적 특성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맥클리랜드(1973)는 전통적인 지능검사나 적성검사가 학교 성적 등과 같은 교육의 성과에 대한 예측력은 뛰어나지만 정작 요구되는 직무성과나 인생에서의 성공 여부와 같은 사회적 성과에 대한 예측력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어떤 사람의 능력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지필검사를 통해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평가도구가 타당하려면 실제 수행 과정에서 개인들의 능력, 즉 역량을 측정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스펜서·스펜서(1993)는 역량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별개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윤정일, 2007: 239). 스펜서·스펜서는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을 야기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으로 정의하고, 내재적 특성으로서의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는 개인의 행동 및 사고방식’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차원으로 동기(motives), 특질(traits), 자기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을 들고 있다. 스펜서·스펜서는 지식과 기술을 수행으로 드러내기 쉬운 ‘표층적 역량’으로, 개인의 동기나 특질, 자아개념 등을 ‘심층적 역량’으로 바라보고, 심층적 측면이 표층적인 측면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의 동력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식과 기술은 표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하며, 훈련이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동기나 특질 역량은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격의 심층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발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즉 지식과 기술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개발, 육성이 가능하나, 동기와 특질은 인간 내면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Spencer&Spencer의 정의는 수행으로 드러나는 역량의 측면을 심층적인 부분과 관련시켜 이해함으로써 인지적 측면만 중시하던 과거 인간 능력에 대한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 정의적 측면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능력으로서 역량을 보았다는 점에서 인간 능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소경희, 2007).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역량기반교육(Competence-based Education)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적이고 생산성 높은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적 결속과 시민성 증진을 위한 교육체제 마련을 원하는 사회통합의 요구, 마지막으로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 가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지식의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마인드, 습관 및 지식을 활용한 실천적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식기반사회 도래 등으로 인하여 역량기반교육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역량기반교육(Competence-based Education)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중심의 인간을 길러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외부 요구에 기반하여 교육의 목표를 세움으로써 교육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재적 가치들이 소홀해 질 수 있으며, 둘째, 역량을 가시적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개념, 특질, 동기, 가치,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행 이면에 존재하는 가치, 동기, 특징 등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만 추론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송경오, 2007).

이에 따라 또 다른 시각으로 역량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제학자 센(1979)은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Equality of what?)’라는 논문에서 현대 주류 경제학이 공리주의의 효용만을 따지는 것을 비판하고, 경제학이 본래 가졌던 윤리학적 기원의 회복을 역설하며, 발전이란 자본의 축적으로만 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역량(capability)의 확대라고 보는 대안적 발전론인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제안하였다(정운경, 2015). 센은 역량 접근법과 관련하여 교육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기능과 역량, 개인의 자유와 행위 능력을 강조한 역량 접근법은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센의 역량 접근법은 첫째, 인간을 능동적 행위 주체로 바라보아 궁극적으로 교육이 개인을 능동적 행위 주체로 성장시켜 잠재가능성과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교육은 도구



적 역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잠재가능성 확대를 위해 중요한 것이며, 셋째, 소득이나 재화의 크기로 복지를 재는 기존의 발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능과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복지를 평가하자고 제안한다.

역량 접근법과 관련하여 누스바움(2015)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는 역량 접근법에 단단히 기초한 도덕적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정의의 관점으로 오늘날의 세계를 들여다보았을 때,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적 삶의 기회부터 불평등하다고 보았다.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간단한 사실 자체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뿌리 깊은 사회적 부정의와 불평등, 특히 차별이나 소외의 결과인 역량 실패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사람의 역량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와 공공정책의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결국, 바람직한 역량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개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열거하는 것을 넘어 개인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이는 ‘정의로운 차등’과 부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competency와 capability의 개념적 차이를 정리하여 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competency와 capability의 개념 차이(유성상, 2015)

	개념 및 특성	관련 질문
compet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로 기능하는지 혹은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상태 • 개인적인 수준의 지식과 기술, 노하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cap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진되거나 개발될 수 있는 특성, 능력, 혹은 과정을 통칭하는 말 • 소위 개인의 역량이 적용되거나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협력적 과정을 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어떻게 해 낼 수 있는가? • 필요한 개인의 역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다. 서울미래역량 정의를 위한 국내외 역량 고찰

1) 국외 역량 사례

가) OECD 핵심역량

서울미래역량 정의를 위한 국외 사례 중, 먼저 2003년 OECD에서 만든 핵심역량 정의 및 선정 프로젝트(DeSeCo Project)를 꼽을 수 있다. DeSeCo 프로젝트에 따르면, 핵심역량을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태도,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 실천적 기술을 가동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핵심역량 선정 조건으로 사회와 개인에게 가치 있는 것,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의 중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 특정 영역이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이 중시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을 꼽았다(PISA, 2003). DeSeCo 프로젝트 핵심역량의 세 가지 범주는 <표 II-3>과 같다.

〈표 II-3〉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PISA, 2003)

핵심역량	이유	측면
① 도구를 상호 교류적으로 사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 기술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필요성 자신의 목적에 도구를 적용할 필요성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성 	A. 언어와 기호(symbol) 텍스트를 상호 교류적으로 사용한다. B. 지식과 정보를 상호 교류하여 사용한다. C.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사용한다.
② 이질집단에서 상호 교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적 사회에서 다양한 것을 취급할 필요성 공감의 중요성 사회자본의 중요성 	A.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B. 팀을 짜서 협동하며 일한다. C. 충돌을 관리하고 해결한다.
③ 자율적으로 행동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 권리를 실행하고 책임을 질 필요성 자신의 환경과 그 기능을 이해할 필요성 	A. 커다란 상황 안에서 행동한다. B. 인생 설계와 개인적 계획을 짜고 실행한다. C. 권리와 이해, 경계, 필요성을 지키고 주장한다.



나) 유네스코 학습영역 및 학습지표

유네스코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영역인 학습영역을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가 21세기 교육의 화두를 평생교육으로 두고 발간한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에서 언급한 4가지 학습 지표인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과 맥을 같이 한다.

‘알기 위한 학습’은 일반적인 지식과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평생 동안 배움을 위한 학습을 강조한다. ‘행동하기 위한 학습’은 직업적 기능의 신장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과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이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은 타인과 상호의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계발하여 다원주의, 상호이해 및 평화적 측면에서 우리의 갈등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학습이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은 인간이 자신의 개성을 계발하고, 자율성, 판단과 개인적 책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이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이는 유네스코 3가지 학습영역과 일치하는데, 인지적 영역은 ‘알기 위한 학습’과, 사회·정서적 영역은 ‘존재하기 위한 학습’ 및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과, 행동적 영역은 ‘행동하기 위한 학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4〉 유네스코 학습영역과 학습지표 관계

학습영역		학습지표	
영역	내용	역량	기대효과
인지적 영역	세계와 그 복잡성, 세계의 상호 연계성 및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사고 기능	알기 위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사고 - 분석적 질문 및 비판적 사고 - 문제해결능력 - 미래지향적 사고 - 변화수용능력 - 학문간 전 접근법에 대한 이해
사회·정서적 영역	가치와 태도, 사회적 기능을 의미. 이 중 가치와 태도는 정서적 영역에 해당하며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영역에 해당	존재를 위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감 - 자기표출과 대화능력 - 가치 확립 - 스트레스 대응능력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 있는 행동 - 타인에 대한 존중감 - 이해관계의 파악
행동적 영역	행위, 수행, 실천 및 참여, 즉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는 영역	행동을 위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기 - 불확실한 상황의 의사결정과정 - 책임감 - 위기대응능력 - 자아존중감 - 학습의 실생활 응용도

출처: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한국판 해제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평화와 협력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 2015 세계교육회의 의제 형성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다) 각국의 핵심역량

유네스코는 “양질의 교육 시스템은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조정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새로운 역량을 습득하고 개발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핵심 스킬, 내용지식, 인지기능, 소프트 스킬에서부터 직무스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우리는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여 특정한 맥락에서 복잡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거나, 복잡한 활동 또는 과업을 성공적이거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역량의 분류체계와 접근법은 국가, 조직, 개인 등 그것을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에 대해서는 점차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핵심역량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도식화되고 있는지 <표 II-5>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II-5> 각국의 핵심역량(찰스파델 외, 2016)

UK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스킬: 의사소통, 개인 및 대인 관계스킬, 정보 관리	다섯 가지 기초 스킬: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자신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 디지털 도구 사용 능력, 독해 능력, 산술 능력	세 가지 역량: 학습 및 혁신 역량, 정보, 미디어, 기술 역량, 진로 설계와 생활 역량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10가지 사고력: 문해력, 사고스킬, 창의력, 자기관리, 팀워크, 이중문화 이해, 윤리적 행동 및 사회적 역량, 산술 능력, 정보통신 능력	다섯 가지 핵심 역량: 언어·상징·글 사용 역량, 자기 관리 역량, 타인 공감 역량, 참여 및 기여 역량, 사고 역량	국가 시험 평가 항목: 지성, 지식, 성품, 고결한 인성, 독립적 생활 스킬, 지속학습 스킬
싱가포르	스코틀랜드	캐나다 앨버타주
핵심스킬 및 가치: 의사소통 스킬, 인성개발, 자기관리 스킬, 사회적 및 협력적 스킬, 사고 스킬 및 창의력, 문해력 및 산술 능력, 정보 스킬, 지식 응용 스킬	네 가지 목표와 스킬 추구: 성공적인 학습자, 자신감 있는 개인, 책임 있는 시민, 효과적인 기여자, 문해력, 건강과 행복, 학습·삶의 관련 스킬, 산술 능력	학습하는 방법을 아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복잡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능력, 정보 관리 능력, 혁신 능력,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 다양한 리더러시를 적용하는 능력, 타인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협력하는 능력, 글로벌적 문화적인 이해 능력, 직업 및 생애 능력을 규명하고 적용하는 능력



2) 국내 역량 사례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처음 도입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이 드러내야 할 능력, 학교 학습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정보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을 활용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을 일반 역량과 교과 역량의 차원으로 나누고, 일반 역량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은 교과 역량을 아우르며 조절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며, 일반 역량은 교과 역량이 제대로 계발되어야 발달될 수 있으므로 일반 역량과 교과 역량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핵심역량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폭 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6가지로 정리하였다. 각 핵심역량별 하위 요소는 <표 II-6>과 같다(온정덕 외, 2015).

〈표 II-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별 하위 요소

핵심역량	하위 요소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 확립, 자신감 획득, 자기 통제 및 절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자신의 감정 조절, 건강 관리, 기초학습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진로개발 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여가 선용
지식정보처리 역량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지식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핵심역량	하위 요소
창의적 사고 역량	인지적 측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정의적 측면: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의미 있고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사고 능력으로서의] 융합적 사고
심미적 감성 역량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문화적 상상력, 타인의 경험 및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 정서적 안정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 향유
의사소통 역량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 능력(말하기, 듣기/경청, 쓰기, 읽기, 텍스트 이해 등),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갈등 조정 능력
공동체 역량	시민의식, 준법정신, 질서의식, 공정성과 정의감, 참여와 책임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학생 역량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그동안 ‘무엇을 아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교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하는 수행역량을 기르게 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한 핵심역량을 서울의 특성에 맞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2016년 서울학생 역량기준을 제시하였다. 서울학생 역량기준은 지성을 기르는 인지 역량, 감성과 건강을 키우는 사회·정서 역량,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참여·자치 역량 등 3가지 역량 범주와 각각의 하위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표 II-7〉 서울학생 역량기준과 요소(이민철 외, 2015)

서울학생 역량기준	요소
지성을 기르는 인지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현상과 지식 및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 텍스트 이해 및 해석을 통해 자신의 삶과 연계하는 태도 -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적 능력 - 기존의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 인류의 문화유산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 알고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잘 설명하는 능력
감성과 건강을 키우는 사회·정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현상이나 예술적 산물에 대한 심미적 감수성 -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문화예술적 능력 -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개념을 이해하고 유지하는 능력 - 신체 활동을 통하여 놀이, 학습, 일에 참여하는 능력 - 각종 미디어의 오용이나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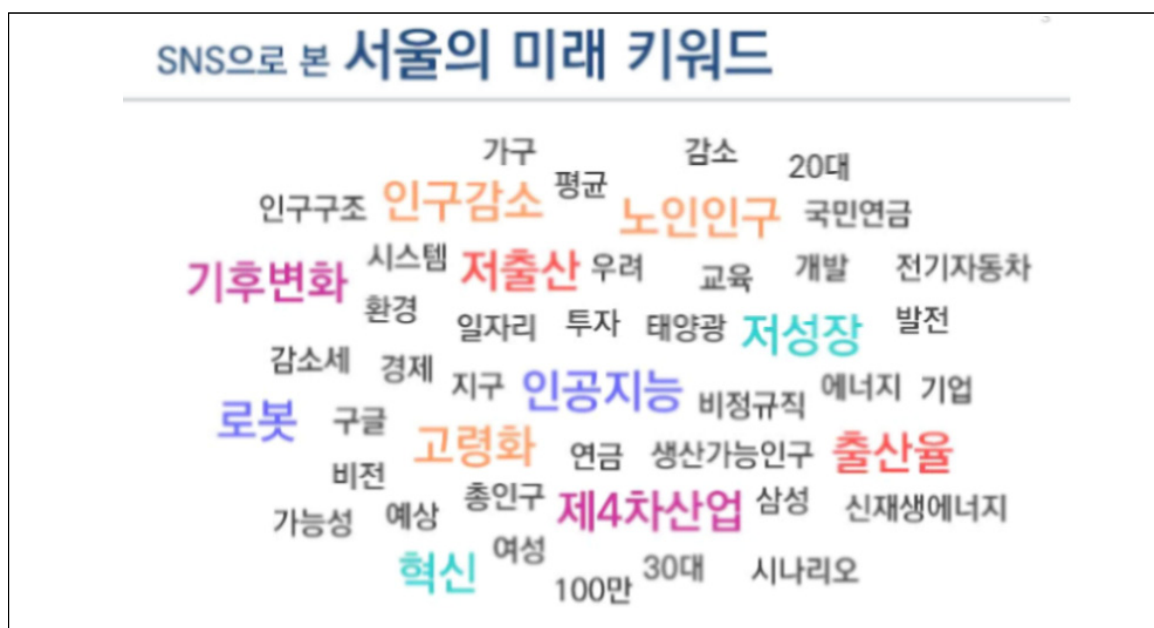


서울학생 역량기준	요소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참여·자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 -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 -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려는 태도 - 정의와 비차별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참여·행동하는 태도 - 생태, 평화, 인권에 대한 윤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하려는 태도 -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과 공감하고 교류하는 태도

2. 교육도시 서울의 미래

가. 문제의식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을 교육 속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내일을 살아갈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현재 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미래의 서울의 모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서울연구원은 개원 24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최근 6개월(2016.3~2016.9) 동안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2040, 향후 미래, 전망’이라는 이슈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서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 키워드는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 키워드(서울연구원, 2016)

1) 저출산, 고령화 사회

키워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서울의 미래모습의 특징은 인구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 인구감소, 노인인구’ 등이 그것이다. 위 자료에 의하면 2040년 미래 서울은 96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구절벽의 도시가 된다고 한다. 인구 총량에서는 1980년대 초반과 유사하지만, 생산가능 인구가 2040년까지 매년 30만 명씩 줄어들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30.4%를 차지하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교육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아니,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상황으로 여러 부분에 걸쳐 다각적인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제4차 산업혁명

또 다른 변화의 한 가지는 앞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기기와 인간, 물리적 환경의 융합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 제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미래사회의 혁신적인 변화이다. 세계적인 IT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인공지능을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 생각하고, 수년 전부터 기업의 역량을 총동원해왔다.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이 변화는 분명 인간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자 최윤식(2016)에 의하면 인공지능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첫째, 인공지능이 일할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한다. 복잡한 3D영역이나 완전히 창의적인 영역이다. 둘째, 인공지능을 관리 및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지식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 셋째, 인공지능과 함께 협업하는 곳에서 일을 한다. 넷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창의적인 일을 한다. 다섯째,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을 한다.

미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수많은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예견되는 미래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3) 교육 불평등의 심화

통계청의 2015년 서울의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국평균인 68.8%보다 높은 74.3%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29.6만원, 중학생이 35.5만원, 고등학생이 38.3만원이다.

교육이 계층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했던 것은 오랜 과거가 되었다. 유치원부터 시작된 출발선 격차는 초등교육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중·고등으로 이어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부모의 재력이 곧 학생의 교육력이 되고, 이것이 유리한 사회진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초기산업화시대에 가능했던 교육이 계층 상승의 기회로 통하였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는 교육감 조희연(2016)의 ‘교육 불평등과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글에서도 나타나 있다. 추격산업화의 성공적 진행에 따라 역설적으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어왔으며, 교육 불평등은 계급·계층적 격차를 세대 간에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 과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21세기의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간이 하던 많은 일을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하게 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신경제의 혜택은 주로 상위 소수의 엘리트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화와 승자독식의 경제로 인해 미래에는 부의 편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다문화 사회의 도래

우리 민족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말이 단일민족, 인종순혈주의이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색하게 되었다. 각종 매체를 통해 다인종을 접하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세계화, 국경 없는 사회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모두 5107만 명이다. 이 중 귀화 등의 방법으로 이룬 다문화가구는 29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10년 96만 명에서 2015년 136만 명으로 41.6%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바야흐로 외국인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또한,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50년 경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21.3%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차윤경, 2014).

서울특별시의 초·중·고 다문화학생의 증가 추이(2013~2015)는 <표 II-8>과 같다.

〈표 II-8〉 초·중·고 다문화학생의 증가 추이(2013~2015)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초등학교	469,459	6,245	1.33%	457,591	7,059	1.54%	450,759	8,619	1.91%
중학교	307,145	1,670	0.54%	289,702	1,845	0.64%	266,344	2,077	0.78%
고등학교	334,406	812	0.24%	320,705	1,117	0.35%	308,629	1,194	0.39%
합	1,111,010	8,727	0.79%	1,067,998	10,021	0.94%	1,025,732	11,890	1.16%

출처 : 2015 서울교육통계

이는 전국 통계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적별 다문화학생 현황을 보면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남부아시아, 미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학생들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들은 비단 서울만의 변화 방향이 아니다. 여러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 주형미 외(2016) 연구에 따르면, 2030년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을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표 II-9〉 2030년 한국 사회의 변화 추세(주형미 외, 2016)

(1) 인구구조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족, 한 부모 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 -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령기 인구가 감소됨 - 고령 인구의 증가, 외국 인구의 유입 등으로 인구 구성 비율이 변화함
(2) 지식 기반 사회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서 사회·문화·정치적 요인과 관련한 네트워크 사회가 구축됨 - 정보와 지식이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됨
(3) 과학·정보 기술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교류 속도가 증가함 -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의식주의 형태 및 양상이 변화함 -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나 상호 교류의 대상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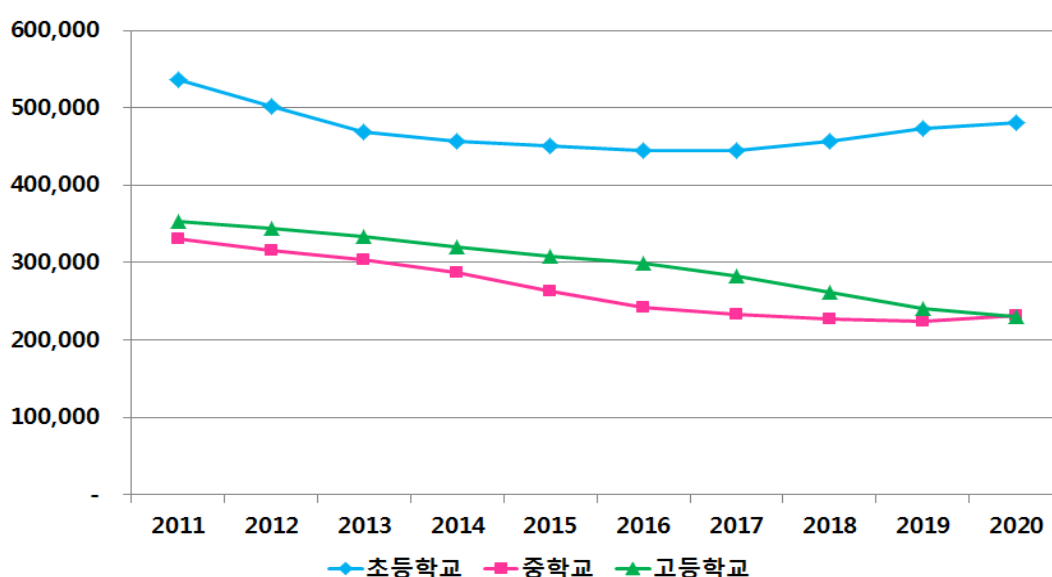
(4)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시대 진입으로 인한 취업률이 낮아짐 -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 - 원격 근무, 계약 근무제 등 직업 형태가 다양화됨 - 다국적 기업, 노동력 이동 등 노동 시장의 세계화됨 - 창의적 노동, 문화예술의 산업화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군 및 인력 수요가 변화함
(5) 환경 문제 및 자원 부족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을 보호하고 공생하는 방향으로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을 추구함 - 환경문제 및 자원의 고갈 등 인류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지구촌 공동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확대됨
(6) 생활 방식, 가치관 등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개인의 생활 모습과 가치관이 다양화됨 - 건강, 문화,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나. 미래교육의 방향

1) 학생 중심의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출산율 감소는 우리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요소인 학령인구감소와 직결된다.

서울교육통계(2015)로 살펴본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교급별 학생 수 변화 추이(~2020년)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황금돼지띠('07년생), 백호랑이띠('10년생), 흑룡띠('12년생)에 따라 소폭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2] 학교급별 학생 수 변화 추이(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학생 수 감소는 적정규모의 학교, 적정규모의 학급당 학생 수, 교사수급, 학생교육 방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 후속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대규모 학급운영상 불가피했던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소규모 학급에서 학생 중심의 개별화 수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는 비단 소규모 학교 뿐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른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학생주도 개인별 맞춤 학습과 개인의 강점에 기반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아동은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은 고유의 학습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몫이다.

2)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교교육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달은 학교교육의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경험의 방식이 바뀔 것이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자원공유의 형식과 규모가 바뀔 것이며, 각종 빅데이터를 이용한 학생지도 방법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학습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김진숙, 2016).

앨빈 토플러는 10여 년 전에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이만열, 2016). 또한 2001년 한국 정부의 의뢰로 제출한 보고서 <위기를 넘어서 : 21세기 한국의 비전>에서도 아래처럼 교육 개혁을 강조하였다.

21세기 교육시스템은 학생들이 어느 곳에서나 혁신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길러줘야 한다. 한국 교육체계의 변화는 ‘교육공장’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시간과 장소에 이르기까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더불어 앨빈 토플러의 이러한 진단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아니 되며, 앞으로의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지식이 아닌 격변할 미래사회 50-60년을 살아갈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지식·정보의 홍수에 대응해 핵심원리·핵심개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 맞는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학교의 형태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학교 공간은 산업혁명시대의 공장형 대량생산을 모델로 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발달로 학교의 공간을 빌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더 나아가 미래의 학교는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친교 하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이 주요 임무가 될지도 모른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교육 불평등 완화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더욱 격차가 벌어질 교육 불평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에 대한 답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인가? 아마도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것이다. 개인의 능력보다 그의 배경이 한 인간의 미래를 좌우하는 변수가 되는 사회에서는 교육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차등’의 다양한 정책들-평등예산제, 소규모학교에 대한 차등 지원, 고교체제의 서열화 완화, 일반고 전성시대 등-을 시도하고 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추격산업화의 부정적 산물로 존재하고 있는 수직적 서열화의 사회를 교육을 통해 수평적 다양화가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여러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 완화는 사회 불평등의 완화와 맥을 같이한다. 교육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불평등 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4) 다양성 존중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다인종 학생으로 하여금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배우도록 하여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동화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100만 명 시대에는 이러한 동화주의를 넘어서 다양성 인정과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문화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에서도 이는 잘 나타나있다.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지향하는 ‘다름을 재능으로,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화주의적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역시 현실이다.

사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들과 더불어 사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이해와 배려, 협력으로 공존

의 사회문화적 풍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구촌 시대,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과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공동체적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50년 경 한국 사회의 21.3%를 차지할 다문화가족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역량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다. 서울의 미래와 교육의 역할

인구 천만의 국제도시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종묘 등 조선의 궁궐과 유적들은 전통을 간직한 역사 도시 서울의 모습을 보여 주고, 홍대 주변의 젊음의 거리, DDP, 동대문 패션 상가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문화와 산업을 이끄는 최첨단 도시 서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는 곧 서울의 교육 자산이기도 하다.

사람 향기가 가득한 따뜻한 도시, 자연을 닮은 쾌적하고 편안한 녹색도시, 세계를 담는 활기찬 도시, 유구한 역사문화 도시를 추구하는 서울은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일류도시가 될 것이다. 서울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서울교육의 몫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3. 서울학생 미래역량 제안

가. 국내외 역량 분석

1절에서 외국의 역량(OECD 핵심역량, 유네스코 학습 영역)과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및 서울학생 역량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서울학생 미래역량과 관련하여 이것들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국내외 핵심역량과 우리나라 교육과정 분석하면 <표 II-10>과 같다.



〈표 II-10〉 국내외 핵심역량과 우리나라 교육과정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OECD 핵심역량 (PISA, 2003)	유네스코 학습 영역 (유네스코, 2015)	서울학생 역량기준 (서울특별시교 육청, 2015)
개성의 발달과 진로 개척, 새로 운 발상과 도전 으로 창의성을 발휘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도구의 상호작용적 이용 언어나 상징, 텍스트, 지 식과 정보 및 기술을 상 호작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인지적 영역 세계와 그 상호 연 계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력	지성을 기르는 인지 역량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 이 해로 품격 있는 삶 추구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이질 집단에서의 상호교 류 능력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 계를 맺고 협동하며 갈 들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사회·정서적 영역 차이와 다양성에 대 한 존중, 연대 및 공 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한 인류애	감성과 건강을 키우는 사회·정 서 역량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 공동체 발전체 참여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적 역량	자율적 행동 능력 큰 그림 안에서 행동할 수 있으며 생애 계획과 개인적 프로젝트를 만들 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권리와 흥미, 한계와 필요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행동적 영역 더 평화롭고 지속가 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 고 책임감 있는 행 동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참여· 자치 역량

위의 표를 보면, OECD 핵심역량, 유네스코 학습 영역, 서울학생 역량기준 각각의 세 개의 범주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지만 서울미래역량의 개념과 관련하여 여러 시사점이 있다.

첫째, 역량을 3개의 큰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2009 개정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OECD의 핵심역량은 모두 유네스코 학습 영역 3가지 범주인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수렴된다. 셋째, 서울학생 역량기준은 유네스코 학습영역의 3가지 범주를 토대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서울미래역량 개념 정립 시 유네스코 학습 영역의 3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학습 영역은 학습자에 대해 보다 총체적(holistic)인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 OECD 핵심역량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학습에 대해 개인적이고 기

능적(functional)인 접근을 보인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미래의 교육은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미래역량은 유네스코 학습 영역 3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하되 학습자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지 역량’, ‘사회·정서 역량’, ‘자율적 행동 역량’으로 하고자 한다.

나. 서울학생 미래역량

1) 서울미래교육과 미래역량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서울중기발전계획은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교육의 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삶(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자율과 공존 및 협력의 교육으로써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따라서 서울미래교육은 서울미래역량을 기본으로 두고 생각하여야 한다.

서울미래교육은 세계사적 국면에 조응하고 21세기에 맞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다. 즉, 산업시대의 유물로 남아있는 암기식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이 마주할 21세기 새로운 ‘미래적 조건’에 맞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1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1세기에는 새로운 학력관이 필요하다. 교과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이전 학력관은 지식 획득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으로는 급변하는 21세기 사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지식의 습득과 축적보다는 지식의 종합 능력, 활용 능력, 상상력을 촉발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는 역량기반교육이 필요하다.

서울 학생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주체적인 삶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미래역량’이란 지성·감성·인성의 풍부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 능력과 의지를 포함하는 총합으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적 성장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갖게 되는 역량인 ‘미래학력’과 인격적 성장과정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인 ‘미래인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미래학력’이란 지적 성장과정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바탕이 되는 학습 역량, 주체적 사고 역량, 창의 능력 등의 총체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함으로써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통찰력을 발휘하여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미래인성’이란 인격적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을 이해하고 설득하며 공감하는 능력과 타인과 협력적 관계, 공동체적 감수성을 통해 사회적 인격을 갖추고 공동체적 세계시민을 지향하는 협력적·공유적 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성은 개인, 사회, 문화의 성향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전통적인 인성교육은 사회·문화적 필요를 반영하여 범주화하는 성향이 강하다.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성교육은 교육의 본질과 주체에 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는 인공지능의 지능화, 인간·기계 협력, 정보의 개방·공유·창출이 지금보다 더 가속화되면서 인간 삶의 질은 향상되는 반면, 양극화는 보다 심화될 것이다(김유리, 2016a).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의 교육적 과제를 토대로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속도와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미래인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교육의 본연의 가치,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의 변화,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글로벌, 다문화,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점, 실제 현장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미래역량의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서울미래역량 범주 설정 및 범주별 역량

앞서 서울미래역량은 유네스코 학습 영역 3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하되, 학습자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지 역량’, ‘사회·정서 역량’, ‘자율적 행동 역량’으로 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서울학생 역량기준의 ‘건강’과 ‘시민성’, ‘참여·자치 역량’은 3가지 범주에서 삭제하고 하위 역량 및 요소에 포함시켜 계열성을 맞추었다.

〈표 II-11〉 서울학생 역량기준과 서울미래역량의 범주 비교

서울학생 역량기준	서울미래역량
지성을 기르는 인지 역량	인지 역량
감성과 건강을 키우는 사회·정서 역량	사회·정서 역량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참여·자치 역량	자율적 행동 역량

이에 따라, 서울미래역량의 3가지 범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첫째, 인지 역량이란 학습역량과 창의 능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체적 사고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다.

둘째, 사회·정서 역량이란 사회적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며 협업능력을 발휘하는 사회적 역량과, 심미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능력을 포괄하는 정서적 역량을 말한다.

셋째, 자율적 행동 역량이란 신체지능과 자기관리역량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과 생애계획을 실천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참여·자치 역량과 다문화 역량을 포괄하는 역량이다.

3) 미래서울에 요구되는 서울미래역량

서울미래역량의 구체적 내용 도출은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사회 변화의 큰 틀에서 그려 보아야 한다. 따라서 2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 서울을 조망해보면서 이에 따라 요구되는 서울미래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³⁾

가) 인지 역량

2040년 미래 서울은 96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구절벽의 도시이다. 서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4%를 차지하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인해 서울은 마야흐로 인공지능 사회, 기술공간 복합체로 새로 구성된 스마트 도시가 된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은 고용 없는 성장 사회를 만드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로써 간문학적 융합기술은 더욱 발달하게 된다.

3) 이하 미래 서울에 대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세미나(2016).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서울연구원.’, ‘변미래 외(2012). 2030 서울의 미래. 서울연구원.’, ‘변미래 외(2015). 2045 서울미래보고서 01, 시민 참여형 미래서울 만들기. 서울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미래 서울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량이 요구된다.

〈표 II-12〉 미래 서울에 요구되는 서울미래역량: 인지 역량

미래 서울		교육에의 요구	요구되는 역량
저출산과 고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및 초고령화 - 65세 이상 인구 30.4% - 서울 인구 960만명 인구절벽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코칭, 자기주도적 학습 - 평생학습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처리 능력 - 학습 능력
제4차 산업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 사회 - 신기술의 발전 - 스마트 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체제의 유연화 - 가상현실을 이용한 학습 환경 - 지능형 학습로봇 개발 - 디지털 교과서(스마트러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사고력 - 문제 해결 능력 - 주체적 사고 역량
지식기반 사회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문학적, 융합기술 발달 - 학문간 융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학문적·범교과적·융합학문적 교육 - 고급융합기술 인력양성 - 통섭형 인재양성 - 학제간 통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력 - 창의 능력

위와 같이, 인지 역량에는 학습 능력, 주체적 사고 역량, 창의 능력이 속해 있다.

학습 능력은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일생동안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주어진 현상과 지식 및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더불어 인류의 문화유산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원을 획득, 생산,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주체적 사고 역량은 기존의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과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타인에게 잘 설명하는 능력, 텍스트 이해 및 해석을 통해 자신의 삶과 연계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창의 능력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적 능력과 집단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자연 및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 및 적용 능력을 뜻한다.

나) 사회·정서적 역량

2040년 미래 서울은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현재 아파트의 89%가 재건축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추진되어 주거환경의 양극화가 심화된다. 수많은 아파트의 노후시기가 일제히 도래하면서 물리적 환경 악화, 안전 문제,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세대 간 갈등과 사회적 갈등구조가 심화된다. 2040년 미래 서울에는 새로운 가족의 출현한다. 바로 1인 가구가 일반화된 원자화된 도시이다. 2035년이면 미래 서울의 1인 가구는 전체의 30.8%를 차지하여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 가구(23.6%)는 더 이상 표준화된 가족의 모습이 아니다. 미래 서울은 문화적 관계가 소멸되며 위험한 사회가 심화될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집단-은둔형 고령자, 적극적 중고령자, 자유로운 싱글, 소셜 부족-이 형성된다. 서울은 기후변화에 따라 점점 더워지고 있다. 2040년 평균기온은 3.4도가 올랐고, 열대야도 13.8일이 늘어났으며, 폭염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서울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량이 요구된다.

〈표 II-13〉 미래 서울에 요구되는 서울미래역량: 사회·정서 역량

미래 서울		교육에의 요구	요구되는 역량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환경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갈등 심화 - 교육 불평등 심화 - 사회적 갈등구조 - 공동체 의식 약화 - 환경 문제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계급 간 갈등 문제 해결 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중과 배려 - 공감과 소통 - 의사소통 역량
저출산과 고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일반화, 원자화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며 함께 하는 사회 요구 -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능력 - 갈등 조정 능력 - 협업 능력
생활방식·가치관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관계 소멸에 따른 위험사회 심화 -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주류로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소양교육 -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미적 감수성 - 문화 및 예술적 감수성 - 문화예술 역량

위와 같이, 사회·정서 역량에는 의사소통 역량, 협업 능력, 문화예술 역량이 속해 있다.

의사소통 역량은 타인을 존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 갈등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원만하게 대응하는 태도이다.

협업 능력은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고 과감한 협업을 시도할 수 있는 유연한 능



력과 더불어 감성 및 공감을 기반으로 팀을 조직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문화예술 역량은 문화예술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향유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문화예술적 능력, 자연 현상이나 예술적 산물에 대한 심미적 감수성을 뜻한다.

다) 자율적 행동 역량

2040년 미래 서울은 50대 젊은이, 60대 가구주의 세상이다. 서울의 중위연령은 52세가 되었고, 65세 이상 가구주는 전체의 38.3%나 된다. 미래 서울은 격차가 더 심해지고 불공정이 심해지며, 산업구조 양극화와 저성장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도시는 점점 노후화 및 광역화가 되고 그 결과 도시 재생, 지역 분권, 마을 만들기 등의 정책 의제가 새로이 부상한다. 서울은 다핵 기능 중심구조로 변화되어 자립적인 커뮤니티 기반이 강화되고, 서울 내에 다양한 경제적·문화적 활동 중심지가 분화되며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미래 서울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량이 요구된다.

〈표 II-14〉 미래 서울에 요구되는 서울미래역량: 자율적 행동 역량

미래 서울		교육에의 요구	요구되는 역량
저출산과 고령화	- 50대 젊은이와 60대 가구주 - 중위연령 52세	-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 건강 및 안전교육	- 삶의 향유 능력 -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자아상 - 신체 지능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 격차 및 불공정의 심화 - 산업구조 양극화 - 저성장	- 격차해소교육 - 삶과 교육문화의 연계 - 학교학습과 직업 간 연계성 강화 - 평생 직업능력 개발	-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 - 직업 능력 - 자기관리 역량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 도시의 노후화 및 광역화 - 다핵 기능 중심구조로의 변화	- 도시 재생 문제,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사회참여교육	- 민주시민의식 - 참여의 태도 - 민주적 실천 능력 - 참여·자치 역량
다문화 사회의 도래	- 사회다원화 - 인구의 국제 이동 - 다문화 및 이중문화 - 서울의 세계화·광역화	- 교육대상자의 다원화 (다문화가정 학생 보편화) - 다문화교육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 공동체 의식 - 열린 자세로 세상을 수용 - 다문화 역량

위와 같이, 자율적 행동 역량에는 신체 지능, 자기관리 역량, 참여·자치 역량, 다문화 역량이 속해 있다.

신체 지능은 자신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능력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및 안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유지하는 능력, 신체 활동을 통하여 놀이, 학습, 일에 참여하는 능력이다.

자기 관리 역량은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능력, 직업·창업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는 능력과 더불어 각종 미디어의 오용이나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참여·자치 역량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과 정의와 비차별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참여·행동하는 태도와 더불어 생태, 평화, 통일, 인권에 대한 윤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다문화 역량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대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과 함께 자기 자신 및 타인의 문화적 세계관에 대하여 알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과 공감하고 교류하는 태도를 뜻한다.

미래 서울에 요구되는 서울미래역량과 관련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위에서 기술한 역량들은 과거와 현재에는 필요하지 않는, ‘미래’에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량은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며 필요한 것이다. 단, 위의 역량들 중에 과거나 현재와 달리 미래에 더 강조되는 것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다. 서울학생 미래역량의 범주별 내용 요소

앞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미래역량의 범주별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competency)개념을 기초로 하되, 역량접근법에 따른 역량(capability)이 주는 시사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표 II-15〉 서울학생 미래역량의 범주별 내용 요소

핵심역량		내용 요소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관련
인지 역량	학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평생동안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주어진 현상과 지식 및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 인류의 문화유산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원을 획득, 생산,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 처리역량
	주체적 사고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타인에게 잘 설명하는 능력 - 텍스트 이해 및 해석을 통해 자신의 삶과 연계하는 태도 	
	창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적 능력 - 집단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표현하는 능력 - 자연 및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 및 적용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사회· 정서 역량	의사소통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존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 - 갈등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원만하게 대응하는 태도 	의사소통 역량
	협업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고 과감한 협업을 시도할 수 있는 유연한 능력 - 감성 및 공감을 기반으로 팀을 조직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화예술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향유하는 능력 -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문화예술적 능력 - 자연 현상이나 예술적 산물에 대한 심미적 감수성 	심미적 감성 역량
자율적 행동 역량	신체 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능력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및 안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유지하는 능력 - 신체 활동을 통하여 놀이, 학습, 일에 참여하는 능력 	자기관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능력 - 직업·창업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는 능력 - 각종 미디어의 오용이나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 	
	참여·자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 - 정의와 비차별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참여·행동하는 태도 - 생태, 평화, 인권에 대한 윤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하려는 태도 	공동체 역량
	다문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대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 자기 자신 및 타인의 문화적 세계관에 대하여 알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 -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과 공감하고 교류하는 태도 	

4. 미래역량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학생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교육과정과 이를 구현하는 수업과 평가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고 상호작용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의 실행과정은 ‘교육과정 총론 → 교육과정 각론 → 교과서 → 수업 → 평가’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과정이었다. ‘무엇을 아는가’에 초점을 둔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요소’들을 포함하고 그 내용요소를 학문적 지식의 체계에 맞게 배치하여 제시하였다(이민철 외, 2015).

개념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학생들은 개념을 학습한 이후 이를 통해 구체적 현실을 이해하는 현실의 맥락을 깊이 있게 다룬 텍스트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교과서 밖, 그리고 교실 밖의 자신을 둘러싼 구체적인 삶을 탐색하는 과정을 경험하거나 이 역의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맥락적 이해의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학습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삶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표 II-16>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미래학교에서 제시하는 체화, 표층+심층학습, 맥락적 학습과 다르지 않다.

〈표 II-16〉 현재교육/현재학교와 미래교육/미래학교의 비교(김태완, 2015)

	현재교육/현재학교 (2차 산업혁명시대 수준)	미래교육/미래학교 (3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학교)
학교에 대한 인식	학교는 공장형 대량생산 모델	학교는 모든 개인의 욕구와 필요,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맞춤형 주문생산식 모델로 발전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는 커도 문제가 되지 않음	작고 안전한 학교
학생에 대한 인식	학생은 미성숙한 개체이므로 지도, 감독해야 함.	학생을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 또한 전체의 일원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교과목 접근 방법	일련론적, 나열식 접근인 개별 교과목적 접근을 함	전체론적 접근인 STEAM 등 통합 교과목적 접근을 함
학습에 대한 이해	learning by reading(아는 것을 시험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 체화할 필요가 없음)	learning by reading & doing(아는 것을 말과 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하고 전달, 설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체험을 통해 체화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교육/현재학교 (2차 산업혁명시대 수준)	미래교육/미래학교 (3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학교)
	표층학습(surface learning): 많이 아는 것이 중요(一자형 학습)	표층+심층학습(deep learning):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의 개발이 중요(丁 또는 工자형 학습)
	피상적인 겉핥기식 탈맥락적 학습(decontextualized learning)으로 단순 지식의 암기방법이 효과적임	전후좌우 맥락을 알게 해주는 맥락적 학습(contextual learning)이 중요하며,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토리텔링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임.
사고에 대한 이해	맥락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와 분리된 탈맥락적 학습을 해도 알기만 하면 되므로 맥락적 사고를 하기 어려움.	일상생활과 관련시켜 사회의 다양한 맥락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꿰뚫어 파악하는 맥락적 사고(contextual learning)를 할 수 있게 해 줌.
	개체적인 지식과 사실을 암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또한 서로 연관되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가 중요함. 또한 주어진 시스템을 넘어서는 탈시스템 사고도 중요함.
수업 방식	일방적인 전달 중심의 강의식 교수와 학습	심층학습이 가능한 프로젝트 수업(project, problem-based learning) 등 다양한 수업 방식
평가 방식	객관적 인식이 중요 선다형 평가 등 객관식 양적 평가 강조	주관적 인식이 중요 수행평가 등 주관식 질적 평가 강조

*김태완(2015)을 일부 수정함.

교육의 본연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바로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이다.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을 상상한다면 기존의 단선적 과정을 넘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적 구조가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에 의한 수업과 평가는 학습자의 기억과 상기를 중심에 두는 선형적 관계를 지향한다. 학습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역량기반교육은 문서화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갇힌 지식에 의존하기보다 미래역량과 성취기준을 기초로 다양한 학습자원을 활용하는 수업과 이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정도와 가능성에 대한 평가, 이를 다시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에 반영하는 상호적 순환의 관계를 지향한다.

가. 역량기반 교육과정

원칙적으로는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가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적 재맥락화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현장적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심화되어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재맥락화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서울 미래역량을 제시한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기존의 서울교육에 대한 반성적 차원의 요구를 담은 것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교육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토론의 과정 속에 있다. ‘미래역량’은 시민적 합의를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이 있으며, 교육계는 이를 수렴해가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길러져야 할 미래역량은 모든 교과에서 여러 역량이 골고루 길러져야 한다. 교과별로 한두 가지 역량을 기르고 이를 합하는 방식으로(접합식)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교육과정평가원, 2016). 각 학년별, 교과별 특성에 맞는 여러 역량중심의 실천적 교육과정이 학교맥락에 맞게 개발되고 재구성 되어야한다.⁴⁾

1)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과정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한다. 미래사회가 평생학습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진부한 기정사실이다. 학교교육이 단편적 지식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의 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는 동시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 과정 자체가 학습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학습사회에서 교육은 성장과 발달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 ‘학습자’를 지원하고 조력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바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교육 받는 학생들의 학령에 맞는 각 시기별 교육과정이 평생학습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동일한 역량이라도 교육받는 각 시기별 맥락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제시되어야 평생에 걸쳐 사회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발전시

4) 미래는 ICT기술이 점점 더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정보화 기반 사회이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김진숙, 2016).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 가상 세계 구현 기술, 3D프린터기 등의 다양한 첨단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여건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했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구현해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서울이라는 시·공간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각 학교마다, 학년마다, 학급마다 저마다의 개체발달의 역사를 지닌, 같지만 다 다른 평생학습자가 학습하고 있는 공간이 학교다. 수업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은 다 다른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 환경적 조건 등을 고려한 개인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2) 교과융합·교과통합을 지향하는 교육과정

미래사회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융·복합적 사고능력이 필수적 역량으로 요구된다. 교과외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교과 핵심역량 영역에서 교과 통합적이고 범교과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이근호 외, 2016). 이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준은 교과융합·교과통합적 관점에서 맥락화된 학습으로 체화되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과 내용을 전달하기만 해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교과통합이나 교과융합의 필요도, 요구도 없었다. 지식정보화시대, 초연결과 빅데이터의 시대는 더 이상 단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개념, 정보,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넓고 얇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핵심개념 하나를 통해 깊게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통합·교과융합을 지향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은 행정업무가 아닌 교사 본연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청과 관리자의 지원체제와 함께 교사는 교과서 중심의 관습화된 수업방식을 벗어나 여러 맥락에서 사고하는 능력, 종횡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

3)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학습자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 대강화를 통해 여백이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각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대강화된 교육과정을 개별학생들의 맞춤형교육과정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 주요한 변수로 제기된다.

국가 교육과정이 교육청을 거치면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이를 다시 지역 사회와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학년 혹은 교과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사들은 이런 방식을 하향식 정책의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자발성을 상실하게 된다(이민철 외, 2015). 일상적인 수업과 학교생활을 통해 만나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상상하고 교사는 이를 학급 혹은 교과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이것이 학교 교육과정과 상호교섭의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문서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업과 학교생활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사건과 그 의미가 바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목표에 대해 공유해야 한다. 교사 개인과 학급과 교과의 특성은 존중하면서 단위학교의 목표와 철학이 모든 교육활동에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처음부터 세련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보통 한 학기나 학년)가 지난 뒤에 이루어진 성과나 교육과정의 흐름, 그 안에서 정리된 것들의 총합이다. 교사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수업과 학교 교육 활동에서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2013). 교육과정 재구성을 또 하나의 문서 작성으로 생각하며, 관습화된 틀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교육과정은 그 자체로 경험이 축적되는 활동에서 나오는 진행형의 산물이며, 완결된 문서가 아닌 교사와 학생의 의식과 활동 간의 상호교섭 과정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 참여와 협력의 수업

수업은 미래역량을 길러주는 실천의 현장이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의 경험을 통해 미래역량과 그 요소들을 배우고 체화한다. 학생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사회는 지식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순 축적식 지식의 의미는 약화되고 수많은 지식과 데이터에 숨은 의미를 찾아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수업은 지식 뿐 아니라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체화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와 동료들 서로 협력하는 수업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교사들은 경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업을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직



도 수업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방적인 교사 중심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만남이라는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수업혁신을 얘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강요이자 억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지금 교육활동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이민철 외, 2015).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한 미래역량과 참여와 협력 중심 수업으로의 변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공유의 장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토론과 공유의 장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기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문제해결 중심의 수업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닌 인지역량을 길러주는 문제해결 중심의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 지능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데이터가 무한 증가하고 지식의 유효기간이 빠르게 단축되고 있다. 미래는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아닌 산재해 있는 데이터 속의 숨은 의미와 관계를 통찰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단순 정보의 처리기술이 아닌 비판적 사고능력, 분석과 종합 능력, 직관과 통찰 같은 고등정신기능을 길러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실 수업은 단편 지식의 전수가 아닌 복잡한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소용되는 종합적 능력인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문제해결사고는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넘어서 목표 상황에 도달하기 위한 현 상황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 실행하며 학습결과의 평가까지 포괄적인 사고능력으로 고등정신기능에 해당된다(홍선주 외, 2016). 그러므로 교실 수업에서의 고등 사고력은 삶의 맥락에 연계되어 있는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하고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

2) 학습경험을 확장하는 수업

교과서의 지식과 개념에 대한 직접 교수를 넘어 개념의 구체화와 추상화의 길항 작용이 가능한 학습 경험을 조직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직·간접적인 자기 경험을 통해 개념이나 지식을 체화한다. 수업시간에 학습자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은 학습을 위한 밑바탕이자 역량의 기초가 된다.

학생의 미래역량은 교사의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과정을

통해 겪게 되는 학습경험이 축적되었을 때 온전하게 길러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습결과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핵심 내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설계가 필요하다.⁵⁾ 핵심개념이나 일반화된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생활 속에 적용해보면서 체화하는 구체화의 과정과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속에서 개념이나 지식을 수렴해가는 추상화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학습경험을 조직할 수 있도록 기계적 수업이 아닌 생성적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3) 자율적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학습

사회·정서 역량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학습역량을 기르기 위한 협력학습을 지향해야 한다. 미래역량은 정답이 있는 학습과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내는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구성해가는 과정을 즐기는 수업 속에서 길러진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외적 대화와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 과정 속에 존재하는 협력은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삶의 역량이다.

협력학습은 이러한 협력의 심리적 과정을 토대로 한 학습과정을 강조한다. 자기 자신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부정적 학습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주체적 사고 능력, 협업능력, 자율적 행동능력 등을 숙달하는 것이다.⁶⁾ 특히 의사소통능력과 협업능력은 학생들을 미래의 직업시장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넘어, 미래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다.

4) 학습의 개인화 및 맞춤형 학습

참여와 협력 중심의 수업은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잠재성을 지원하고 실현해가는 방향으로 구안되어야 한다. 맞춤형 학습이란 학교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5)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상황들을 실감나고 생동감 있는 간접경험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가상현실의 발전은 실감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다양한 학습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는 협업 활동이 용이해지고, 온-오프라인 혼합학습으로 글로벌 학습공동체와의 다채로운 협업 경험 등은 교실 수업의 범위와 넓이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간접 체험이 일반화된다면 오히려 직접 체험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이다.

6) 혼자서 조용히 주어진 답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럿이 힘을 모아 문제를 발견하고 협의하며, 집단지성으로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능력과 태도 뿐 아니라 참여·자치 역량, 학습 역량을 기르게 된다.



을 발견하고 이를 성장시키기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 교수방법, 평가를 설계하고 이러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을 설계하는 학습이다(홍선주 외, 2009).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습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개별 학생마다 학습에 대한 강점과 단점, 학습 속도와 선호하는 학습 방식은 상이하며 그로 인한 학습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교사 주도의 수업은 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습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자 개인의 잠재성과 학습 속도, 발달 정도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교실을 넘어서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⁷⁾ 교실의 모든 학생이 동시에 다음 활동을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교수-학습지도안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시간에 해야 할 활동을 안내하면서 자기의 학습 속도를 존중받을 수 있는 수업을 상상해야 한다.

다.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는 줄세우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습자의 미래역량을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평가다. 개인의 성과주의와 결과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평가이다. 몇 점짜리 낙인이 아닌 학습과 발달의 과정을 지원해주기 위한 평가이다. 이는 철저히 ‘학생’ 개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⁸⁾

현재의 인지적인 역량을 객관식 지필평가의 방식으로 측정하는 양적 평가 방식에서, 비인지적 능력인 정의적 특성과 역량 등을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질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학습 결과 중심의 총괄평가에서 교수학습 과정과 연동될 수

7) 기술이 발달할수록 교실, 학교, 국가를 넘어 온라인상에서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협력학습, 협력적 탐구활동에의 참여가 용이해지고 있다. 온라인 학습 환경의 발달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학습내용, 학습시기, 학습방법, 학습속도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학습 선택권을 갖게 되어 학습의 주도권은 학생에게 이양된다. 온라인의 발달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도 가능하게 한다. 온라인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오프라인 학습으로 보완한다. 온라인에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토론, 협력이 결합되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자원의 공유 및 관리가 용이한 협업 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확장될 것이다.

8) 학생들의 잠재적 발달 영역을 최대한 확장시켜 발현되도록 돕는 교수-학습 과정이 되려면 교사가 먼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보다 학생들을 더 잘 알아야 한다. 이 과정이 바로 ‘평가’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지만 교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의외의 상황이 늘 펼쳐지는 게 교수-학습 과정이다. 교직 경력이 오래된 교사들이 갖고 있는 암묵지는 익숙함에서 오는 능숙함이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의 상황과 반응에 따라 언제든 열려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획을 바로 바로 수정하면서 교수-학습을 운영해 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바로 바로 수정하면서 수업을 운영하는 근거는 바로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다. 학생들의 학습을 중심에 두고 학습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있는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가과정 자체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습지향적인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주형미 외, 2016). 학생들의 배움을 중심에 둔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학생들의 현재 상황과 조건을 지속적으로 탐색, 평가하면서 그에 맞게 수업 활동을 변주해가는 소통의 과정이다.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는 다음의 몇 가지 방향을 바탕으로 현장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학습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 과정 자체가 평가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객관식 지필평가의 방식으로 측정하는 양적 평가 방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비인지적인 능력, 정의적 특성 등을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질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학습 결과 중심의 총괄평가에서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는 진단과 형성평가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과 연관된다.

학습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량적 방법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개별 학생들에 대한 세세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시평가를 통해 알게 된 평가결과는 즉시 개별학생의 학습과정으로 되돌려져 학습자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과정에 대한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지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인 협업능력, 창의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감능력, 배려심 등 정서역량에 대한 평가와 성장이 있어야 전인적 인격을 갖춘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2) 개인별 맞춤형 평가

개인별 맞춤형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미래역량을 측정하는 평가⁹⁾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미래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평가이다. 따라서 학습자 개인의 여러 특성과 발달 정도, 학습 정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발달했는지 성장참조평가와 능력참조평가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9) 미래역량이 측정 가능한 것인가라는 논의는 제외한다고 해도 이런 역량을 측정한다고 하면 다시 정량적 평가로 돌아가고, 평가지표를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된다.



3) 자기 성찰적 평가와 동료평가

학습자의 자기 성찰적 평가 및 동료 평가를 통해 자율적 행동 역량과 학습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체적 사고역량과 자기관리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평생학습 능력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적 역량이다. 내가 이 수업을 통해, 이 교과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획하는 과정과 함께 분기, 학기, 학년별로 적절한 계기를 마련해서 스스로를 평가해보고 성찰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학습공동체로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생각이나 평가를 수용하는 경험도 필요하다.

4) 개인별 학습과정에 대한 데이터 활용 평가

컴퓨터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터넷 기반을 활용하여 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풍부화, 효율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시마다 수시로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통해 자신의 학습정도를 파악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에 반영할 수 있다. ICT의 비약적인 발달로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평가결과는 누적적으로 축적가능하며,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성취정도를 진단, 처방, 조절하여 각 개별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5) 교사의 평가권과 전문성 확보

교사의 평가권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질적 평가로의 전환은 교사의 평가권과 전문성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교사의 평가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교사 학습공동체나 학년 협의회, 교과 협의회를 통한 함께 협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수행평가 및 서술형 평가와 같은 질적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게 되고, 평가에 대한 권위도 확보할 수 있다.

5. 미래역량 정책과제 제안

□ 연구과제명(1): 발달단계별 미래역량 및 미래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 배경 및 필요성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 학생들이 길러야할 역량은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함양해야할 미래역량과 범주별 내용 요소들은 발달단계에 따라 성취기준별로 다를 것이다. 학생들이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발달단계에 따라 학습해야 할 미래역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기부터 노년의 시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각 단계별로 어떤 역량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강조되어 학습되어야하는지 제시되고 그에 따라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단계별로 함양해야 할 미래역량 체계 개발과 더불어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 연구 내용

- 서울학생 발달단계별 미래역량 체계 개발을 위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 미래역량의 학교현장 실현을 위한 서울학생 발달단계별 미래역량 체계 개발
- 미래사회 대비 서울학생 발달단계별 미래역량 체계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

□ 기대 효과

- 발달단계에 적합한 미래역량 적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인 미래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사회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발달단계에 맞는 미래역량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한 미래역량 함양 및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 재구성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내용 선정에 효과적임
- 미래역량기반 학교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안 제시로 현장실현 가능



□ 연구과제명[2]: 미래역량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방안 연구

□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미래역량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교육과정, 학생이 수업의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며 협력하는 수업, 학생의 학습과정에 대한 진단과 피드백으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는 순환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교교육의 체계 또한 그러하다. 미래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를 가르치는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 영역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어떻게 길러줄 것인지, 삶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지식과 역량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하고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량화되기 어려운 ‘역량’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과정의 구성방향과 구체적인 방법, 미래적 교육환경의 조건을 반영한 교수·학습 설계방안, 진단·처방·과정 중심의 맞춤형 평가 등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미래의 교육생태계 변화에 따른 학교 수업환경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교육주체들이 다양하고 발전적인 교육적 상상력과 사고를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연구 내용

- 미래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성취기준 중심 재구성 방안
-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수·학습 개선 방안
- 미래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과정중심 수행평가 방안

□ 기대 효과

- 다원화·다양화 사회가 요구하는 서울학생 미래역량을 특화시킨 교육과정 개발
-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및 교과별 교육과정 적용·보완
-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패러다임 전환 및 연계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미래역량기반 교육 방안 마련
- 학교와 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수·학습 전개로 미래역량 함양
-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적 상상력 제공으로 다양한 학교교육 전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III

서울미래교육체제 구상



Ⅲ 서울미래교육체제 구상

서울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학교운영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배움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표준화된 검사를 바탕으로 한 경쟁적 입시교육제도, 교과서 지식 전달 중심 수업, 권위주의적·중앙집중적인 통제라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 가지 축에 의해 지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교 체제 구상은 한편으로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의 실천적 활동과 정책은 바로 교육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현장의 자발성과 민주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에서도 유지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그것은 미래교육의 바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과 관련하여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삶의 미래를 위해 유보시키기 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교육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증대된 기술의 영향력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기술주의에 경도되지 않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미래역량을 육성하는 학교운영체제 구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체제 구상

가. 서울미래학교 운영체제의 기본 방향

서울미래학교가 미래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1) 학습자의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

미래학교에서 학습자 모두가 ‘세상에 하나 뿐인’ 존재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잠재력을 최대로 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¹⁰⁾ 학교운영체제가 학습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역동적으로 발휘되는 구조로서 조직되고 기능해야 한다.

학습자의 자율성을 항상 일정한 정도에서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다.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성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미래역량들은 개인 내부에서 또는 개인 간에 부분들의 연결성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총체성을 가지며 항상 변화하는 것이어서 조건에 따라 학습자 개인과 학습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역량은 개인 내부에서 또는 개인 간 부분들의 연결성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람마다 다르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같은 생태계는 다양성이 증가돼야 더욱 안정되고 탄력성을 갖게 되어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협력적 상호작용은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이 부분들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떠오르게 되는 원천이 된다.

2) 통합적 지식 구성

미래사회의 초연결성, 복잡성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지식을 구성해야 한다. 자아와 사회, 개인과 집단, 예술과 과학, 인간과 자연 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가로지르며 흩어진 지식을 다시 모으고 전통적인 교과목 체제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통합교육과정은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지적 탐구와 실천, 체험이 연결돼야 한다. 또한 예술이 곧 삶이라는 관점에서 문화, 몸의 예술을 포함한 예술과의 결합을 확대해야 한다. 통합교육과정 구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필요하다. 호주, 캐나다 등에서 수년간의 종합계획을 통해 주제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한 개혁 사례를 참조해 볼만하다.

10) ‘세상에 하나 뿐인’ 존재로서 누릴 최고의 교육을 데보라 마이어의 표현을 빌려 설명한다면 모든 아이들 개개인이 “법률가와 의사 뿐 아니라 미용사와 배관공도 지성인으로서, 자신의 시대와 사회 문제의 해결자로서 근본적인 지적 사회적 문제들을 탐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데보라 마이어(2014). 아이들이 가진 생각의 힘. p. 309.



3) 지식의 불완전성에 대한 학습

지식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는 지식의 맹목성, 즉 어떤 지식 이든 그 안에는 오류와 착각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배우는 것이다(Edgar Morin, 1999). 나아가 얇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 지식 구성에 작용하는 두뇌, 정신, 사회·문화·신체 특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오류에 대한 발견, 지속적인 수정, 재창조를 가능하게 하며 서로 다른 견해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접근을 통해 더 나은 이해로 이끌어주는 것이다.¹¹⁾

지식답습(exploitation)은 인간지능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며, 인간 지능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지식이 전제하는 인식 틀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고, 기존의 가치를 전복하는 가능성 탐색(exploration)이다(정재승 외, 2014). 미래학교는 학생들이 자율적인 지식탐구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식답습보다 가능성 탐색의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평등교육 보장과 실현

미래학교는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에서 더 나아가 모든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최고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결과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환경과 학습과정까지 평등해야 한다. 특수아동이나 학습속도가 느린 학생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지도 시간, 교육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사 및 심리학자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¹²⁾ 특히 학령기 이전 유아기부터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불평등, 신체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학습능력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미래학교는 나아가 평등을 위한 학습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경제적, 첨단기술상의 불평등을 비롯해 전 지구적 차원의 모든 불평등의 문제 극복에 기여해야 한다.

11) 역사지식에 대한 단일한 해석과 결론이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지식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지식의 과학적 엄밀성을 가장 강조하는 학문 분야인 과학에서 과학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널리 포함하는 집단지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12) 스위스의 경우 현재 학교체제의 미시수준에서 개별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과 조치를 시행하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책임은 팀이 나뉘지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 교사에 대한 높은 압박을 구제해 주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Regina Frei(2011), *A complex system approach to education in Switzerland*. In: Lenaerts, Tom, Giacobini, Mario, Bersini, Hugues, Bourguine, Paul, Dorigo, Marco and Doursat, Rene, eds. *Advances in artificial life, ECAL 2011: proceedings of the eleventh European conference on synthesis and simulation of living systems*. MIT, p. 247.

5) 지속가능발전교육

미래학교는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의 국가와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방법, 나아가 우리가 지구 전체 차원에서 상호교류하고 통합하는 방법’의 근본 원칙이 되며, 전 지구적 차원의 민주시민성, 사회정의와 생태정의, 다른 생명체와의 평화적 공존 등을 우선과제로 삼는 교육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교육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시대’의 민주시민성이란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책임감을 갖는 세계시민성,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을 위한 지구시민성, 나아가 디지털 기술 독점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과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윤리로서의 디지털민주시민성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간의 공유를 넘어서 인간과 디지털 기술의 산물이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체제 자체가 ‘지속성’을 원칙으로 삼고 체제 구성 요소들의 상호 연결과 융합 속에서 새로운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혁신교육은 추격 산업화 시대의 암기와 입시위주의 권위주의적 교육문화를 극복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혁신교육에서 강조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인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등은 과거 수직적 학교문화를 극복하고 학교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생태 시스템으로 만드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학교는 혁신교육이 추구했던 민주적 협력적 제도와 문화 기반을 더욱 심화, 확장, 풍부화하면서 그 속에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요람에서 무덤까지’ 걸치는 평생학습의 플랫폼 학교

학습은 역량 습득과 계발을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 자체로서 본질에 있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평생학습의 근간으로서 학습하는 방법을 포함해 배움에 필요한 총체적인 역량들을 육성해야 한다.¹³⁾

미래사회는 지능정보화사회이며, 점점 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성이 심화되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학령기 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제공돼야 하며 미래학교는 언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고

13) 핀란드 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 교육까지 모두 무료일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016 제주국제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참고)



탄력적인 배움의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이찬승,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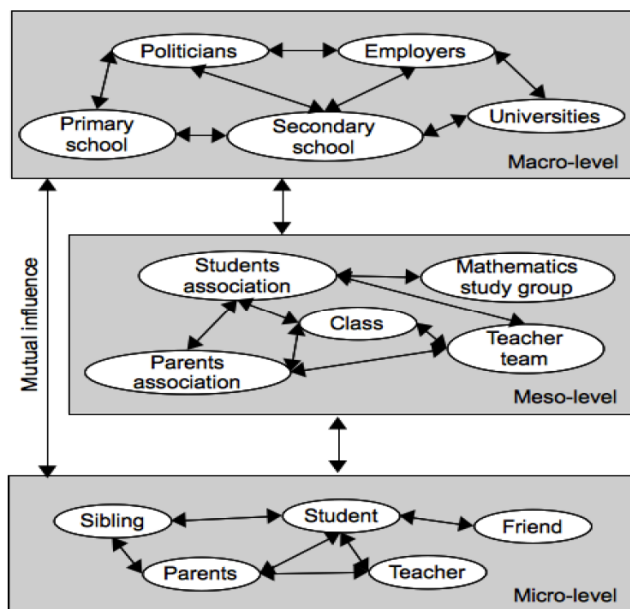
미래학교는 학교 안과 밖에서 교육의 광범위한 오픈소스를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복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식적 학습내용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학교는 목적과 흥미에 따라 분야 간, 과목 간, 학교 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배우는 ‘확장된 학습공동체’의 센터,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미래학교 체제 구현 방안

1) 학교 체제의 복잡성 이해와 시스템 접근

학교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아학교¹⁴⁾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체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학교 그 자체의 체제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K-12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강조할 수 있을 것이며, 무학년제를 상상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의 종합학교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위계적 구조의 하부 행정조직으로 이해된 학교를 그 고유한 기능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다. [그림 III-1]은 한 국가의 교육체제를 여러 수준들, 크게 보면 거시, 중간, 미시 수준 내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그림 III-1] 교육체제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상호작용 (Regina Frei, 2011)

14) 유치원은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이유로 유아학교로 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주장에 근거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유아학교라고 칭하고자 한다(<http://news.donga.com/3/all/20161110/81256910/1> 참고)

수준 간에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체제로서 이해하고 있다. 학교체제는 이 세 수준 모두와 관련되는데, 여기서는 중간 수준의 특성과 변화 방안을 정리할 것이다.¹⁵⁾

최근 생명체, 교육, 사회문화 영역 뿐 아니라 자연현상 분석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복잡(적응)계 이론은 학교시스템의 교육력 제고 방안 모색과 관련해 함의하는 바가 크다.

복잡계 이론은 무엇보다도 시스템 차원의 변화에 관한 이론이다. 복잡계는 많은 구성원자들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개별 인자들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커다란 변이성(복잡성)이 집단성질로서 떠올라(창발성)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또는 학습해 나가는 역동적인 집합체이다. 창발성은 생태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복잡계 이론에 의하면 개별 학습자, 교실, 학교도 복잡계이다.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고 실제로 학습한다는 것이다.¹⁶⁾ 복잡계 이론은 교육문제의 복잡성 이해에서 더 나아가 복잡성의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한다.

복잡계 관점은 학교 개혁과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학교체제 전체를 협력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이다. 학교 안의 회의, 학습공동체 활동, 팀 프로젝트 등 어떤 것이건 간에 가능한 많은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상호작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팀워크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구성원들의 적절한 자율성이 없으면 상호작용이 살아날 수 없으며, 자율적 상호작용이 만드는 복잡성이 바로 새로운 가능성과 창조의 조건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교의 민주적 협의제도는 구성원 간에 이견과 갈등을 드러내는 계기이자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문제 해결과 구성원의 동반성장을 가능케 하는 계기이다. 토론과 프로젝트 활동 같은 참여수업 또한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강화시켜 더욱 질 높은 지식의 창조, 복잡한 문제 해결, 불확실한 상황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조건이 된다.

셋째, 학교를 열린 체계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복잡계는 열려 있는 계로서

15) 교육체제의 미시수준에서는 교사들, 학생들, 학생들의 부모와 가족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중간 수준에서는 교사들의 집단이나 조직, 학생들의 그것 사이에서, 거시수준에서는 정치가, 경제, 사회 일반 사이의 다변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Regina Frei(2011), p. 244.

16) 근대학교모형 및 운영 원리는 학교가 기계처럼 투입과 원인에 따라 산출과 결과가 예측가능한 기계처럼 움직이는 단순계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근대학교에서 지식의 창조나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항상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에너지를 받을 수 없으면 폐쇄적인 체계가 되어 존속이 불가능하다. 학교 내부의 구성원끼리, 혹은 지역사회 등 외부환경에 열려 있을 때 에너지와 비전이 확산되고 교육공동체의 생명력,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다.¹⁷⁾

2) 민주적 학교 자치 공동체로의 전환

1995년 5.31 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적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학교운영위원회 법제화라는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2015년 말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었다. 혁신교육에서는 학교를 학교 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민주적으로 학교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교육은 우리나라 민주화 프로젝트로서 정치적 민주화에 이은 사회적 민주화의 한 실천적 활동 영역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혁신미래교육은 교사회의 법제화를 통해 학교자치의 법제화를 완성할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그동안 광주, 전북,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학교 자치와 관련된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학교 교육은 학교 구성원들의 상호 민주적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시대의 요구와도 상호 통하는 것이다. 독일의 ‘Industrie. 4.0 by design’에서는 상호소통하는 열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을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소통구조라고 보고 있다(남유선 외, 2015). 이런 플랫폼을 학교 단위에서 형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학교 구성원들이 미래사회의 학교교육을 함께 디자인하는 것은 소통구조의 질적 전환을 위한 요구이자, 지금까지의 혁신교육의 성과를 심화시켜가는 것이다.

3) 학생에게 열린 학교 체제 구현

학생에게 열린 학교 체제를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학교교육의 무상화가 필요하다. 무상화는 핀란드 교육을 비롯한 교육복지가 강화된 나라의 기본적 특징이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학교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화, 공립유치원의 확대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17) 김용련(2015), 271쪽/ 최무영(2008), “복잡계란 무엇인가”, 프레시안 (7.22)

둘째, 진로 성찰 기회와 평생 배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에게 열린 학교 체제는 오디세이 학교 등과 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디세이 학교의 성과를 살피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학교에서 자신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역할 분담을 통해 그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무학년제 도입¹⁸⁾이 필요하다. 무학년제는 학생의 능력과 흥미 특성에 따라 반을 구성하고 자신의 성취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누적되는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일부 다문화 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의 경우 시도하기에 적합하다.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학습을 진행시켜가기에 다양한 환경적 차이를 갖고 있고, 그것을 일의적으로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학년제는 작은학교에서도 시도해도 좋을 것이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하여 학생 개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작은학교’의 교사수급문제 등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혁신의 질적 심화와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학생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관심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안학교와 같이 교육적 가치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¹⁹⁾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대안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서울의 경우 도시 내 재동초등학교와 같이 작은학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학교를 다양한 가치를 가진 대안적 학교로 만드는 경우, 학생들에게 열린 학교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실리콘벨리의 발도로프 학교와 같이, 서울 혁신미래교육의 학교체제는 하이테크 속에서도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가진 학교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²⁰⁾

18) 미래학교라고 지칭되는 알트 스쿨(Alt School)의 경우, 학생들의 무학년제를 특징으로 하며, 여기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특성에 따라 반을 구성하며, 교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에게 알맞은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공동된 디지털 플랫폼에 피드백을 남기면서 상호 소통을 한다.

19) 혁신학교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안형과 일반형을 구분하여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20) 이런 관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 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들의 개성을 살려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스쿨버스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하고 ‘서울형 작은학교’로 선정해 지원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는 하지만, 특정한 가치를 갖는 대안적 성격의 학교로 진전시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성찰적 학습공동체와 생각하는 학교

학교가 지속적으로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학교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체제 전체 차원에서 혹은 부분 수준에서 학부모, 교사, 학교 관리자,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동반성장하는 다양한 학습공동체로서 조직되고 활성화돼야 한다. 학습공동체는 나아가 지역주민, 교육전문가, 그 밖의 다양한 교육 관련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다양한 학습공동체의 학습효과가 선순환을 통해 학교교육력 제고로 귀결되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혁신교육은 학교업무정상화,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 학교자치의 활성화 등을 주요한 과제로 삼아왔다. 이 가운데 가장 주요한 해결과제로 남은 것은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이다. 일부 혁신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진전된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혁신학교에서 이 부분의 혁신은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다. 학교업무정상화와 같이 소극적 과제에서 벗어나 혁신교육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얻기 위해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정수인 교육과정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과정의 문서상으로는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입시제도, 관행적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등 많은 요인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혁신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교단위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에 대해 희망을 주고 있다.

핀란드의 학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제주의 KIS(제주한국국제학교)의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우경, 2016; 이지선, 2016; Anne Raasakka, 2016). 이들 학교에서는 일체의 행정업무 없이 오로지 교육과정을 협력적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기초로 교육활동을 진행하며, 그에 따라 평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이들 나라 혹은 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의 참고할 만한 교육과정, 그에 따라 학교 교육 관련자가 구성한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들이 구성한 교육과정은 있지만,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체제의 구성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이 활동의 중심은 교사이고 이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지침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학교단위 교육과



정을 구성할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나 부교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학교 현장에서 형성된 자료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성찰적 학습공동체로서의 학교로 변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인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용하며, 교육과정코디네이터를 통해 교원의 교육과정 구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제주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유·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다니며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을 돕고 모니터링하고 성찰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의 부장, 수석교사, 교감, 교장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교육과정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²¹⁾ 이렇게 되면 학교업무정상화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학교는 교육과정 중심의 성찰적 학습공동체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학교자율평가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학교가 위와 같은 변화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교평가도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 스스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4년 2학기부터 전환한 학교 자체 평가는 학교교육활동의 진단 및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력 제고를 지원하며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자치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향후, ‘완전학교자체평가’를 실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에 교육활동 시 꼭 필요한 사업, 정책 등을 명시한 아젠다를 주고 계획부터 평가까지 학교교육공동체가 함께 주관하도록 학교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학교의 성취문화 전반을 개선시킬 권한을 전적으로 학교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초한 학교는 생각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학교는 단순히 학교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며 학교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를 우리는 ‘Thinking School by Desig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 학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교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1)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학교업무정상화 등을 어느 정도 진척시킨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학교단위 교육과정 자율성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들 학교에 대해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혁신학교와 함께 학교 혁신의 일반화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미래교육의 철학이 깃든 공간 구성²²⁾

근대의 학교는 학교 공간은 산업사회의 필요에 따른 공간, ‘관리가 용이한 구조의 학교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미래역량교육의 철학이 깃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공간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삶과 배움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공간의 설계와 구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학생의 삶이 발달 단계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공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자연환경, 민주적 환경, 강의식 환경, 로봇을 비롯한 미래기술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도록 학교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자신의 삶의 환경에 익숙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과제나 주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가능하고 ‘배움’과 ‘생활’이 결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갖추어진다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 활동 창조가 가능할 것이다.²³⁾

넷째, 혁신교육의 공간 구성의 성과를 계승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에서는 혁신학교의 교육목표와 철학을 공간구성에도 반영하고 있다. 크고 작은 모둠과 원, ‘ㄷ자’ 좌석 배치를 통해 배움중심수업과 민주적 소통을 시도하고 학교 전체 공간을 예술성, 생태, 평화, 인권, 다양성을 학습하는 다목적 공간으로서 구성, 활용해 왔다. 이는 미래학교의 학습공간구성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다섯째, 학교마다 공간구성위원회를 두어 학교교육목표와 철학, 여건을 반영하는 공간 구성을 함께 협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와 더불어 건축, 안전, 시설, 예술, 복지 등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22) 상세한 논의는 송순재(2011). ‘상상력으로 교육에 말걸기’ 중 ‘공간’과 ‘색채’ 부분 참조.

23) 일본 ‘시민(至民)중학교’의 학교건축은 학교 건축에 담긴 미래지향적 철학과 기대를 보여주는 유용한 사례이다. 시민중학교의 설계 주제는 ‘유연한 학교 건축’이었다. 유연성을 ①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유연성’ ② 다양한 집단의 활동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유연성’, ③ ‘배움’과 ‘생활’이 융합한 ‘생활의 장’으로서의 ‘부드러움’, ④ 시대에 대응하며 새로운 교육활동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 등 4개 항목에 대해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시민교육연구회(류호섭 역), 우리가 만드는 미래 학교(일어판 제목은 ‘건축이 교육을 바꾼다’임), 2013: 76-77.

마. 학교 체제 변화를 위한 제언

위에서 논의한 학교체제는 학교체제를 둘러싼 교육과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교육이 걸어온 길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한 한계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온 축적된 경험 이 토대가 되어 미래교육을 상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많은 교원과 교육주체들의 민주적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신뢰, 협력,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가 학교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때, 제도와 정치 사회적 변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은 혁신교육의 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한계의 극복과 그에 대한 단기적 방안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중기적 방안 없는 장기적 방안은 자칫 공허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장기적 전망에 따른 상상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 중기적 방안을 정책화하고 실천함으로써 장기적 전망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전망은 학교체제의 변화에 더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정책적 진화와 결합할 때 구체화할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벨기에 ‘학습 및 재설계 연구소(The Learning and Redesign Lab)’의 연구보고서인 “2030년 미래학교: 어떻게 학습과 작업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서 제시한 미래학교의 모델인 ‘학습공원(Learning Park)’²⁴⁾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²⁵⁾

24) 핀란드는 2030년 학교 모델로 ‘학습 마을(Learning Village)’을 제시하고 있다.

25) 이 학습공원은 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열린 학습공간으로, 물리적 공간과 온라인 공간에 동시에 연동되어 구현되고 ② 필요에 따라 현재의 학교처럼 닫힌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하며 ③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함께 서로에게’ 배우고 ④ 무학년제를 기반으로, 학교 내에 ‘아카데미(academy)’라는 작은 학교가 있고, 아카데미 속에 학습가족(learning family)이라는 학습공동체가 존재, 교사는 팀으로 함께 공동코칭의 역할을 하며 ⑤ 민주적인 운영방식으로 협동조합형태와 유사하고 ⑥ 학사운영의 여유가 있고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다.



2. 미래지향적 교육청의 역할

가. 미래지향적 변화와 역할 모색

1) 교육환경 변화 대비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지만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하고 발전할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그런 변화를 예측해서 대응하기는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인공지능시대의 예견되는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교육의 적응·대응방안을 고민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앤디 하그리브스와 데니스 셸리(2015)의 『학교교육 제4의 길 : 학교교육 변화의 역사와 미래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미래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절대적임으로 강조하였으며 이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행정기관이 추구해야할 기본 방향이다.

정부의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따라 바뀌며, 이런 잦은 변화는 교사들을 개혁 피로감에 빠지게 만들고, 사제 관계의 근본적인 신뢰를 저해한다. 데이터 또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교사가 학생들 및 동료 교사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돕는 것, 이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공동의 목적을 도출하고 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 등이 그렇다. 협력과 파트너십의 가치란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앤디 하그리브스와 데니스 셸리, 2015).

2)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술발전으로 직업 세계가 변화되고 있다. 기계의 자동화를 중심으로 하던 제3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자율화·지능화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면서 직업과 직종의 세계도 요동치고 있다. 기존의 수많은 직업과 직종이 머지않아 사라지게 되고 제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²⁶⁾ 또한 지식정보의 양이 급속히 팽창되고 생명주기가 단축될 것이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졸업 후 직업현장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다. 4년간 대학에서 배운 내용의 효용 반감기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졸업장보다 기능자격증을 더 우대하는 풍토가

26) 세계경제포럼 ‘미래고용보고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65%는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최재유,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교육, 서울신문, 2016.7.11.)

나타나기도 하고 초단기 3개월짜리 ‘마이크로 칼리지’까지 출현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울러 IT기술의 지능화로 최첨단 기능을 하는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어 인간 수명이 120세까지 늘어나는 시대가 되고 있다. 한편 급변하는 지식정보나 첨단 소프트웨어의 혜택 유무와 정도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개인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이강윤, 2015)

- 인공지능은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지만 학습하는 과정은 인간지능의 학습 원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인공지능의 5대 핵심 기술과 해당 영역 그리고 작동방식 원리를 알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출현하는 인공지능 기기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AI의 5가지 핵심 기술

주요 내용	핵심 기술	해당 영역
자연어 처리	소통 기술	텍스트 이해, 텍스트 작성, 번역
머신 러닝	예측 기술	데이터 인식, 알고리즘 발견, 변화 예측
패턴 인식	인간 감각 모방 기술	스피치, 비전, 문자, 심볼 등을 관찰 및 분류
지식 표현 및 추론	정보 구조화 기술	세멘틱, 온토로지, 추론 엔진 등을 통해 구조화
관리 및 기획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	자동로봇, 자율주행차

※ AI의 작동 방식(관찰 → 이해 → 평가 → 결정)

작동 방식	해당 내용
관찰	현상 관찰, 사실·상황 파악, 패턴 인식-이미지, 음성, 자연어처리-텍스트 이해
이해	경험·지식 기반으로 패턴화, 패턴 인식, 답러닝-강화학습
평가	가설 수립, 패턴 추론, 상황 인지, 가설 평가, 지능 엔진
결정	최적 행동 결정, 자연어 처리-표현

3)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상이 요구된다. 사회는 늘 역량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시대에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단순한 지식만을 축적하지 않고 늘 호기심을 갖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타인과 조화롭게 협업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인재가 요구된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미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소프트웨어식 사고를 지닌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배움의 시기는 생애 전체로 확대되었다. 학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변화하는 미래 시대에 항상 적응·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기 위해 늘 대비해야 한다. 장수시대에 성인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음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와 학교에서 교육기회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적, 개인적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 인공지능 활용 여부에 따른 불평등한 소득분배,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또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김유리, 2016b).

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청의 역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프트파워이며 인공지능의 지능화, 초연결 네트워크, 인간과 기계의 협업 구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김유리, 2016b). 인공지능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시대 그리고 인간 수명 120세 시대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견되는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교육청의 역할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1) 조직 역할과 기능 혁신

첫째,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현재의 계선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 협업적 조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의 기능은 연구·평가, 지원, 상담, 서비스, 자율성 확대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교육청(본청)에는 인공지능시대를 준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분석·평가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학생 학부모 교육 지원 및 상담 기능을 강화하되 특히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부서(창의·융합수업 지원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예: 창의·융합수업 지원팀). 한편 직속기관에서는 시대변화에 신속히 적응·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연수 및 교육훈련 역할을 혁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시대 흐름에 맞게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예산 및 인사에 있어 독자적인 자율권이 거의 없다. 물론 학교에서도 교육활동이나 예산, 인사에 있어서도 학교장 또는 단위학교

의 자율권은 거의 없는 편이다. 자율권은 미래역량에서 창의성, 협업성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학교와의 계선조직의 기능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자율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수요자와 학교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고충상담, 교육, 연수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서울교육, 학교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스포츠 중계 로봇기자처럼 인공지능을 탑재한 ‘교육청 소식 로봇’, ‘학교 안내 로봇’, ‘신문고 로봇’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육청

- 정책 분석·평가: 조직 및 공급자 중심의 기관별 개인별 직무성과 중심의 성과 평가를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효과 및 만족도 평가로 전환하고 정책 지속 여부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교육감 직속 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 빅데이터 수집·분석: 행정정보화 위주의 기능에서 교육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빅데이터 처리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정책 수립 시 풍부하고 유용한 정보로 활용한다.

○ 교육지원청

- 기능 전환: 행정 및 장학 위주의 기능을 수업지원 및 상담 위주의 기능으로 전환하고 교사의 수업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창의융합수업 지원팀) 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최소화하여 학교 지원 기능 강화에 할애해야 한다.
- 자율성·책임성 확대: 계선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전환 및 권한 위임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및 자율경영 책임제를 확대하며 교육지원청의 자율권(예산, 인사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과장 중심으로의 결재권 하향 조정을 통해 독립성,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학교에도 적용).
- 센터 통합·재조정: 학생, 학부모, 교원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현행 기관 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거나 기능이 중복되거나 단순 기능으로 되어 있어 인력 및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교육연구정보원

- 연구 개발기능 강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수 자료, 교육시설 등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내부 인력 외에 학계나 기업의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교원들의 연구풍토 조성 과 양질의 자료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연수원

- 연수강화, 기능 확대 개편: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연수과정 개설·운영이 필요하고 파괴적 혁신이라 불리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10만여 명)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 필요하다.
- 연수원의 교육과 연수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강의식은 최소화하고 토의·토론, 발표식 등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
- 현재 연수원은 교원중심 연수 기능을 담당하고 제2연수원의 신설이 필요하다.

○ 과학전시관

- 고유 기능 강화: 과학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정보 동아리 지원을 활성화하며 다양한 체험위주의 과학교육이 인공지능과 접목될 수 있도록 한다.

〈표 III-1〉 교육지원청의 기능(이인회 외, 2016)

주요 기능	사무영역	변화된 현재 교육지원청 기능
관리·감독 업무	장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컨설팅장학
	감사	종합감사는 축소된 형태로 본청 이관
	학교 평가	교육연구원에서 실시(NEIS정보 근거한 평가로 학교부담 경감)
교육청-교육지 원청 기능 재배분	행정 업무	시·도의 여건에 따라 행정관리업무는 가급적 본청 이관
	관할 학교	유·초·중·고의 일부 사무(컨설팅 장학, 보건·급식 등) 통합지원
	사무 범위	필요시 다른 교육지원청 업무도 통합, 수행
교육수요자와 현장지원 기능 강화	학생	고교 심화과정 개설, Wee센터 운영, 학생진로·진학·입시 상담 등
	학부모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고충상담 및 학부모 연수 등
	현장	- 학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원어민·예체능·심화과정 강사 등 지원 - 순회교사제 확대, 학교현장컨설팅단 운영, 교수·학습 자료실 운영, 교과협의회·학습동아리 등 학교자율장학 지원



셋째, 교육지원청 내/교육지원청 간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역량을 지닌 인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교육청의 업무담당자부터 협업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발전을 중심에 놓고 각 기관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하게 고민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내 또는 교육지원청 간 분절형(칸막이) 체제가 아닌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자치가 중요하지만, 주변의 교육지원청간의 상호이해 및 긴밀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11개 교육지원청을 4개 권역으로 한 연합(3~4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클러스터(Cluster) 체제를 마련하여 권역별 발전협의(간사 교육장)를 활성화하고 권역 간 교육 활동 공유 및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지원 시스템 혁신

첫째, 융합형/협업형 인재육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이인회 외, 2016). 교육지원청은 관내 유·초·중·고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 급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는 없다. 유·초·중·고 각자 영역만을 담당할 뿐이다. 교육지원청이 관내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 유·초·중·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업체제인 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급 별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수립 시 미래역량에 필요한 창의성, 협업, 자율성, 공공성, 평등,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문화예술 능력, 소프트웨어 능력, 글로벌 시민성을 신장할 방안을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수업방법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토의토론식 수업, 발표식 수업, 팀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학습 등)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창의성,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 다양한 교육활동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발굴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창의·상상 센터).

둘째, 교육불평등 해소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별 교육격차가 심하다. 교육투자비용, 학생들의 학력 및 진학 통계 등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나타난 학교별 기초학력 미흡학생들의 분포도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를 드러낸다.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주요 역할이다. 고등학교에 와서 기초학력 부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조기 개입원칙을 가져야 한다. 고등학교의 학력 부진문제는 1~2년에 생긴 결과가 아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더욱 강력한 방안을 찾고 적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각자의 꿈과 적성 및 소질이 다르다. 이러한 각자의 다름 속에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이 탁월성



(Excellence) 교육이다.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학생들의 꿈과 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의 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에 따른 최적의 학습내용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성인용 학습 동영상 자료(케이 무크²⁷⁾, 코세라, 에덱스, 유다시티²⁸⁾ 등)를 참고하여 학생용 동영상 학습자료(예: SMOE-mooc)를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TFK²⁹⁾를 조직·활용하는 것이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학교, 지원자, 기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학교는 교사를 요청하고 기부자와 유능한 교사 자원자들이 동참하고 교육청에서는 이 모든 네트워크를 빅데이터를 이용해 관리하는 구조이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지도·관리가 어려운 학교 부적응자 및 학교 중도탈락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팀을 꾸려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배려는 공공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탁월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교육복지대상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등 소수·약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교육지원청을 평생학습의 센터로 구축한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100세 이상이 되어가는 시대에 배움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누구라도 평생교육의 대상이 된다. 교육청은 학교, 교육지원청, 또는 외부 체험학습장 등 평생학습공간을 상설로 마련하고 교육공동체인 학생,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인공지능기반 평생학습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밖 학생들 즉, 학교 중도탈락자,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등 소수·약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통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지원청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은 학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자녀들의 미래사회에 대한 식견과 안목을 가지는 것은 물론 성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소양 등을 갖추는데 교육지

27) 'K-MOOC': 수강인원 무제한,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 웹 기반으로 미리 정한 학습 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임

28) 세계 3대 무크 사이트: 코세라(Coursera), 에덱스(edX), 유다시티(Udacity)

29) 최병삼(2016), 꿈을 설계하는 플랫폼, TFA, p.p. 1~3, TFA(Teach For America, 미국 교육분야의 대표적 사회단체), TFK는 Teach For Korea의 약자임.



원청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단, 1회성으로 끝나는 연수나 교육이 아니라 평생학습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격증 인증이나 학위과정으로 연계도 가능한데 이러한 배움의 욕구와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교육은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유관기관들이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서 양질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3)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인사제도 혁신

첫째,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시대의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자신의 전공으로 미래의 아이들을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전공의 심화 또는 복수전공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서울의 교원들은 모두가 석사학위를 취득(석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증 취득 또는 복수전공)하도록 권장하고 본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원과의 MOU를 체결하거나 교육연수원에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상설로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원의 미래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연찬이 필요하다. 신규교사 연수 이후 3~5년이 지나고 1정 자격연수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는 의무연수가 없다. 생애주기별 연수체제(예: 5년 주기)를 만들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연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속해서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인식제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교사로서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행정업무 및 잡무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인공지능시대에는 행정업무는 인공지능로봇이 하고 교사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상담 등에만 전적으로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사제도 및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시대와 사회가 변하고 교육에 큰 물결이 닥친다고 해도 결국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은 사람이다. 얼마만큼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이 적용되어 변화하는 미래교육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각 기관장 임명 공모제와 교장공모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담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담임을 배치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담임 제도가 적절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교사로서 담임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출산, 육아, 질병 등) 도저히 담임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볼 때 현행의 담임 제도로서는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등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적으로 담임 역할만을 할 수 있는 ‘담임교사전담제’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감, 교장의 인사에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공지능식 인사원칙을 만들어야한다. 단순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특성, 근무이력 등의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고 빅데이터 처리하여 단위학교 발전에 최적인 교원을 배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원들의 역량을 서로 나누고 협업하며 때로는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개 교육청을 4개 권역으로 정하고 권역 내에서 골고루 전보하는 ‘대권역 전보제’ 실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미래교육 관련 기구 체계화

가) 미래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 및 프로세스 체계화

핀란드는 행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정기적인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국정 전반에 걸쳐 미래 연구를 광범위하게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정책 결정이나 프로그램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핀란드 의회는 1992년 미래 예측과 미래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자는 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의회 내에 미래상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정교한 국가 미래 전략 구조와 프로세스를 짜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3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체계가 가동되어, 총리를 중심으로 4년 임기 단위로 출범하는 행정부는 임기 시작 2년 내에 총리실에서 정부 미래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변미리, 2015).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미래 서울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의 미래교육은 비단 서울특별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함께 고민하고 꾸려나갈 문제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 각각 별도의 미래교육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임기 4년 중 임기 시작 2년 내에 서울미래교육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예산 및 미래 전략 관련 협의를 통하여 이를 정책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미래교육센터 운영

서울미래교육과 관련하여 연구를 하고, 정책을 구안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또는 정책 그룹이 상설 운영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연구원 산하에 미래연구센터를 두어 미래 서울 연구를 통해 미래 서울의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교육정책연구소에 가칭 서울미래교육센터를 두어 상시적으로 서울미래교육 연구를 하고, 서울미래교육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지방교육재정 및 단위학교 재정운영 변화

1) 지방교육재원 확대의 필요성

유·초·중등 교육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그 재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 및 지출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재정을 논할 때는 필요로 하는 예산의 규모에 대한 예측도 중요하지만, 소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인공지능시대의 대비 등 교육환경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세입재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재정수요 분야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재정, 다문화 및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교육재정,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재정,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 돌봄 기능 강화, 자유학기제, 학교 폭력 및 안전, 교육환경 개선 및 내진 설계 보강,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정책수요에 대한 추가재원도 필요하다(김병주·이길재, 2016).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 고교의무교육 도입 논의, 취약계층 학생 수 증가 등 과거에 비해 새로운 재정소요 요인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윤홍주, 2012).



2)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2011년 이후 무상급식, 누리과정, 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부금 감소 및 교육복지 사업 증대 등으로 인해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채가 2조 1,623억 원이고, 전국 시·도 교육청의 부채 규모가 17조 3,895억 원³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노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나 직접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III-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2016)

(단위 : 억원)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 20.27%)			교육세분 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금합계
보통교부금(A)	특별교부금	계	(B)	(A+B)	
346,998	14,459	361,457	51,259	398,257	412,716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2,716억 원으로 내국세의 20.27%와 국세분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내국세교부금의 96%와 국세분 교육세를 합한 2016년 보통교부금은 39조 8,257억 원이고, 내국세교부금의 4%로 구성된 특별교부금은 1조 4,459억 원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교육복지사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재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III-3〉 정부 추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정부 추정액 ³¹⁾	40.9	38.9	44.1	46.9	49.7	5.0%
시·도교육청 결산액 (2016년은 예산액)	40.9	39.4	41.3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5: 99),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 한국교육개발원(2014~2016),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r.go.kr/main.do>).

3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r.go.kr/portal/main.do>)

31) 정부추정액은 국회예산정책처, 『2014~2018 NABO 재정 전망』(2014.10)에 따른 것이며, 2015년의 경우 2013년 세수부족에 따른 정산필요분(2.7조원)을 차감한 금액임.

특히, 연도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 누리과정,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및 지방교육채의 규모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복지관련 사업은 증가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감소되었으며, 특히 지방교육채가 대폭 증가되는 여건에서도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III-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주요사업 규모(전국)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2,488	408,123	408,686	394,055
누리과정	12,241	26,496	33,589	39,468
무상급식	21,414	25,767	28,022	27,703
교수학습활동지원	44,426	34,340	30,575	27,558
학교교육여건개선	41,829	40,198	42,281	41,531
지방교육채	98,114	103,851	117,865	173,895

출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main.do>).

따라서, 현행 내국세의 20.27%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해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증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이전수입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무상급식비 등 교육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부족한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방세와 연계해서 지원되는 비법정이전수입의 지원비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이병호, 2016).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측정항목, 측정단위, 단위비용 등)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 예산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규모는 41조원(2016년)인데 이는 정부 총지출규모의 10.7%로 정부재정지출 순위로 보면 3위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법으로 규정되어있다고 하지만 41조원의 정부재정을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체적인 예산심의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만 국가교육정책을 확정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보편성과 합리성이 결



여된 운영형태이다. 교부금 교부방식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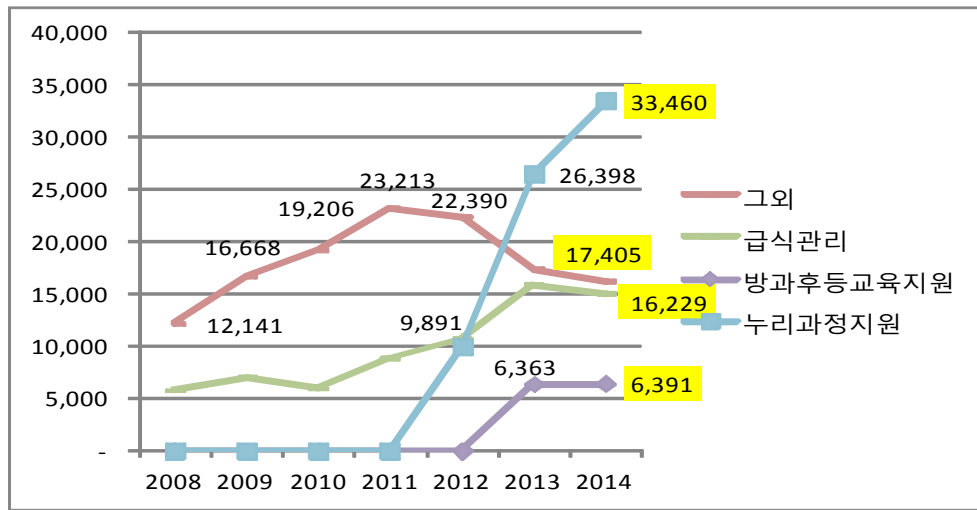
첫째, 보통교부금 배분방식을 확정(시행규칙 개정)할 때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3의 기구(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적용률과 단위비용 등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측정항목의 대부분은 단위비용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거나 단위비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률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즉,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시·도별 보통교부금 배분액에 일정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윤홍주, 2012).

둘째, 특별교부금의 폐지 또는 축소조정이 필요하다. 특별교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비와 같이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재원이다. 특별교부금은 지방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이지만 국가가 특별히 시책사업(60%)을 추진하거나, 지방에서 자체 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는 특별한 현안사업(30%), 또는 재해를 입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10%) 지역의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재원이며, 전체 규모는 1조 4천억 원(2016년)이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하는 데 이를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일은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의 규모와 배분기준에서도 국가시책사업의 경우는 30%이상, 지역교육현안수요는 사업예산의 70% 정도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요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어, 실제로 보통교부금에 포함시켜 교부하여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재정권한을 갖고 있는 현행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3) 지방교육재정 재원배분

지방교육재정은 구조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높은 특징으로 인해 탄력적인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렵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대규모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학교 재난위험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교육 등 미래사회에 발생할 재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효율성이 낮은 정책사업의 정비와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단위 : 억원)



[그림 III-2] 주요 교육복지사업 연도별 추이

현재의 재정여건에서 교육복지 사업을 지금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주요 교육복지사업의 연도별 추이[그림 III-2]를 보면, 교육복지지원비는 2008년 이후 연평균 60.3%가 증가하였고, 교육복지 사업 간에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교육복지 사업의 범위와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육복지 사업의 규모와 수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재원의 배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경비의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본질에 입각한 경비란 ‘중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경비로 조작적인 정의를 할 수도 있다(공은배, 2016).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부가적인 경비)로 OECD는 행정비, 급식비, 기숙사 등의 학생복지비 등을 들고 있다(OECD, 2014). 중핵교육과정에 투자되는 경비의 비중이 OECD 평균은 90.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7.2%로 중핵교육과정 경비로의 분배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공은배, 2016).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많은 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방식에서 개별 학생에 기반한 수업을 지향하는 미래사회에서의 교수·학습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사업의 정비와 복지사업의 조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4) 단위학교 재정운영 체제 변화

첫째, 단기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로 교부하는 교육정책사업(목적사업비)은 총량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교육감 주관의 하향식(Top-Down) 방식의 교육사업 추진 방식을 지양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적 효과가 높은 사업위주로 교육정책사업을 재정비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추가되는 교육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과감한 정비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총량제 운영은 무분별한 사업발생을 방지하고 여유재원을 학교의 자율적 경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전환하여 학교 적정교육비를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기적으로 단위학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사업 선택제는 학교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였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학교기본운영비와는 별도로 단위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사업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체제를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단위학교로 모두 이양하여 학교-지역사회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교육청 단위의 행정기관은 재정사업 중심의 통제·감독 기능에서 교육수요자와 학교현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과와 실적 중심의 교육행정에서 학교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교육체제 변화를 모색할 때 미래교육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학교는 행정개념의 기관이 아니라 단위학교가 스스로 교육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행하고, 이해당사자인 교직원,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책임지는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천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은 지원시스템으로 역할 전환을 준비하고, 학교-지역사회 공동체는 주인의식을 갖고 미래교육 시스템을 주도하는 주체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3. 학교-마을 연계 구상

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4차산업혁명에 대해 많은 미래학자들의 진단은 대체적으로 인공지능(AI)의 발달, 가상현실(VR) 기술의 발달, 인터넷을 통한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사회, 불평등문제, 삶의 불안전성, 고용불안, 사이버범죄 증대, 에너지와 자원 고갈문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의 여러 문제들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래사회에 도래할 많은 사회적 문제, 특히 불평등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생태적 삶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많다. 인공지능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갈 미래에는 더 이상 교육이 지식의 전수가 아닌 새로운 변화에 필요한 지식을 생성하고 적응해가기 위한 지식의 탐구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삶과 연계된 지식 탐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로 병합되어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며, 아이들이 마을의 주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회적 관계망을 일컫는다. 마을과 결합된 교육공간으로서의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아이들이 마을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관계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난관을 경험하고 해결해나가면서 자아를 형성하고 능동적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마을결합형 학교, 학교협동조합 정책 추진과 서울특별시의 마을-학교 상생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민관학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지역의 인적, 물적 교육자원이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면서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교육생태계가 활발하게 형성됨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학교와 마을의 만남이 단기적, 일회성, 시혜적 만남이 아닌 일상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마을교육공동체로 연결되어 좀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동이 펼쳐진다면 학생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



나. 학교-마을 연계 필요성

1) 학교와 마을의 상생적 역할 분담

우리나라 교사들은 오랫동안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각종 공문서 처리와 잡무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연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학교 공간 사용의 수월성 때문에 학교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맡게 된 방과후학교와 돌봄 업무는 교사의 정규 수업과 무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업무 중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학생복지 예산이 학교에 배부됨으로서 복지 예산 사용으로 인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이 수업 외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서 미래 교육에 필요한 교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나 연구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마을교육과정 운영이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와 관심을 저해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과서 중심의 지식교육에서 탈피하여 삶과 연계된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 실천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밖 다양한 마을자원이 결합되어 수업과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교사가 개별적으로 학교 밖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교사가 정규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관련 업무, 방과후학교 업무, 돌봄 업무를 마을로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 교육과정과 마을 자원의 결합을 돕는 역할을 마을이 담당하는 상생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연구와 실천이 강화될 수 있고, 마을은 중요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며 더 나은 교육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불평등 해소

미래사회에는 지금보다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곧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 불평등 해소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많다.

학교에서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에 힘을 쏟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양한 가정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모두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돌봄실 운영,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상 인원이 한정되어 복지 혜택을 받는 학생이 제한적이며 돌봄 등 복지 관련 기관 간 관계망이 형성되지 못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정·학교·마음이 마을교육공동체로 연결되고 아이들을 위한 전면적 돌봄과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이들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한 학생도 소외나 배제됨이 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다.

3)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

오랜 세월동안 마을은 삶의 기술과 지혜를 배우는 비형식적 배움의 공간이었으나 산업화 사회로의 전환기에 대량의 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게 되면서 학교와 마을이 분리되고 경계가 강화되어 학교는 마을 속의 섬처럼 존재해 왔다. 학교와 마을의 분리는 아이들의 삶과 무관한 지식중심의 교육을 심화시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규 수업시간 또는 하교 후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서 다양한 이웃이나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마을이 삶의 배움터가 될 때 아이들은 마을공동체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있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너머 마을 속에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의 소통방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삶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 미래지향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1) 다층적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이 잘 형성되고 마을이 평생교육의 배움터가 되기 위해서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다양한 주체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자적으로 교육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담당해 왔던 교육청, 구청, 민간이 함께 모여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논의하며 체계화시켜 사업의 중복, 단기적 일회성 사업 남발, 관주도의 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실행을 통해 마



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자치구 단위의 민관학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의 협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마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차원의 단위의 민관학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자치구 단위의 민관학 거버넌스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중간단위 거버넌스의 역할을 돕고, 중간단위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촘촘하게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분리의 단점을 극복하고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자치구의 관련 담당자와 민의 대표가 함께 운영하는 조직체마다 만들어 상시적 지원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간단위의 거버넌스는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센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유·초·중·고를 포괄하여 관할 지역 내의 마을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단위학교가 가지는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마을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간단위 거버넌스가 마을교육생태계 구축의 중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센터의 적극적 의지와 관할 구역을 잘 아는 업무 담당자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마다 마을활동가 중 적임자를 선발, 배치하여 중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학교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간단위 거버넌스가 자치센터 중심이라면 학교단위에서의 거버넌스도 필요하다. 학교단위에서는 관리자, 담당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학부모 대표, 마을대표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단위 거버넌스가 내실 있게 작동되고 실질적인 학교-마을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3주체 교사·학생·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주체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자치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직되고 폐쇄적인 학교 문화는 마을과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 학교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별 교장 선출, 교사의 장기 근무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마을 주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자격요건을 학구 내의 거주민 중 대표성을 갖는 사람으로 하여 학교와 마을 연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역별 사회적 교육협동조합 구축

최근 학교매점협동조합, 학교옥상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방과후학교 협동조합 등

학교협동조합이 속속 만들어 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지만 거대 자본에 맞서 건실하게 뿌리 내리기에는 운영전략과 시장 확보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교육협동조합은 상생적 경제모델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안착을 위해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미 마을공동체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활동 경험이 축적되었고, 주민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조직화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여행, 졸업 앨범 제작, 급식 식자재 구입,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실 운영, 매점 운영, 현장 체험학습, 학생 동아리활동 지원, 대안교실 운영, 청소년 단체 운영, 문예체 등 비교과 영역 수업지원, 학부모 연수 강좌 운영, 캠프 등을 지역 내에 있는 거점별 교육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한다면 공공성을 담보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로 교사의 업무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이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협동조합이 교육관련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면 마을교육공동체 역할의 심화, 풍부화를 앞당길 것이다.

미래사회에는 정보의 독점과 일자리 감소로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협동조합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면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성과 자생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마을주민의 평등한 참여와 공정한 경제활동으로 마을을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3) 마을교육과정 개발

우리나라는 국정, 검인정 교과서로 전국의 모든 지역 교실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교과서 중 지역화 교과서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서가 유일하다.

표준화된 교과서에 의존한 수업은 삶과 유리된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편협화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역사성이 반영된 마을교육과정이 구축되어 일상적 수업이 마을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밖 학습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학교와 교육활동 속에서 가급적 일상성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태도가 필요하며 가정과 학교가 자리 잡은 지리적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마을이 학교와 소통하며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마을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면 학생들의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이 확대되어 마을이라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의 체험과 관찰, 탐구활동이 활발해져 지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을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은 지역사회의 인적 문화적 환경적 역사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마을을 통한 교육,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과 지역에 대해 배움으로서 마을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는 마을을 위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마을교육과정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마을교육공동체나 민관학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마을과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공간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접목시켜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4) 마을연계 직업체험학교 운영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과 기술의 효용주기가 가파른 속도로 짧아지고 있어서 학교교육도 과거의 주입식 지식 전달 방식을 벗어나 생산적인 학습경험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욕구와 흥미를 고려한 학습을 위해 지역 배움터를 통한 직업학교를 설립해 볼 수도 있겠다.

현재 운영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입학 후 자신의 진로를 고려한 학과를 선택해서 학교 수업과 학교 밖 실습교육 등 3년 동안 학과 공부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학과 외의 분야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 또 대부분의 학습이 학교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이 정형화되기 쉽다.

지역 배움터를 통한 직업체험학교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관심과 흥미 있는 분야 3~4개를 정하여 기본 학습은 학교에서 하고, 일주일에 2~3회는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실습하면서 한 분야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다른 분야를 같은 방식으로 학습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 간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분야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는 지역의 현장과 전문가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MOU를 맺어 배움터로 지정하고, 수시 현장 방문을 통해 학생들

에게 유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정해진 공간과 시간표로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을 최소화하고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생들의 몰입도와 흥미를 높여 훨씬 유익하고 생산적 학습이 될 것이다.

직업체험학교는 정규학교과정과는 별도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1년 동안 진로를 모색하는 기간을 통하여 자신이 평소 관심 있는 영역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현장을 통한 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진로나 학과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1년제 직업체험학교 운영시스템도 마련한다.

지역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진로교육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장, 전시관 등 다양한 청소년 대상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또한 학부모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다양한 주민 모임이 있으며, 문화예술 전문가나 장인 등 인적 자원이 산재해 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교육을 매개로한 조직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인적·물적 자원들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 각자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런 자원들을 발굴하고 조직화해서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풍부하게 만들면 직업체험학교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5) 마을학교를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미래사회에는 정형화된 학습방식보다는 다양한 학점제, 프로젝트 학습,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등 유연한 평생학습체제가 일반화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마을학교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일상적 배움의 기회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최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로 대안적 삶과 생태적 삶을 추구하면서 상생과 관계 맺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배움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형태의 마을학교가 등장하였다.

마을학교는 일상의 삶과 배움을 통해 성인과 아동이 함께 성장하는 학습과정을 구현하며 기능적 공간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학습연합체로 운영될 수 있다. 학교와의 경계가 사라지고 여러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와 학점의 교류도 활발해져 학교를 통한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다.

열린 학습 공간으로서의 마을학교는 기존의 경직된 교육체제를 대체할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마을학교 개설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마을학교의 성공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미래교육체제 정책과제 제안

□ 연구과제명(1): 실천공동체(CoP)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 배경 및 필요성

미래교육에서는 학교와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교육과정에 의한 정형화된 학습(formal learning)의 비중은 감소하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 SNS 등을 통해 학습하는 비정형(informal learning) 학습이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구성원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는 실천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실천공동체는 부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다. 초연결사회의 미래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공동체를 지원하는 새로운 학습공간인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연구 내용

-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현황 분석
- 공동관심주제별로 다양한 실천공동체(CoP) 조직 및 활동(학생CoP, 교사CoP, 학생+교사CoP, 학부모CoP, 학교·마을연계CoP, 교육행정직CoP, 교육전문직CoP 등)
- 새로운 개념의 실천공동체(CoP) 지원 플랫폼 모델 개발
- 플랫폼 구축 운영 방안 연구(프로그램, 퍼실리테이터 교육, 매뉴얼 등)
- 인공지능시대의 플랫폼 활용 방안 및 구축의 제한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정보를 기초로 서울교육 정책수립에 피드백 등)

□ 기대 효과

-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시·공간 구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 주체가 되는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 형성
- 학생은 학습의 주체자로 토의·토론·참여·협력을 통하여 집단지성 도출 경험 및 미래 핵심역량 함양
- 교육청 간, 교육청 내 CoP 활성화로 업무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활동을 공유
- 플랫폼 내에서의 학교와 마을, 교육청 간의 CoP 활동을 통해 협업 활성화
- 플랫폼 운영을 통하여 데이터 축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미래 교육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정책 과제 개발 가능

□ 연구과제명[2]: 미래지향적인 교육청 조직 문화 혁신 방안 연구

□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수직적 위계에 기반을 둔 관료 성격의 조직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유연성과 창조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조직은 구성원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가로막는 요소이다. 위계적 관료제 조직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신³²⁾을 시도하면서 조직문화의 활력을 불어넣고 창조성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처럼 우리 교육청에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그에 따른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이 필요하다.³³⁾

구성원들이 동기를 갖고 각자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공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현재의 계선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 부서간의 분절적 업무방식에서 협업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연구 내용

- 개방형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조직 문화 혁신 방안
- 교육(지원)청의 부서 내, 부서 간 협업 활성화 방안
-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 방안

□ 기대 효과

- 구성원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발휘되는 수평적, 비판적 조직 문화 확립
- 교육 행정 본연의 지원 기능 확립을 통해 교원 및 학부모 신뢰도 제고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기구로서의 교육청 위상 정립

32) 직급의 단순화, 임직원간의 호칭 통일, 필요 인원·전원 발언·1시간 이내의 효율적 회의 운영, 계획 휴가, 복장 자율화 등, Castells, 2000, 권재원 외 2인, 2015에서 재인용.

33)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546380&memberNo=844973&vType=VERTICAL> 2016. 10. 14.

IV

미래교육의제



IV 미래교육의제

교육의 중앙 집중화 현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교육적 난제들이 국가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지방화, 분권화, 자율화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미래사회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사·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수준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담론화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수준 교육의제는 미래역량의 지원과 미래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 법률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을 미래교육준비협의체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관계자 토론을 거치면서 선정하였다.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서 발행 제도 개편에서는 교수·학습의 기본 단위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확장하자는 제안을 담는다. 평생교육체제 구축에서는 현재 난립하고 있는 평생교육지원체제가 미래사회에서도 유효한지, 대안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학제 개편에서는 6-3-3-4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학제가 사회변화 및 아이들의 발달을 적합하게 담아내고 있는지 검토한다. 평등한 고교체제 구현, 대학입시 및 학생평가 개선에서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삶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제안한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교육 플랫폼으로써 학교 공간의 구현, 교육행정의 혁신을 가져오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미래역량과 미래교육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됨으로써 교육관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자료는 국가수준 교육의제를 사회적으로 담론화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각 영역의 선정과 배경 설명, 그리고 간단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향후 각 영역별로 더욱 정교하고 풍부한 연구와 제안이 요청된다.

1. 국가교육과정

가. 문제의식

1945년 9월 18일 미군정부 학무국의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 이후, 1954년(단기 4287년) 4월 20일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을 제정·공표한 시기를 우리는 1차 교육과정기로 명명한다. 수시 개정에 따른 부분 개정을 제외한다면, 총론을 포함한 전면 개정만 현재까지 10차례에 이르고 있다. 1980년 이후로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적용 시기를 기준으로 9년(2000년~2008년)이었지만, 2007개정교육과정은 총론 2년(2009년~2010년), 각론 4년(2009년~2012년)이라는 최단명 교육과정이었다. 왜 국가교육과정 운영의 역사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미래교육의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분명히 정리해야 할 부분이다.

2007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경우 1~2학년에는 7차 교육과정으로, 3~4학년에는 2007개정교육과정으로, 5~6학년에는 2009개정교육과정 총론에 2007개정 각론으로, 중학교 1학년에는 2009개정교육과정 총론에 2011개정 각론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에 수시 개정까지 덧붙인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6차 교육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제안되었던 ‘학생 중심’이라는 방향이, 7차 교육과정 성격에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것이 현장적 실천과 동떨어진 레토릭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2차 교육과정기부터 교육의 지역화를 언급했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며 교육과정 분권화와 지역화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시작한 것은 6차 교육과정기부터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권화와 지역화는 요원하다. 교육과정 분권화나 지역화가 지역화 교과서를 인정도서로 편찬하는 것 외에 교육의 현장에 거의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시·도 교육청의 지침이 왜 형식적인 관례로 흘렀을까? 이 문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이 운용할 수 있는 자율성의 폭은 얼마나 되는가와 연결되어 있다. 자율성이 없는데 자율화를 하라고 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국 모순의 순환 구조다. 교육과정 자율화와 분권화는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와 안정화 문제와 연동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초연결사회다. 학생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 전체의 일원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모든 개인의 욕구와 필요, 능력



과 수준을 고려한 학습자 개인에 대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험을 통해 체화하는 학습(learning by doing), 一자형 학습이 아닌 丁자형 또는 工자형 학습, 맥락적 학습(contextual learning)이 이루어져야 한다(김태완, 2015). 현재처럼 국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단선화되고 일방적, 하향식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불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요청하고 있다.

나.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구상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구상은 중앙집중적인 획일화 및 표준화에 대한 분권화, 자율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학년-학급이라는 단선적, 일방적, 하향식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단순히 상향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을 넘어서 초연결을 상상할 수 있는 자율권이 학생-교사-학교에 주어져야 하며,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이 서로 넘나들 수 있는 유연한 체제를 상상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의 구축은 ‘학생-교사-학교’를 보는 관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교사-학교를 지도와 통제, 관리와 감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달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지닌 교육의 주체로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선이다. 이것은 작동방식의 변화이며 언어와 문화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매우 의식적인 자기 점검의 노력을 지속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은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는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비전을 넘어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실질적인 평생학습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학점 관리와 직업 교육, 재교육을 넘어서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홍익인간의 이념,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인간다운 삶, 민주국가,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국가는 교육과정의 프레임만 제공하고 단위학교가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기를 거쳐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개인별 학습 계획(ILP: Individualized Learning Plan, 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 IEP: Individual Educational Plan)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셋째, 국가 교육과정 계획이 학습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기치 하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매우 세세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앙 예산의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예산의 분배, 이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넷째, 국가교육과정은 모든 국민이 세계시민으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최소의 성취 기준만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과 최소 성취 기준은 리터러시(literacy)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년군별(심지어 학기별), 교과별, 학교급별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요구한다.

다섯째, 실질적인 학년군제 교육과정, 교과군 교육과정 정착이라는 이행기³⁴⁾를 넘어 무학년제를 지향하는 교육과정, 필수 교과나 기초 교과라는 통념을 넘어서는 ‘학습’을 상상해야 한다. 열린교육자원(OER)을 비롯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공작소 혹은 스튜디오 형태의 학교라는 공간적 상상력과 함께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체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나 합의 과정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권력의지의 작동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도 예측가능성도 없이 바뀌는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적 숙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고, 교육 전문가인 교사와 연구자들의 현장성과 실천적 이론으로 검증받는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두 방향의 요구는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포함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우려 역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교과서 발행제도 개편

모두를 위한 교육과 평생학습지원체제로서의 국가교육과정, 세계시민적 기초 소양을 위한 최소 성취기준과 개인별 학습 계획을 지원하는 교육체제 구축은 단위학교로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이 이양되는 이행기를 요구한다. 이 과정은 미래교육이 학습

34) 국가교육과정 문서에서만 학년군제, 교과군제를 강조하고 있지 학교현장은 여전히 학기제, 교과별 교육과정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나 평가 체제 역시 학년군제와 교과군제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개인별 학습 계획(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교사)으로 구축하는 것은 맥락적 학습을 통한 맥락적 사고 능력의 함양,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표층+심층학습의 체화라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는 교사의 차원에서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삶을 가꾸는 교육’이라는 아포리즘과 함께 긴 현장적 실천의 역사가 있다.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과 관계부터 시작된다. 인지적 역량 못지않게 비인지적 역량이 강조되는 미래사회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라는 자기 경험과 성찰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인간을 요구한다.³⁵⁾

〈표 IV-1〉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세 가지 유형과 주요 특징(김재춘 외, 2004)

구분	‘약한’의미의 자유발행제	‘보통’의미의 자유발행제	‘강한’의미의 자유발행제
교과서 저작 근거	국가 교육과정의 지침과 인정 심사 기준	국가 교육과정의 최소한의 지침	집필자의 전문성에 근거한 교육적 판단
교과서 저작·발행	민간출판사	민간출판사	민간출판사/교사
교과서 발행 절차	저작→발행→인정	저작→발행→사용	비교과용 도서 사용 가능
교과서 채택·사용	인정도서목록에 한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민간출판사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학교 자체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교과서의 범주	인정도서	국가 지침을 준수하여 발행된 모든 민간출판 교과서	모든 교육적 자료

35) 인간 발달과 학습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요청되었던 개별화교육·맞춤형교육·개인별교육(differentiation)이 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으로 변질되었던 역사가 있다. 이는 주체의 호명에서 실패한 사례이다. 여기서 주체는 교사-교육시스템이 아니라 학생이었음에도 여전히 교사-교육시스템을 중심으로 사고했기 때문이다. 다시 첫 번째 요청으로 돌아가야 한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학습자를 의식의 전면에 세워야 한다. ‘모든 인간은 평생학습자’라는 관점의 전환은 학령기의 학생 뿐 아니라 교사 역시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발달하는 존재로 자기 전환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 자신이 학습자이면서 학생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역할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선생(先生)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교사도 학습하는 능력을 겸비하는 새로운 전문성이 요청된다.

개인별 학습 계획(학생)의 실현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교사)의 운영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획일적인 국가교육과정과 함께 교수학습자료로서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법·제도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으로 교과서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이 촉발되었지만 교과서 발행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곽병선 외, 1986; 김재춘 외, 2004).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네 가지 교과서 발행제도 중에서 자유발행제를 제외한 국정제, 검정제를 기본으로 인정제를 병용하는 체제이다. 국가가 교과서의 저작이나 발행, 사용 등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자율발행제는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³⁶⁾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³⁷⁾이 그렇다. 추격산업화 시대에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겠지만, 초연결, 빅데이터, 인공지능, 탈중개화 시대에 과연 이런 국정교과서가 살아남기는 할 수 있는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한다.

2004년에 이미 국가정책기획위원회에 보고된 “교과서 편제·집필·검인정 채택에 관한 연구”에 국정도서의 순차적 검정체제 전환, 교과서 검정 방식의 수시검정체제로 전환 등이 제안되었지만 미래교육 전망 속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개정과 함께 단계적으로 강한 의미의 자유발행제가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초연결성, 공유경제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시민적인 기초소양 중 하나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백억, 몇 천억짜리 디지털 교과서로, 17시간짜리 코딩 교육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방식은 2차 산업혁명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강한 의미의 자유발행제로의 전환이 없다면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과 개인별 학습 계획 지원이라는 미래교육적 상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36)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도서를 최초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8.>



라. 쟁점 및 제언

평생학습지원체제로의 국가교육과정 개편과 사회적 합의 기구나 절차의 마련, 세 계시민적 기초 소양을 위한 리터러시 개념의 최소 성취기준과 개인별 학습 계획을 지원하는 교육체제 구축의 과정에는 다양한 쟁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국가 사회적 역량을 모아 이를 민주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모두를 위한 학습지원체제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 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최소 성취 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사회적 요구(각종 법률 제·개정으로 교육과정의 정상 운 영을 침해하는 필수교육내용)를 조정해야 한다면 이를 위한 별도의 정책 연구가 필 요하다. 법률로 강제되고 있는 필수교육내용의 수준과 범위, 통폐합되어야 할 법률, 이런 사회적 요구를 국가교육과정에서 수용하는 방식의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 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 평생학습 체제

가. 문제의식

다양한 평생교육 진흥 정책에도 의해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평균 수준이다.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0.6%(2015년)로 OECD 평균(40.4%) 수준이다. 소득·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차이가 크고, 온·오프라인 평생 교육 연계 부족으로 주민의 학습권 기회 접근에 한계가 있다. 월소득 15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 간 평생학습 참여율이 각각 30.1%와 44.1%로 14% 차이가 났으며, 중졸이하와 대졸이상 간 평생학습 참여율은 각각 22.0%와 40.9%로 18.9% 차이가 났다.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평생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령기 학생 위주의 대학교육 등으로 인해 성인의 다양한 대학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고졸 취업자는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아,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도 계속 이어나가기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력 및 대학 입학자원은 줄고 있으나 고학력으로 인한 입직연령 증대로 국가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 '18학년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고, '23학년에는 고교졸업자수가 39만명으로 현재보다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대학 과잉 진학은 '고졸자 일자리 열악 → 대학진학 필수화 → 대학 과잉 진학 → 대졸자 하향취업 → 고졸자 취업기회 감소 및 열악한 일자리 취업'이라는 심각한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 조사 결과 한국학생의 읽기 능력은 세계 최상위급이지만 사회활동이나 직업수행을 위한 실용적 정보를 습득하는 독해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 조사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에 비해 '공적', '직업적' 읽기 문항에서 공적 문항 정답률은 11%포인트, 직업적 문항은 7%포인트 가량 낮았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 계획의 수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 기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기에 2000년 교육부 발표 실업고 육성대책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특성화고 육성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나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곳이 없다.



학교에서 일터로의 원활한 이행과 일터에서 학교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제18조에 의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 계획의 수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 기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기에 조례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성 있다.

나. 평생교육체제 구축의 방향

1) 평생교육 통합지원 체제 구축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 구축으로 평생학습 온·오프라인 지원 및 예산 중복 없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 평생교육 기획 및 실행과 평가 시스템 확립으로 평생교육 내실화를 제고해야 한다.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중앙의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계하되 중앙의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 소속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의 평생교육 행정부서인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이 교육청 평생교육국, 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서울고용센터 등을 각각 관할하나 직업교육 및 훈련분야에서 업무 중복영역이 발생하므로 교육부장관 소속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업무인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 내실화를 위해 시행령에 의한 실무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실무추진기구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교육 유관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이며,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간사 1명이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

한 사항,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심의 자료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 의한 평생교육 실무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2009년 평생교육법 개정이후 법과 제도의 정비는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 부처별로 평생교육업무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평생학습관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평생교육 실천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12개 유관기관 차관급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평생교육법 제10조에 의한 평생교육지원업무의 협력과 조정을 하도록 하고, 평생교육 실무추진기구가 평생교육 협력과 조정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한 다음 협력과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평생교육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거점 기관 지정 및 중등교육기관-지자체-고등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7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시·군·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있으나 지역 평생교육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거점 기관 지정 및 지역 평생교육 기관간 산·학·관협력 시스템이 없다. 또한 교육청도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연계할 교육감 직속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을 뒷받침할 평생교육 실무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지역별 역할을 위임받아 서울특별시 단위의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서 평생교육 및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평생교육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감 산하에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및 평생교육 실무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가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교육, 교육청 및 지원청과 학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학생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즉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과 지역사회 연계교육 등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고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진흥원(법인)이 있으나 평생교육관련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므로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평생교육협력팀을 만들어 학교 내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평생교육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성인일반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원, 성인직업교육을 담당하는 노동부 산하 폴리텍 직업과정, 고용을 위한 기업간 협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 지역 평생교육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거점 기관(기구)이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진흥원(법인)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2) 평생교육 범위 재설정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을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는 평생교육의 범위를 광역화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전기교육, 성인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거점 중·고교, 거점 평생학습관, 거점대학 선정·지원

평생교육 여건을 갖춘 학교 및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평생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학교밖 청소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도록 한다.

고졸 선취업자 및 대졸 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직무전환 및 직무능력 향상 제고가 가능한 평생교육 거점 대학 선정 및 지원으로 고졸자 및 대졸자에 대한 평생학습 및 직무능력 제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4) 경력·자격·교육훈련 과정의 학점 인정 확대

기업 경력, 자격 취득 등을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같은 일정 기준에 의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는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연계한다.

5) 선취업 후진학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평생학습비 소득공제 확대

현재 학점은행제 관련 학습비에 한해 시행중인 소득공제 범위를 평생교육기관의 성인 대상 강좌로 점진적 확대 및 선취업 후진학 참여 기업에 대한 고용훈련기금을 지원한다. 현재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573개)의 평가인정된 교육과정의 학습비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가 시행중이다(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 2004년부터 적용).

6)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및 산하 기구 구성·운영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관심 미흡으로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및 산하 기구가 직업교육에 대한 노사정협의의 틀이며, 직업교육을 기획·조정하는 컨트롤타워 및 직업교육과 고용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직업교육 : 교육부 산하 전문대, 특성화고,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 직업학원, 지경부 산하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산하 기술교육원 등에서 실시, 고용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등에서 안내, 교양교육 및 인문학 교육은 도서관,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

7) 학교 밖 청소년, 부적응 학생,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평생직업교육 지원

소질, 적성 탐색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으로 목적의식 함양,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기관과 연계한 소양교육과 기술교육으로 직업 능력 함양 및 경제 자립 능력 제고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팀, 지방고용노동청과 연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쟁점 및 제언

1)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 운영 개선

저출산·노령화 시대에 학령기 학생 위주의 선발 및 교육으로 인해 평생교육을 확대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고, 평생교육 수요는 증가하나 후진학 시스템은 미흡하다. 선취업-후진학, 평생학습 체제로의 획기적 개편이 필요하다.



2) 학력-교육훈련-자격 연계 방안 구축

경력-교육훈련 이력을 통합·누적 관리하여 자격취득 및 고용시장 진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을 상호 연계한다.

3) 교육부·교육감 산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및 평생교육 실무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내실 있게 심의하도록 하려면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산하에 평생교육 실무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며, 교육감 산하에도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및 평생교육 실무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3. 학교 체제

가. 문제의식

1) 우리나라 현행 학교체제

현행 학교체제는 광복 이후 미군정 시대와 정부 수립시기를 거치면서 6-3-3-4제를 근간으로 하는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였고 기본 골격에는 큰 변화 없이 일부 학교 유형들이 신설되거나 통폐합 되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1980년대 특수목적형 고교 신설, 2002년 자립형 사립학교 신설, 2010년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특목고 마이스터고 신설). 미래 학교체제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체제를 결합하는 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학제 체제 및 개편에 대한 논란

사회변화의 하나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용이 일반화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 학교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평생학습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종전의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체제가 수요자에 민감한 교육체제(demand-sensitive systems)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교육체제의 근간인 학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2006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제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나 그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2006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제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전문가 협의회, 주요국 학제 분석, 학제 발전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미래 학제 개편 대안으로 유-5-3-4-4제를 제시하고, 유아교육 개편방안, 고등학교 계열은 통합하고, 고교 유형은 다양화하는 방안, 평생학습제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을 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유-5-3-4-4제는 많은 반향만 일으키고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1950년대에 수립된 학제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것처럼 개편된 학제는 교육계에 50년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불리 개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0년 전 미래 학제 개편 연구에서 교육체제의 주요 변화로 학령인구의 감소, 공교육 위기의 지속, 자기 주도적 학습과 문제해결력 등의 강조와 함께 국민들의 평생학습 수요에 따른 학교 역할 제고, 국민의 평생학습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크게 확대되고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현재에도 여전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교육체제의 주요 변화 요인이 될 것이다.

10년 전 예측과 변화된 것이 있다면 인성교육 및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는 것과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학제의 기본 골격 보다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제의 기본 골격 변화에 따른 혼란 보다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더 강한 것이 현실이다. 향후 미래의 학교체제에 관한 사항은 미래 학제 개편 연구에서 제시된 유-5-3-4-4제를 도입하는 것이 방점을 둘 것인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는 것에 방점을 둘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나. 학교 체제 개편의 방향

1) 미래 학제 개편 연구에서 제시된 유-5-3-4-4제 도입 여부 검토

미래 학제 개편 연구에서 제시된 유-5-3-4-4제는 수업연한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학제 개편의 취지를 많이 반영하고, 장단점 비교에서도 비교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비교적 많이 지닌 개편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육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과거 여러 차례 이루어진 학제 개편안에서도 가장 많이 제안된 바 있는 방안이다.

유-5-3-4-4제는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고,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는 안으로 수학연한이 너무 긴 초등학교의 교육연한을 단축시켜 초등학교 하급학년 학생들과 상급학년 학생들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학제에서는 고등학교 4년 과정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고등학교 전반기 2년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 후반기 2년은 선택과정 중심으로 운영하여 진학 및 취업 준비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진로 분화가 이루어지던 기존 6-3-3-4학제에 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교육의 토대 위에 고등학교 전반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한 진로탐색·설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다 신중한 진로선택이 가능하다. 진로선택의 시기를 연기함으로써 현재 충분한 탐색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조기선별에서 비롯되는 학생들의 재능 낭비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고등학교 전반 2년 동안은 일반계고 및 특성화고 모두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도록 하되 고등학교 2학기 말에 일반계고 및 특성화고 계열 간 이동을 총 정원의 10~20% 내외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2006년 미래 학제 개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내에 진학 교육과정과 취업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계열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모든 고교에 취업 교육과정을 두면 시설 및 기자재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고, 같은 학교 내에서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강조하면 일체감을 갖지 못해 진로지도가 어려울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과잉학력으로 인한 하향취업과 늦은 입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함께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내에 진학 교육과정과 취업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미국식 종합고식 운영체제는 고졸 취업을 어렵게 하여 과잉학력과 늦은 입직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과잉학력(42%)에 따른 노동시장 진출 지연 기회비용은 연간 최대 19조원, 입시 사교육비까지 고려할 경우 기회비용은 39.1조원(GDP 3.2%)이며(삼성경제연구소, 2012), 대졸 하향취업자 수는 37,065명(2013), 37,025명(2014), 36,890명(2015)로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한국고용정보원).

따라서 종합고 형태의 운영보다 현재처럼 일반고 및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하되 일반고 및 특성화고 모두 1학년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의 형태로 운영하고, 일반고 및 특성화고 모두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일반고 및 특성화고 교류 강화(일반계고 학생의 특성화고에서의 실습, 특성화고 1학년 전공별 순환실습),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특성화고에서의 진로직업체험 실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 비율(%)이 한국 19(2015), OECD 평균 47, 영국 39, 호주 50, 독일 48, 일본 23, 중국 53, 인도네시아 43으로 나타났으며(OECD, 2013), 대학진학률(2015년 기준)이 한국 71%, OECD 평균 58%로 나타났다는 것과 저출산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학력에 의한 입직연령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대학 진학률 완화 및 특성화고 비중 확대를 통한 조기 입직을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현행 학제 유지와 보완 방안 모색

국민공통교육의 성격을 학제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적극반영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공통교육을 의무화한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인 고1까지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교육 내용을 같게 편성하여 고1에서 상호 전학이 용이하게 한다(2009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특성화고는 6~7단위 내에서 전문교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고교에 학교급의 성격에 맞는 진로교육 과정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적합한 진로로 유도하고, 자유학기제와 같이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자신의 꿈, 소질, 적성, 진로를 찾고, 창의성·인성·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사



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자원 제공 의무화, 산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한다.

고교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의 단위수를 50% 이내로 제한하고 대학입학수학능력 시험 및 입시에서 국어, 영어, 수학 비중을 60% 이내로 제한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통한 전인적인 발달을 유도한다.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 배치, 승진 시스템 구축과 학교 내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결과(교육훈련 이수, 자격증 취득, 현장경력 등)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수준체계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도입으로 학력과 학벌보다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현행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는 입시를 대비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과다 증배 편성 지양하고, 기초 교과는 교과 총이수단위의 50% 이내 편성으로 되어 있으나 입시에서 국어, 수학,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의 과다에 따른 국어, 수학, 영어 몰입교육으로 전인적인 발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입시에서 국어, 수학,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의 조정이 필요하다.

학력과 학벌보다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 807개를 개발하였고, 교육부가 2013년부터 2015년 3년에 걸쳐 777개의 NCS 학습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을 통해 ‘아는 직업교육’에서 ‘할 줄 아는 직업교육’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학교가 기업에서 원하는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인 NQF(한국형 국가역량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NCS와 연계한 인력의 채용, 배치, 승진은 초기 도입 단계에 불과하고, 학력, 자격, 현장경력, 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의 상호 연계는 논의 단계에 있다. 따라서 학벌이 아닌 직무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NQF 구축이 필요하다.

외고, 자사고와 같은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보다는 혁신학교, 오디세이 학교와 같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보완할 할 수 있는 학교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가 외고, 자사고와 같은 학교와 혁신학교, 오디세이 학교인데 외고, 자사고 정책은 교육다양성 제고 및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였다기보다는 일반고 교육력 저하라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면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 중·고교 교사 5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 교사의 92.7%가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했다는 데 동의한다



고 답했다. 따라서 외고, 자사고의 내실화를 유도하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외고, 자사고는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 주체들의 협력으로 학교 문호를 새롭게 창출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 체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인 혁신학교는 자발성, 민주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 등에 기반한 학교 혁신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데 일정 부분 성공하였으나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혁신교육의 질을 높이고 역량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다소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 보다는 내실화를 유도하고 혁신학교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일반학교에 접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고교 자유학년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디세이 학교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살펴볼 시간을 열어주었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협력해 새로운 교육의 물꼬를 튼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으며, 일반 교과와 프로젝트, 문화예술, 인턴십, 공방, 시민참여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으로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의 '학력인정 학교'로 주목받고 있으나 원래 다니던 학교의 2학년으로 진급할 때의 적응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오디세이 학교 프로그램 이수자의 기존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오디세이 학교의 프로그램과 철학을 일반 학교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오디세이 학교 구성원인 학생 94%, 학부모 91%가 응답한 5점 척도의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만족도가 학생 3.91, 학부모 4.26으로 오디세이학교 생활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오디세이 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보완으로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협력하는 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 쟁점 및 제언

1) 대학입시(수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 개선

기초교과(국·영·수)가 교과군 총이수단위(180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하고, 대학 입시에서 기초교과(국·영·수)의 비중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되 기초교과(국·영·수) 중심의 교육 탈피하고 진로 직업 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자·덕·체의 전인교육 지향해야 한다.



2) 과잉학력의 악순환 차단

지금의 대학 과잉진학은 ‘고졸자 일자리 열악 → 대학진학 필수화 → 대학 과잉진학 → 대졸자 하향취업 → 고졸자 취업기회 감소 및 열악한 일자리 취업’이라는 심각한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도한 사교육비가 노년의 빈곤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졸자 일자리의 질 보장과 지속 가능한 종합적인 처방과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에서는 과잉학력으로 인해 GDP 성장률 1% 상승 기회의 상실이라는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에서는 과잉 대학 진학으로 대학교육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대학진학률과 인적자본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는 1991년부터 크게 약화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 0.96%를 정점으로 2011년 0.86%까지 하락했고, 최대 42%로 추정되는 대졸 과잉학력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진 결과 2009년 이후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는 것이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과잉학력으로 인한 1인당 기회비용은 1억 2,000만원에 달하고, 대졸 과잉학력자 42%가 대학진학 대신 취업하여 생산 활동을 할 경우 GDP 성장률은 1.01%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과잉학력의 악순환 차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3) 소질과 적성 및 능력에 의해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대졸과 고졸,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차를 완화하고, 학부모 인식 전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질과 적성과 능력에 의해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4. 일반고 중심의 평등한 고교체제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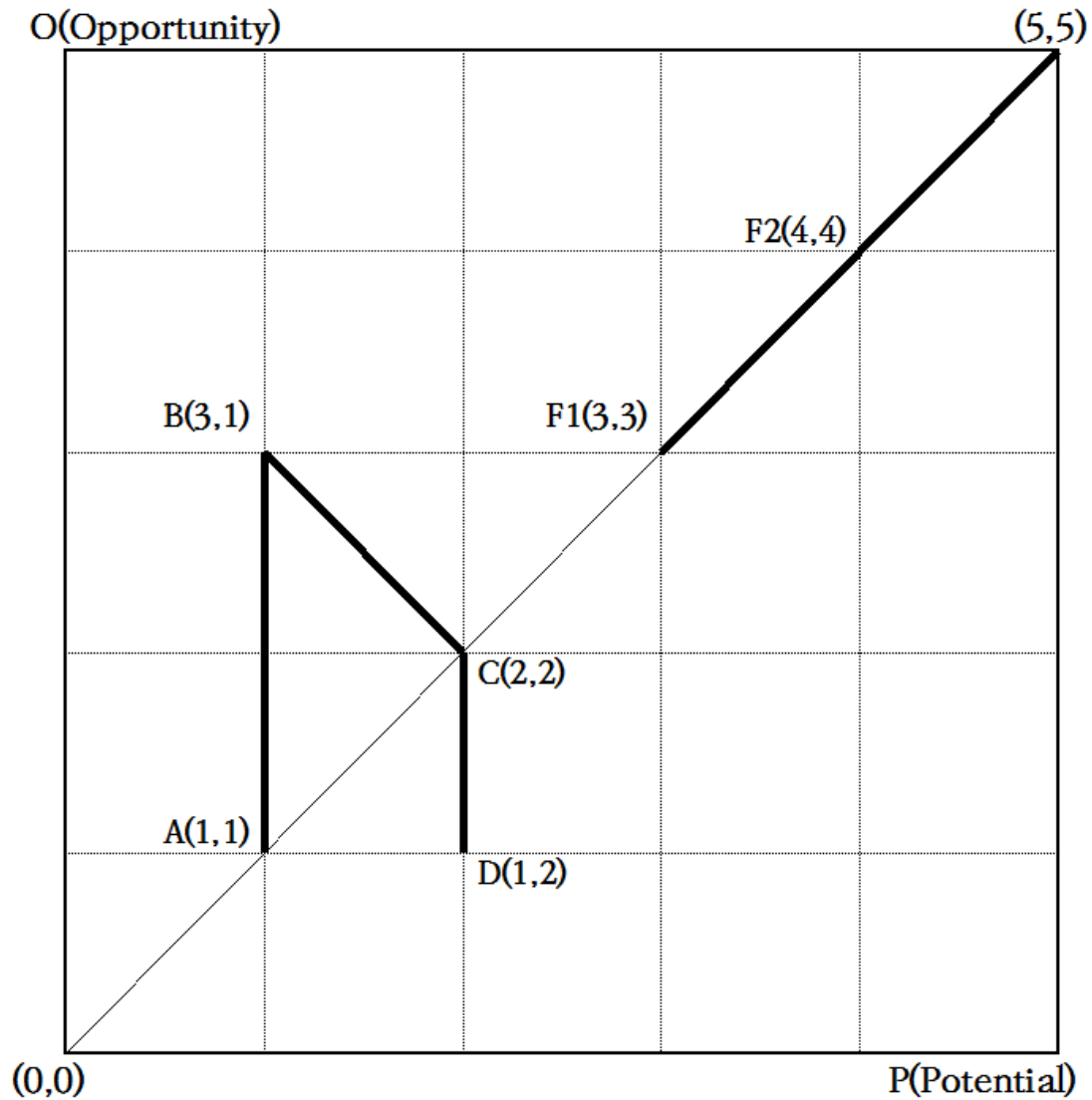
가. 문제의식: 헌법 제31조 제1항과 고교체제

현재의 고교체제는 1995년에 발표된 ‘5.31 개혁안’과 2010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5.31 개혁안은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특성화’ 정책을 지향하였던 바, 이 정책 지향점을 바탕으로 기존의 일반계고 외에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학교 등이 고교체제로 편입되고, 2010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 등이 추가로 편입되어 현재의 고교체제로 정리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고교체제가 특목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불평등한 고교체제가, 인공지능을 논하고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미래시대에도 그대로 타당한 학교체제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래지향적인 고교체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즉,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입장과 평등한 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며, 현실론을 강조하는 논의와 본질론을 강조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접근은 다른 연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써 현재 우리 사회의 합의물(consensus)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의 규정에서부터 출발하여 고교체제와 관련된 주요 법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위 규범인 헌법 제31조 제1항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그림 IV-1]을 참고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38) 이 글은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 방안 연구(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16)』 중 서론과 이론적 배경의 일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연구는 지난해에 수행한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중심으로 한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 방안 연구(김정빈·김수영, 2015)』의 후속 연구로서, 2016년 12월말에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 ※ **O(Opportunity)**: 종축의 변인으로서 ‘균등한 교육’ 지표를 표시
P(Potential): 횡축의 변인으로서 ‘능력에 따른 교육’ 지표를 표시
(0,0), (5,5): 각 지표를 5점 척도로 계수화하여 **(O,P)좌표**로 표시
(0,0)이 최저점이고 **(5,5)**이 최고점
A(1,1): 1974년 고교평준화 시행 이전 고교체제
B(3,1): 1974년 고교평준화 시행 이후 고교체제
C(2,2): 1995년 5.31개혁 이후 고교체제(특목고, 특성화고 등)
D(1,2): 2010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후 고교체제(자사고 등)
A→B→C→D: 고교체제의 역사를 필자가 가설적으로 표현한 것
F1, F2: 향후 지향해야 할 미래(Future) 고교체제

[그림 IV-1] 헌법 제31조 제1항과 고교체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우리 교육이 나아갈 교육지표로써 ‘균등한 교육(O)’과 ‘능력에 따른 교육(P)’이라는 2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따라서 학교체제(학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제도 및 정책은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바로 이 헌법적 교육지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지표로써 ‘균등한 교육(O)’과 ‘능력에 따른 교육(P)’은 우리 교육이 양자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균등한 교육 지표는 교육기회의 측면을 규정한 것이고, 능력에 따른 교육 지표는 교육과정(광의)의 측면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은 균등한 교육기회와 능력에 따른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적 관점에서 ‘고교체제’ 문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고교체제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주로 균등한 교육기회의 측면에서 논의해 왔는데, 이제는 능력에 따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균등한 교육(O)과 능력에 따른 교육(P), 양 교육지표는 상호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호 연관성도 있다. 즉, 능력에 따른 교육은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표현한 것인 바, 여기서 다양성 개념은 평등 또는 수평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는 개념상 필연적으로 수평적이고 균등한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수직적 서열화는 배제되어야 한다. 한편, 균등한 교육에서의 균등이 단순히 형식적 균등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실질적 균등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때, 모든 국민이 각자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양 교육지표는 상호 의존적이어서, 현행 고교 유형의 서열화된 수직적 다양화 체제는 헌법이 추구하는 균등한 교육 지표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른 교육 지표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동시에 각자의 다양한 특성을 무시하는 획일적인 교육 역시

39) [그림 IV-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pportunity)는 종축의 변인으로서 ‘균등한 교육’ 지표를 표시하며, P(Potential)는 횡축의 변인으로서 ‘능력에 따른 교육’ 지표를 표시한다. 여기서 각 헌법지표를 5점 척도로 계수화하여 (O,P)좌표로 표시하고, 이를 (O,P)계수 또는 ‘헌법지표 도달계수’라 칭하기로 한다. 이 (O,P)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고교체제’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전반, ‘학교체제’ 전체, ‘대입제도’ 등에 대해서도 계수를 도출하여, 우리 교육이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교육지표’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현재의 지점에 이르는 역사적 궤적을 가시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판단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O,P) 그림 및 계수를 통해 헌법에 비춘 우리 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능력에 따른 교육 지표뿐만 아니라 균등한 교육 지표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 A, B, C, D 등 특정 좌표 지점을 표시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다.

위에 그림으로 제시한 ‘A→B→C→D’의 경로는 우리 고교체제의 역사를 가설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 고교체제의 40여 년 역사를 헌법적 교육지표 2가지를 준거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지점은 1974년 이전 획일적이고 서열화 된 고교체제(1,1)를 표시한 것이고, B지점은 1974년 고교평준화 이후 서열화는 일정 부분 해소되었으나 획일적인 교육은 그대로인 고교체제(3,1)를 표시한 것이다. 또 C지점은 1995년 5.31 교육개혁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지향하였지만, 특목고 등으로 다시 서열화가 시작된 고교체제(2,2)를 표시한 것이며, D지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고교 유형이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 4유형으로 정리되고 이에 따라 특목고-자사고-일반고 등의 순으로 서열화가 더욱 심해진 현행 고교체제(1,2)를 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D지점을 벗어나는 것이 고교체제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일 텐데,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고교체제 재편 방향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일부에서는 ‘제2의 고교평준화’라 하여 다시 B지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⁴⁰⁾ 그러나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고교체제가 나아갈 바는 F1(3,3)와 F2(4,4)를 잇는 그 연장선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균등한 교육과 함께 능력에 따른 교육이 동시에 발전적으로 실현되는 그러한 고교체제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31조 제1항이 지향하는 양 교육지표를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고교체제 재편 방향일 것이다.

나. 미래의 교육과정과 고교체제

고교체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체제이다.⁴¹⁾ 즉,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여하에 따라 고등학교를 구분하는 유형이 결정된다. 현재의 고교체제는, 후기에 학생을 배정하는 일반고등학교 외에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 4가지 유형의 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엔 다수의 직업계열 고등학교가 있으며, 자율고등학교의 경우엔 자율형 사립고(전기)와 자율형 공립고(후기) 등이 있다.

40) ‘제2의 고교평준화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4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 2. 특수목적고등학교 3.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

그런데 전기의 학교들에게 부여된 우선선택권으로 말미암아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우리 고교체제는 제도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학교로 구성된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미래에 요구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체제라 할 수 있는가?

또한 현행 고교체제를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의 희망 계열에 따라 학교나 과정을 다양화하고⁴²⁾ 학생은 자신의 희망 진로에 따라 학교나 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고정적 진로분기형 체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교체제가 미래에 요구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체제라 할 수 있는가?

미래의 고교체제를 구상하기 위한 전제로써 미래에 요구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가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미래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 중심의 개별화 지향 교육과정이다.

둘째, 미래 교육과정은 역량기반 지향 교육과정이다.

셋째, 미래 교육과정은 진로 탐색 지향 교육과정이다.

넷째, 미래 교육과정은 계열 통합 지향 교육과정이다.

다섯째, 미래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 지향 교육과정이다.

미래에 요구되는 교육과정의 성격이 이러하다면, 현행 고정적 진로분기형 고교체제는 이러한 미래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학생 선택의 핵심은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여하인데, 현행 고교체제와 같은 고정적 진로분기형 체제에서는 학생이 이미 희망 계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한 상황에서 학생의 과목선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을 통해서만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미 엄격한 과정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고정적 진로분기형 체제에서는 이러한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없다.

둘째, 현행 고교체제가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같이 대학진학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교육과정 역시 이를 준비하는 교과적 지식 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제로는 미래의 역량기반 지향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셋째,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진정으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의 ‘희

42)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59쪽. 이 보고서는 5.31 개혁안의 기본문서이다. 이 보고서 59쪽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해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등을 제언하면서, 그 주요 방안으로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다.



망 진로’에 따라 진로과정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제여야 하는데, 현행 고교 체제에서는 학생이 학교나 과정을 일단 선택하게 되면 이후엔 현실적으로 새로운 진로탐색을 할 수 없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1997) 이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공식 문서에는 계열이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여전히 문·이과 분반이 현실이고, 또 현행 고교체제 자체가 진로계열에 따라 학교를 분리 운영하고 있는 체제여서 미래의 계열 통합 지향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어렵다.

다섯째, 교육과정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진로 탐색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한데, 현행 고교체제는 학교별 또는 진로과정별로 고정된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 쟁점 및 제언

결론적으로, 현재의 고정적 진로분기형 고교체제는 미래 교육과정 운영에 합당하지 않다. 미래의 고교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진로 탐색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정된 계열과정 없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연한 진로탐색형’ 체제여야 한다. 이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않고,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이다⁴³⁾. 따라서 미래에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은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로 전환되어야 하며, 결국 미래 고교체제는 ‘일반고·특성화고 중심의 평등한 고교체제’여야 한다. 이때 일반고는 기존의 문이과 분반 식의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않고 학생들이 각자 과목선택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탐색·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진로탐색형 학교로서의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체제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1. 앞서 가설적으로 논의한 미래 교육과정의 5가지 성격에 공감하는가?
2. 앞서 가설적으로 논의한 유연한 진로탐색형 고교체제는 필요하고 가능한가?
3. 만약 유연한 진로탐색형 고교체제가 미래 고교체제로써 필요하다면, 이것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43) 제7차 교육과정(1997)에서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원칙으로 제시되었던 방안이다.

5. 대학입시제도

가. 문제의식

미래의 대학입시제도를 구안하기 위해선 그 전제로써 대학입시제도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크게 3시기로 나눈다. 즉, 1980년의 일명 ‘7.30 조치’와 1995년의 ‘5.31 개혁’을 전후한 시기에 주목하여, ‘본고사’ 중심 시기, ‘대입학력고사’ 중심 시기, 그리고 ‘수능·내신·논술 3각’ 체제 시기 등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3시기 구분에 입각하여 각 시기의 대입제도 변화과정을 탐색하고, 동시에 이러한 대입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작동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로서의 학교체제의 변천도 각 시기에 맞추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대입제도의 역사

1) 본고사 중심 시기

198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대학별 본고사를 중심으로 하여 대입 예비고사가 가미된 형태였다. 대입예비고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69학년 이전까지는 대학별 단독고사 체제였는데, 이러한 대학별 단독고사 체제에서는 입학 부정·비리와 무자격 입학 등이 문제되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대학들의 이러한 부정입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예비고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대입지원 자격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비등했던 대입선발의 객관성·공정성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학별 단독고사는 예비고사에 대응하는 본고사가 되었다.

한편, 대학별 본고사는 교과 지식을 묻는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었다. 이러한 본고사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별 본고사가 중등교육을 교란시키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었다. 정부가 대입예비고사를 실시한 것은 부정입학 등의 해결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대입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이를 통해 대입 사교육 열풍을 잡아보고자 했던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기대한 효과는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사교육 열풍은 확대되는 양상이었다. 한편, 내신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한다는 정책도 시행하였으나 권장사항에 그쳐 별 의미는 없었다.



이 시기의 대입 사교육 열풍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 우리나라 중등학교가 경쟁선발에 의한 서열화 체제인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과열된 조기 입시열풍을 잡고자, 1969학년에는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를 시행하고, 더 나아가 1974학년부터는 일명 고교평준화제도라고 하는 고등학교 무시험진학제를 시행하였다. 이제 중학교도 평준화되고 고등학교도 평준화되었다. 이로써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불었던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는 데에 일단 성공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교평준화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전까지 고교체제와 대학체제 간에 서열로 서로 맞물려 있었던 체계가 깨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각 고등학교는 이전처럼 지망하는 대학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고, 그 성적 수준이 상에서 하에 이르는 다양한 학생들을 한꺼번에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는 새로운 문제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당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학교 차원에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우열반이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관철되고 있는 일반고에서 요즘에도 심화반과 같은 변형 우열반이 존재하고, 제7차 교육과정 이래 공식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제도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고교평준화제도 시행은 서열화에 따른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밑에 내장되어 있는 입시위주 교육 문제와 과열 사교육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는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교육도 통제받던 시절이었기에, 평준화를 넘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생각하는 다양화, 특성화는 꿈도 못 꾸었다. 따라서 이 당시엔 다양한 진로 모색보다는 오직 하나,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입시 사교육 열풍도 과열될 수밖에 없었다.

2) 대입학력고사 중심 시기

본고사 중심 대입체제를 깬 것은 바로 전두환정권의 물리적인 ‘힘’이었다. 전두환정권은 1980년 당시 ‘국보위’의 이름으로 소위 ‘7.30조치’, 즉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에 의해 본고사는 폐지되고, 기존의 대입예비고사를 주된 대입 전형요소로 하여, 이에 내신성적을 가미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동시에 재학생이 받는 일체의 사교육을 금지하는 과외금지조치가 단행되

었다. 그리고 1982학년부터는 대입예비고사는 대입학력고사로 이름이 바뀐다. 대입학력고사는 이전의 대입예비고사와 똑 같이 단편적인 교과지식을 묻는 객관식 선다형 시험이었지만, 본고사를 폐지한 상태이므로 그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본고사 폐지에 의해 그 이전까지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로 말미암은 학교교육 파행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입학력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1994학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 문제되었던 본고사도 없애고 또 과외도 금지하였으니,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된 듯 보였다.

7.30 조치의 공식 이름인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 말해주듯이, 이 시기 사회적·교육적 요구는 학교교육 정상화 요구와 과열과외 해소 요구로 집약될 수 있다. 그만큼 이전 시기에는 본고사로 말미암아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사교육이 과열되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국가표준화시험으로서의 대입학력고사 중심의 대입전형 방식은 중등교육의 획일화를 가속화시켰고, 이제는 대입학력고사를 준비하는 사교육이 소위 ‘몰래바이트’라는 형태로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 학력고사를 대안으로 하였으나, 이 역시 암기된 지식을 묻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주입식·암기식 수업은 계속되었다. 정책 의도와는 달리 교육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사교육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만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인데, 정부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사교육이 점점 확대되어 그나마 공교육 정상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시기엔 이전에 권장사항으로 했던 내신성적 대입반영을 의무화하였지만, 그 비중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아서 ‘교육정상화’에 제대로 기여하지는 못했다. 한편, 대학 입장에서는 대입학력고사의 점수서열만으로 학생 선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결국 사교육금지 조치는 유야무야 해제되었고, 1986학년에는 과거의 본고사 대신 대학별로 논문(논술)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당시 학력고사에 대해서는 암기된 지식만을 평가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고, 동시에 학력고사 점수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 측 입장에서는 변별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학력고사 중심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발의 변별력 요구도 충족시켜주고 고등사고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학별 논술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술시험은 준비 부족으로 실시한지 2년 만에 중단된다. 논술시험 도입은 고등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였지만, 우리 학교교육이 이를 감당하기엔 아직 역부족이었고, 이를 실시하는 대학 측도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이



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학력고사 중심 대입체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결국 학력고사 위주의 표준화된 단일시험 체제로 말미암아 입시경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교육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 체제는 권력의 물리적 힘에 의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본고사를 없애고 사교육을 금지시키면 모든 교육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3) 수능·내신·논술 3각(triangle) 체제 시기

1994학년부터 기존의 대입학력고사를 대체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도입되고, 동시에 논술고사를 포함한 대학별 본고사가 허용되었다. 여기서 본고사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얼마 못 가서 1995년 5.31개혁안을 계기로 논술고사만 남기고 본고사는 대입 전형자료에서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학력고사가 단편적인 교과지식을 묻는 객관식 선다형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여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개별 교과 지식이 아닌 범교과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고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학교교육을 입시위주 교육이라 하여 비판할 때 반드시 고질적인 주입식·암기식 교육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주범으로 입시를 지목하였는데, 수능과 논술시험의 시행으로 이제는 그간의 오명을 벗고 ‘범교과적인 고등사고력’을 평가하는 대입시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부터 우리 대입제도는 수능을 중심으로 내신과 논술고사가 가미된 체제로 된다.

또한, 이 시기엔 5.31개혁안의 후속 조치로 제7차 교육과정(1997)이 만들어지는데, 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단위학교별로 학교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학생들 각자의 진로에 따라 개별 맞춤형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근거를 갖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의 원래의 취지는 문·이과 구분 없는 교육과정 운영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미비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그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위학교에서는 여전히 문·이과를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부터 고등학교 평준화체제에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일반고와는 별도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특목고는 과학영재와 외국어영재 등을 뽑아 국가적인 인재로 양성한다는 특수 목적 아래 기존의 일반고에 앞서 성적 우수 학생들을 ‘우선선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특목고인 과

학교와 외국어고 등은 후기에 모집하는 일반고와는 달리 전기모집에서 성적 우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선발의 특권을 갖게 된다. 특목고는 그간 평준화체제의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반발로 다양화·특성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요구가 맞물리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결국 소위 입시명문고를 지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또 특목고의 존재는 평준화 체제에 속해 있는 다른 일반고들을 구조적으로 이류, 삼류로 만들 뿐만 아니라, 특목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고입 단계의 입시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과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어서, 특목고에 대해서는 폐지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김영삼정부의 5.31 개혁의 기초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2002학년부터는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대입전형 시기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서울대는 논술고사를 없애고 수능과 내신, 구술면접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하였는데, 서울대 외의 대학들은 서울대와 달리 기존의 논술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내신과 함께 수시모집의 주요 전형요소로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시모집의 실시로 입시에서 내신과 논술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수시모집은 학교 내신과 논술(또는 구술면접)을 중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대입전형에 있어서 그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내신과 논술 등이 수능과 함께 대입에서 주된 전형요소로 주목받게 된다.

대입전형에서 내신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평가했던 것을 대입전형에 비중 있게 반영한다면, 학생들은 학교수업에 충실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학교교육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는 내신성적의 신뢰성이 담보되었을 때의 얘기이다. 당시엔 성적 부풀리기가 문제되어 기대만큼 내신 반영 비중을 높이지는 못했다. 그리고 대학 측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들 간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학교차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신 반영에 있어서 여전히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어쨌든 이때부터 우리 대입제도는 ‘수능·내신·논술 3각(triangle) 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능의 비중이 가장 크고, 내신이 그 다음, 그리고 논술 등은 세 번째였다.

김대중정부에 이어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교육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평가 방식을 내신 9등급제로 함과 동시에 대입전형에서 내신 비중을 강화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게 된다. 동시에 수능 성적산출도 2018학년 입시부터 등급제로 하여 성적표에 표준점수와 백분율



을 병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점수로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기존의 대입 전형 방식을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변별력을 내세운 대학 측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기존의 대학별 논술고사를 통합교과형 논술시험 형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와 대학 간에 타협을 하게 된다.

한편, 이렇게 내신의 비중을 높인다는 새 대입제도안은 엉뚱하게, 기존에 수능을 위주로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받아들여졌다. 수능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 내신과 논술의 비중만 높아지는 바람에 이제는 수능 외에 내신과 논술도 확실하게 챙겨야 하는 ‘3중고’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바로 이때부터이다. 이에 반발하여 고등학생들의 반대시위까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내신과 수능이 등급제로 됨에 따라 우리 입시에서 점수로 줄 세우는 식의 대입선발 제도는 일정 부분 해소되는 듯했다. 그러나 대학 측 입장에서는 선발의 객관적 변별력을 위해 정시모집에서 논술시험의 비중을 높이게 되었던 바, 이로 말미암아 논술 사교육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한편, 수능등급제가 예정대로 2008학년 입시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때 ‘등급 컷’에 걸려 아래 등급으로 밀린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되어, 결국 수능등급제는 2008학년 한 해 실시되고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해 폐지되기 이른다. 이에 따라 결국 논술시험은 정시모집에서는 변별력을 위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고, 수시모집에서만 내신과 함께 전형자료로 쓰이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필답시험이 없는 ‘입학사정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입학사정관계 확대에 그 의도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를 ‘죽음의 다이아몬드’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사교육의 주범이라 지목된 수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쉬운 수능’을 표방하면서 EBS 수능 반영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2014학년부터는 수능을 ‘A or B’이라는 ‘수준별 선택형 수능’으로 바꾸어 시행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평가 방식으로는 ‘성취(절대)평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고교학점제’도 도입할 계획이었다. 또 2015학년부터 기존의 수능 영어과목 시험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으로 대체하는 계획도 추진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기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2010학년부터 서울 25개(2015년 현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49개 자율형사립고(이

하 자사고)가 지정되었다. 자사고 역시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우선선발권이 주어졌는데, 이로써 고교체제는 수평적인 다양화가 아니라 수직적이고 서열화된 다양화 체제로 가게 된다. 기존의 특목고까지 생각하면, 특목고가 ‘일류’, 자사고가 ‘2류’, 그리고 일반고는 ‘3류’가 되는 형국이 되었다. 자사고는 그 취지대로라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다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준별 수능은 2016학년 수능을 끝으로 순차로 폐지되었고, 성취평가제는 대입자료 적용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NEAT’의 수능영어 대체 계획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쉬운 수능’으로서 ‘EBS수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는 그 이름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어 확대·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소위 스펙과 관련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폐단이 매우 커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2017학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편입되어 실시되는데, 주목할 점은 그 성적산출 방식이 절대평가라는 점이다. 또 2018학년 수능부터 영어의 성적산출 방식도 한국사처럼 절대평가로 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학 측은 수시 모집 인원을 70% 이상으로 그 비중을 높이고 있어서, 수능 성적을 주된 평가자료로 하는 정시 비중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동일한 ‘수능·내신·논술 3각 체제’ 하에서 지금까지의 수능 중심 체제는 학생부 중심 체제로 옮겨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수능에서 한국사,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와 수학도 절대평가로 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좀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문이과 통합’을 지향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2018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이를 근거로 하는 2021학년 수능 방안이 준비 중이다. 이 점 역시 새로운 대입제도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 및 제언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은 자주적·창의적·공동체적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등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⁴⁴⁾ 그러나 우리 학교교육은 여전히 입시 위주 또는 평가 위주로 운영되면서,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인간상과 핵심역량과는 거리가 먼



‘정답기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에 기반한 대입제도 및 학생평가 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현재의 대입제도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학별고사 등 크게 3가지 전형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3가지 전형요소 중 최근에 수능 중심에서 학생부 중심 체제로 서서히 이동 중이다. 각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그 반영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처럼 학생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전형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교과 성적은 현재 내신 9등급제에 의해 상대평가 성적을 산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입에는 반영하지는 않지만 성취평가제에 따라 절대평가 성적을 산출하고 있다. 한편, 비교과 영역은 소위 스펙과 관련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폐단이 크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능은 범교과적 사고력 또는 고등사고력 평가를 목적으로 1994학년 도입·시행된 이래, 2005학년부터는 범교과적이 아닌 교과적 사고력 평가로 출제방향에 변화가 있었고, 2014학년부터 2016학년까지는 ‘A or B’라는 수준별 선택형 수능을 도입·시행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2017학년부터 한국사가 수능에 필수과목으로 편입되는데, 그 성적 산출은 절대평가 등급제를 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수능 영어 역시 2018학년부터 절대평가 등급제로 성적 산출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능 국어와 수학 등에서도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되면 수능은 ‘대입자격고사’로 성격이 바뀌게 되고, 나아가 ‘졸업자격고사’로의 변화 가능성까지 타진할 수 있게 된다.

대학별고사에는 논술, 면접, 실기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학별 논술시험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고등사고력 평가를 목적으로 도입·시행되었지만, 특히 자연계논술 시험의 경우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선 출제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이 고등사고력을 넘어 미래역량을 신장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대입제도는 어떠한 것인가?

- 1) 우선, 수능은 대입자격고사를 넘어 ‘절대평가-졸업자격고사’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수능이 기존처럼 ‘상대평가-대입선발고사’

44) 2105 개정 교육과정, I-1 추구하는 인간상 중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한, 학교교육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해결될 수 없으며, EBS수능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수능을 절대평가-졸업자격고사로 바꾸는 것은 필요하고 가능한가? 아니면 국어와 수학 등도 절대평가로 하는 대입자격고사 체제로 충분한가?

- 2) 학생부 중 교과 성적 평가의 경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기존의 ‘선다형-결과평가’는 지양하고 ‘논술형-과정평가’로 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의 ‘학년단위-상대평가’는 ‘과목별-절대평가’ 체제로 바꾸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미래 시대엔 집단평가가 아닌 개별평가가 특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세우기 식 교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학생평가는 이렇게 ‘개별평가-과정평가-절대평가’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학생평가제도는 필요하고 가능한가? 참고로, 이러한 새 학생평가 제도를 ‘성장평가제(GRE, Growth-Referenced Evaluation System)’라 부르기로 한다.

- 3) 대학별고사 중 논술시험은 학교교육에서 위와 같이 논술형-과정평가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 대학별 논술시험이 폐지된다면 면접, 실기 등이 중요해지는데, 이는 학교교육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당한가?

미래의 대입제도 및 학생평가 제도에 대한 앞서의 가설적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적 대입제도 및 학생평가 제도는 미래시대 교육에 필요하고 가능한지 질문해본다.

- ① 미래의 대입제도는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이다.
- ② 학생부 학생평가는 기존의 학년단위평가-총괄평가-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개별평가-과정평가-절대평가로 정의되는 성장평가제(GRE, Growth-Referenced Evaluation System)에 의한다.
- ③ 수능은 폐지하고, 새로운 졸업자격고사(KORSE, Korea Diploma of Secondary Education Examination)로 대체한다. 졸업자격고사는 ‘진로별’ 시험이며, ‘절대평가 등급제’로 한다.
- ④ 대학별고사는 면접, 실기 등으로 최소화한다.



6.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구현

가. 문제의식

여기서는 앞서 다룬 미래역량을 준비하는 장의 개념으로써 학교 공간, 또한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중 하나인 학교 공간 문제를 국가와 교육청을 비롯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의제로 제시한다.

지금의 학교 공간은 산업혁명기 이후 필요한 노동력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표준화, 효율화를 염두에 두고 건축되었다. 이 결과 모든 학교는 사각형의 교실과 일자형의 긴 복도, 운동장, 담장 등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에서 학생들은 동시 등하교, 분 단위로 촘촘하게 짜인 시간에 수업, 쉬, 급식을 제공받았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규칙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표준화, 효율화를 지향하는 사각형의 교실과 일자형의 긴 복도는 학습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저렴한 건축비를 보장하였다. 또한 저렴한 학교 건축비는 창의적 학교 공간 구성에 있어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공간에서 선발적 교육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생의 고유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적 경험의 재구성과 전인적 성장의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나. 미래사회의 변화와 학교 공간

각종 통계지표와 학자들의 예측을 통해 미래사회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 도시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한한 자원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에너지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술진화는 더욱 빠르게 진척되어 학습자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송병준·주범, 2011).

미래사회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는 사회구조, 경제활동, 환경,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이 있으며 미래사회의 생활패턴의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학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①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 조성, ② 지속가능한 학교건축, ③ 다양한 모습의 학교건축, ④ 무장애 및 안전한 학교건축, ⑤ 지역사회의 필요시설과 노령화사회에 대비하는 평생교육 시설로의 학교이다(이연수, 2009).

OECD(2001)는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제시하였다.

〈표 IV-2〉 6가지 미래학교 시나리오(OECD, 2001)

현재 상태의 지속	학교 재구조화	탈 학교화
시나리오 ① 확고한 관료주의적 학교체제	시나리오 ③ 사회적 구심으로서 학교	시나리오 ⑤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
시나리오 ② 시장모형의 확대	시나리오 ④ 학습을 위한 중점기관으로서 학교	시나리오 ⑥ ‘학교붕괴’로 인한 교사의 학교 이탈

이상적인 형태의 미래학교 상상은 관료체제와 시장화(시나리오 ①, ②)를 극복하고 학교가 사회적 구심과 학습을 위한 중점기관(시나리오 ③, ④)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학습자 네트워크(시나리오 ⑤)와 공존하는 것이다.⁴⁵⁾

학습자 네트워크를 포괄한다는 것은 학교 공간이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미래지향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적 인프라 만으로 학생들의 ‘학습의 기쁨’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할 순 없다.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을 구축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기점을 포함하여 학습자의 바람직한 성장의 장애가 되었던 모든 환경 요소를 제거하고 학습, 일, 쉼, 놀이가 충만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re-schooling)’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초연결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미래역량을 요구한다. 이러한 미래역량이 바람직하게 발현되는 토대인 학교 공간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볼 때 학교는 접속/비접속의 경계가 없는 상시적 네트워크의 공간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는 학교 공간 어디에서든, 어떤 단말기로든, 미디어의 유형에 상관없이 생산, 공유, 유통되는 거점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뜻한다.

저출산, 고령화 및 교육격차와 불평등과 같은 미래사회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적 난제들이 유지, 증폭되는 공간으로써 학교가 아닌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데 있어 그동안 도외시했던 공간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

45) 최악의 경우는 시나리오 ①, ②는 온존, 강화되며 ③, ④는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채 ⑤를 거쳐 ⑥으로 향하는 것이다. 미래교육을 준비한다는 것은 과거의 구습과 단절하고 주어지는 기회를 활용하되, 학교가 다시금 사회적으로 공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재구조화를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것이다.



다. 미래지향적 교육플랫폼으로써 학교 공간의 조건

변화된 미래사회에서는 이에 걸맞는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하므로 미래학교의 도입을 통한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대중에의 개방을 통해 지역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교육을 염두에 둔 기능 중심적 학교 공간의 설계가 필요하다(Keris, 2011-12).

학교는 단순히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력을 수동적으로 공급하는 창구가 아니다. 교육은 학습자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사회에서도 변치 않는 교육의 고유한 속성이다. 이러한 ‘좋은 성장’의 결과로 학생들은 그 고유성을 간직한 채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학교는 감시와 통제를 넘어 학생들의 고유성과 존엄성을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미래사회는 인간에게 기술진화를 통한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불안정성에 노출시키며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생활 감시 및 정보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의 중요성을 익히고 체험하는 학습장이 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 교육플랫폼의 일부로 작동하는 학교 공간은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거점으로 타인 혹은 기계와의 초연결을 통해 교육적 경험을 확대하고 재구성하는 유비쿼터스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학습해 나가는 참여와 자치의 공간, 생명체가 상호작용하고 감응하며 성장하는 개방적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몸을 통한 생산, 표현,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적 발달의 거점으로써 학교는 ‘공작소(maker space, studio)’로 작동하며, 학생들은 수공노작과 미디어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미래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인 바, 이와 같은 교육활동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⁴⁶⁾

학생들은 쉼과 놀이를 즐기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이끌고 촉진(facilitation)한다. 기존의 학급은 관리 단위가 아닌 자치 단위로 전환되고 학습은 학급이 아닌 주제 단위로 재편된다. 미래학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학교에서는 무학년제 실시에 따라 학년을 초월하여 학습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학습단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선택형 학습 및 더

46) 아마도 2025~2030년 시점에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성은 대폭 확대되어 있을 것이며 학급과 학년을 초월하는 주제단위 수업, 자유발행제에 따른 교재 선택, 교사별 절대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많은 탐구와 조사, 다양한 체험의 물리적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가변적 공간 구성(이용환·이용환, 2011)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라.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마련을 위하여

1) 사회적 담론화와 전담 기구의 설치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채택하고 이를 전담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다. (가칭)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설계 위원회는 담론 형성과 의견수합의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교육청의 학교 건축, 관리, 시설 관련 위원회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계약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개축심의위원회,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등이 있다. 이 중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교육시설 관련 정책 자문 및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돼 있다. 이 위원회를 확대, 재편성하든지 혹은 신설 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에 대한 중장기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한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육 공간 자문관’과 ‘신축 공간 등에 적용하는 마스터 플랜너(MP)’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2) 신설학교를 위한 미래형 학교 설계 아이디어 제안

- 기존의 학급을 기준으로 하는 설계에서 주제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계
- 일자형 복도, 사각형의 교실 등 획일적 건축 지양하고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설계 보장
- 학교 농장 및 생태 실습지 설치, 태양광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 시설
- 작업, 놀이, 학습,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maker space, studio) 마련⁴⁷⁾
- 학교의 전 구역에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AP를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성
- 학교가 지역의 교육거점, 평생학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 마련

47) ‘미래를 만드는 것은 아이들의 창조력이다’라는 이념은 창조적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캔버스’의 이념이다. 캔버스는 보스턴에 있는 MIT 미디어랩에서 시작됐다. 캔버스는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장소’ 개념에 집중한다. - 이시도 나나코(2014). 미래교실. 서울: 청어람 미디어



3) 기존학교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설계

-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칭)학교공간재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와 구성원의 요구를 결합하여 재구성 방안 마련
- 생태, 자치, 작업, 놀이, 쉼을 보장하는 공간 우선적 고려
- 기존의 컴퓨터실은 유무선 통합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3D 프린터, 로봇 시연 등이 가능하도록 U-Class 환경으로 단계적 개조

마. 쟁점 및 제언

1) 제도와 관행의 문제

학교 신축 및 재구조화와 관련한 법률, 시행령, 조례 등을 검토하여 학교설립기준을 최소화하는 등 미래지향적 학교가 설계되고 건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⁴⁸⁾

2) 재정 확충의 문제

교육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학교 공간의 신증축 및 개선에 사용되도록 한다. 학교의 신축 및 재구조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3) 사회적 인식의 문제

학교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있었다. 특히 인프라 측면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만족한 생활을 돕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를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 다른 배움의 방법을 찾아 이탈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가 단순히 낮 시간 동안 학생들을 맡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학습의 즐거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기 위해서는 공간 개선에 대한 획기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 전환의 대전제는 ‘학교 건축물은 말을 걸어오는 형상’이라는(송순재, 2005)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48) 학교 건축 및 재구조화와 관련된 각종 법률, 시행령 및 규정 등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동 시행규칙,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 시행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 시행령 등이 있다.

7. 국가수준 교육 거버넌스

가. 문제의식

1) 제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의제

인공지능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는 ‘집단적 충격’속에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적 충격과 부정적 전망은 빈부 격차의 심화와 일자리 파괴에 대한 예측에서 연유한다. 제4차 산업혁명 담론 등장 이전시기의 글로벌 의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담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5년부터 10년간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으로 설정되어 한국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려 했지만 사실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불완전하게 마무리되었다.

유엔 총장을 배출한 한국의 ‘유엔 의제’ 실천 수준은 사실 미흡한 것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은 글로벌 의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유엔 의제에서 특히 ‘환경 용량내의 경제성장’이라는 천명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산출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변화를 ‘세일 석유’가 가속하고 있으며 그 중앙을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의제는 여전히 글로벌 수준에서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무인자동차, 3D 프린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으로 상징되는 실제 산업적 혁신의 등장이 유엔 의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글로벌 흐름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교육분야에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II장에서 ‘미래역량’을 새롭게 정립했고 III장에서는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상’을 그려낸 바 있다.

2) 2017 시행 예정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역량중심 운영

교육부에서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기반’을 천명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정한 ‘서울학생 역량 기준’은 이미 교육부 고시 이전에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천명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혁신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어왔다.

2015교육과정은 역량기반교육으로의 전환을 천명했지만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본격적으로 고려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여실하다. 교과목에서 ‘융합’을 고려하여 사회와 과학을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로 재편하면서 신설 교과로 ‘정보’를, 새로운 교육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설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4차 산업



혁명을 고려한 ‘교과목’은 ‘정보’하나이며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중고교에 넣은 정도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한편 2015년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행정이나 지원체제의 재편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와 같이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는 했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바꾸어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하정운 외, 2014). 하지만 기본 원리를 ‘수요자-공급자’에 두었다. 행정조차도 단위학교를 교육행정 수요자, 교육지원청을 교육행정 공급자로 규정해 놓고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여 다시금 ‘대상 중심’ 조직으로 회귀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임무가 불명확하며 특히 단위학교 지원체제 구축에는 극히 미흡하다.

한편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을 단위학교가 감당하는 수준으로 진전되었을 때 교육청과 교육부의 위상과 임무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요컨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행정체제 재편은 단위학교 중심 자율 운영체제확립과 이에 적합한 과도한 교육부 중심 중앙집중 교육행정의 탈피와 시도교육청에 위임과 이양이라는 ‘충방향’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논리에 따라 부침한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부침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방향의 해결책이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행정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나는 교육감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강화하면서 교육부의 과도한 교육행정권한을 위임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매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대안이다.

나.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모형

한국 교육행정의 오래된 문제는 과도한 국가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대안은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으로 제시되었다. 실제 지방 자치에의 실행이 국가주의적 중앙 집중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20년이 경과하는 현 시기에도 여전히 ‘분권화’가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행정권이 아직도 과도하다고 보는 것이다(이수광, 2016).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과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의 정치적 위상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을 분명히 합의 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서 이런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나타난 문제의 핵심은 교육정책의 장기성과 지속성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이다. 대통령이나 교육감이 바뀌면 기존의 교육정책이 폐지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새 정책이 들어오면서 예산 배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제 교육정책의 실행과 집행에서 안정성을 뒤흔들기에 이르렀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부의 과도한 중앙집중 행정의 부담을 위임과 이양을 통해서 덜어내면서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기구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장기성, 지속성을 부여하려는 대안이 등장했다.

글로벌 교육국가로 상찬되는 핀란드의 사례에서 이는 매우 명백하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정책은 50년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실행되었다. 핀란드는 국가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설계하고 실행했다. 한국은 교육부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임명직 장관의 한계가 명백하다. 이런 이유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교육개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기존 정책을 단절 시키며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어온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상이 국가교육위원회이다. 아래 표에 여러 유형을 정리하고 있다.

〈표 IV-3〉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구상의 유형 분류(김용일, 2013)

구분	행정부 내의 정책 기구		독립적인 국가기구
	행정부 보완형	비판견제형	
헌법 기구	I (존재하지 않음)	II (존재하지 않음)	III <헌법기구> ◆ 박거용 교수(2012) 안 ◆ 박도순 교수(2012) 안
법률 기구	IV <정책 심의기구> ▲ 중앙교육위원회(1948.12.31, 교육법상의 심의기구) ▲ 인적자원개발회의(2002.8-현재)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8.9-2013.3) · 한나라당(이회창 후보)의 ‘21세기(국가) 교육위원회’(2002.5.17.; 2002.12) · 대통합민주신당(정동영 후보)의 ‘국가 미래전략 교육회의’(2007.10)	V <정책 총괄기구> · 한국교총(2002)의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시민사회(2002.11.1.)의 국가교육위원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12.8)의 국가교육위원회 · 경기도교육감 김상곤(2012.9.12.)의 국가교육위원회 · 이용섭 의원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2012.10.2.)	VI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 · 이주호 의원(2007.12)의 국가교육위원회 · 민주통합당(2012 a)안: 독립적인 국가 상설기구[←문재인 후보 대선 공약(2012.12)] · 이해찬 전 민주당 원내대표(2012.7.1.)의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2012)의 국가교육위원회
기타 하위 법규 근거	VII <정책 자문기구> ▲ 조선교육심의회(미군정기) ▲ 교육개혁심의회(1985-1987) ▲ 교육정책자문회의(1989-1993) ▲ 교육개혁위원회(‘문민정부’) ▲ 새교육공동체위원회(→교육인적자원위원회, ‘국민의 정부’) ▲ 교육혁신위원회(‘참여정부’) · 안철수 후보(2010)안	VIII (존재하지 않음)	IX (존재하지 않음)

주: [유형1](IV와 VII)의 ▲표시 기존의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들을 나타낸 것임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정책이 정부에 따라 뒤바뀌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위상에 대하여 정치세력마다 다른 견해를 제출했지만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다. 단지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이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고자하기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의지가 사라져버리는 문제는 남는다. 현 정부조차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고 검토했지만 결국 실행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 오히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설득력을 보여준다. 교육정책의 일관성보다는 교육부를 통한 새로운 정책의 실행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여러 가지 쟁점이 내장되어 있는데다가 아직까지 정치세력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아래 표는 이러한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표 IV-4〉 정책 대안의 차이(조흥순 외, 2013)

구분	성격	핵심 의의	주도성	위원 구성	강조되는 가치	비고
<대안흐름 1>	자문기구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 교육행정의 합리설 보완	정부중심성	전문성 > 대표성	효율성	
<대안흐름 2>	심의·의결기구	교육행정의 독단성 견제 및 교육정책과정의 전문성, 민주성 보완	정부중심성 ≥ 사회중심성	전문성 = 대표성	전문성, 민주성	
<대안흐름 3>	심의·의결기구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정책 결정	정부중심성 ≤ 사회중심성	전문성 ≤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통합성	

다음은 2012년 12월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사장된 법안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법안은 위의 표에서 <대안흐름 3>에 가깝다. 교육부와 단위학교의 위아래 소통뿐 아니라 단위학교를 둘러싼 마을을 포함한 교육자원과의 네트워킹을 고려하면 <대안흐름 3>이 가장 적절한 유형의 국가교육위원회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교육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교육정책·집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독립성) 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의 중앙관서로 본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항과 제15조의 사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법안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독립된 국가기구의 성격을 보유하면서 교육부의 정책에 대하여 심의 의결 기능을 갖게 된다. 이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 대하여 갖는 것과 동일한 위상을 보유한다. 단지 독립적 국가기구이기에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선임에서 정당과 사회단체를 망라하여 추천하도록 하여 정치적 속성보다 ‘사회적’ 속성을 더 많이 갖도록 했다. 이와 같은 위상의 국가교육위원회는 당연히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게 된다. 이때 교육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2) 교육부

교육부의 권한 위임과 이양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교육과정 요목을 고시하는 업무와 자유발행제 교과서 저작을 관리하는 업무 및 대학교육 관리 업무 등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형평성 있는 재정 교부를 위한 기능도 교육부에 남게 될 것이지만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겨진다. 교육부의 많은 업무가 새로운 교육행정 플랫폼에 적절하게 사·도 교육청에 이관되면서 과중한 역할이 감소될 것이다. 특히 미래의 학교에서 사·도 교육청과 시·군·구 지역교육지원청의 고유한 업무 영역



이 확정되고 학교단위 자율 운영체제가 확립되면 교육부의 업무 영역은 교육과정 요목 고시와 더불어 형평성 있는 재정 교부 업무 정도로 감축될 것이다.

3) 법제화된 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그리고 교육감협의회가 함께 교육행정기구로 존재하게 될 경우 권한의 범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예견된다. 법제화된 교육감협의회는 혁신적 교육행정 플랫폼 체제 속에서 상하좌우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와 단위학교를 종단하여 연결하는 것은 물론 마을의 교육자원과 단위학교를 횡적으로 네트워킹하는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서 중추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 및 제언

1) 쟁점

가) 법제화된 교육감협의회와 위상과 교육부와와의 관계

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하여 그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경우 교육부와와의 관계 문제가 생긴다. ‘법제화’란 결국 교육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법적 근거’로 확보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협의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권한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교육부의 권한이 충분하게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 교육지원청으로 위임이나 이양되는 경우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위임과 이양이 지나치거나 혹은 회수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며 여전히 문제가 잠복된 상태이다.

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부와와의 관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은 역할과 권한의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헌법기관으로 격상되는 경우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당연히 받게 될 것이다.⁴⁹⁾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처럼 심의 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결국 교육부 권한이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양된 성격을 갖게 되면서 역시 ‘기구의 남발’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

49) 취지에 공감하나 법적 조건이 맞지 않고 옥상옥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다. 결국 교육부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 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교육감협의회가 법제화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2) 제언

- 가) 교육부는 교수요목만 고시, 단위학교의 자체 교육과정 편성과 자율적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혁신적 교육행정 플랫폼’을 구축한다.
- 나) 교육감협의회가 법적기구화하게 될 때 교육부, 교육청 및 교육감협의회, 국가 교육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에 대하여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 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교육감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제도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이찬승, 2014). 지방교육재정의 불균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교육부의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교부권한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8. 교원 인사제도

가. 문제의식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는 서울학생 역량 기준과 미래 서울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미래역량’을 새롭게 정립했다. 이는 OECD의 3가지 ‘역량’을 더욱 세분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요약하면 미래역량으로 인지 역량, 사회·정서 역량, 자율적 행동 역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서울미래교육은 학생들에게 역량기반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이 요구되며 이는 ‘역량중심 인사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⁵⁰⁾

미래교육체제 구축의 핵심 방향은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학교 자율운영 체제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 역량으로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단위학교에 교육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고려할 때 학교는 공방이나 스튜디오 기능 등의 수행이 요구된다. 이에 단위학교의 교육자원 집중은 더욱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래역량과 미래교육체제 연구에서 미래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었다.

역량기반교육 구현의 핵심은 교원의 역량 강화와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중심축은 미래역량기반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이다.

나. 미래역량기반교육 구현을 위한 교원 인사제도 혁신

1)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혁신

미래교육에 직결되는 추세 중에 인구 감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인구 감소는 당연히 취학연령 어린이의 감소로 이어진다. 서울의 일부 초등학교는 입학생 수의 급감으로 학교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다. 중학교도 이런 여파로 2016년 11월, 서울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하로 감축되어 있다.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구조 조정은 이와 같은 인구 감소 맥락에서 지속적인 과제로 제출되어왔다. 미래교육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이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50) 특히 교원 양성과 자격증 관련하여 새로운 입각점이 필수적이다. 미래학생의 역량 함양을 교육에서 구현하기 위한 교사의 조건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필수적인 교사의 역량’을 밝히는 연구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도 ‘역량기반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 교원양성 대학의 교수-학습에서 혁신적 변화를 함의한다. 강의 보다 실험과 실습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이 핵심이다. 교과목 구성에서도 융합을 고려하여 대대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다.

2) 교원 임용 제도의 혁신

현행 교원 임용제도는 ‘역량기반교육’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학교의 평가방식이 객관식 지필고사에서 주관식 서술형 지필고사에 수행평가 및 실기, 실행역량 평가로 이행하는 추세이듯 교원 임용제도 또한 객관식 지필고사 방식에서 주관식 서술형 및 수업 실행과 면접으로 변화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고려한다면 임용 시험에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은 물론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실습까지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실행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는다(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2016).⁵¹⁾

3) 교원 자격증 제도 및 연수

현재 교원 자격증은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이 있다. 그런데 이런 자격증은 사실 ‘역량’과 거리가 있다. 역량보다 경력과 연수를 고려한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이러한 자격증에 추가하여 특정 역량에 대한 검정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연수도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특화된 연수 내용과 과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단위학교 교장직 임용 제도의 혁신

국가 교육청이 교육과정 요목을 정하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실행하는 핀란드에서 중요한 점은 단위학교 지원체계이다. ‘마음이 학교’라는 핀란드의 개념은 지원체제의 풍부함을 나타낸다. 당연히 단위학교 교장은 마을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참여와 자치’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방향이 단위학교에 제도적으로 보증되어야 한다.

참여와 더불어 민주주의 원칙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됨으로서 단위학교 중심 운영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교사

51)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11월 30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역량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하며 특히 교감 임용에서 심층면접 강화, 동료평가 반영 등을 제시한다. 교장 임용에서는 내부형 공모제 비율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교장임기 4+4제를 제안한다.



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를 통한 책임과 의무의 명시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이와 같은 ‘마을이 학교’ 개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교장 임용제도의 혁신이 아울러 요구된다. 기존 교장 자격증제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장기적으로 자격증 폐지를 큰 방향으로 하여 공모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중기적으로 자격증에 근거한 임용과 공모제를 결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이수광, 2016). 2차 임기 4년은 공모제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미래교육이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단위학교가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민주적인 배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관료주의’ 경향의 임용제도 보다는 공모제와 같은 제도가 적절하다. 이와 함께 교감직의 임기 보직제 도입을 교육지원청 장학사의 임기 보직제 도입과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교감직을 둘러싼 과잉 경쟁의 폐단과 불합리를 지양하기 위해 교감 자격증을 먼저 이수한 순서로 발령을 내는 방안을 채택한다. 교감자격 연수에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교육연수원, 2016).

5) 장학사 제도의 혁신과 보직제 도입

미래교육의제로 장학사와 장학관 제도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위학교에 교육자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고려한다면 장학사와 장학관의 업무도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과 컨설팅 등에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을 ‘창의 융합수업 지원’과 같이 미래 교육과정 운영 지원 단위를 설치하고 단위학교 지원센터 개념으로 설정하여 새롭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장학사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여러 교육청에서 시도되고 있는 ‘보직제’ 장학사 제도를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약 5년 정도의 과도 기간을 두고 이를 실행한 후, ‘장학사’로 전직하지 않으면서 현직교사가 학교 간 전보하듯이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되어 ‘창의 융합수업팀’과 같이 전문적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지원 부서’에 배치되어 일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장학사와 장학관은 이런 경우 시·도교육청과 연수원 및 연구원, 과학 전시관 등에 배치되어 전문적 연구와 장학, 학교 지원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 장기적으로 학교지원센터에 현직교사가 근무

교육지원청이 ‘학교지원센터’로 재편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단위학교 교사들이 교육지원청에 전보되어 근무하는 방식이 합당하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많은 부분을 구청으로 넘길 수 있을 것이다(이기우, 2011).⁵²⁾ 이미 무상급식과 같은 업무는 서울특별시청과 각 구청에서 담당한다. 교육복지 영역 중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업무도 구청에서 전담하도록 이관되었다.

이와 같은 방향을 고려하면, 단위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까지 일반행정 단위에서 맡도록 하면 될 것이다.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밀접한 연계를 강화하자는 논의는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컴퓨터의 공급과 같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일반직에서 맡고 있는 이런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쟁점 및 제언

1) 쟁점

가) 학교장 및 교감 공모제와 보직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

인구 감소로 인한 서울의 폐교 경향 등을 고려하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이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역량 중심 인사제도로의 혁신을 고려하면 현행 자격증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인사제도 변경에서 공모제의 확대와 보직제의 도입은 핵심 쟁점이 된다.

나)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에 관련된 쟁점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식 행정체제에서 일반행정으로 업무 이관은 쟁점이 될 수 있다. 어떤 영역의 업무를 시청이나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가는 매우 정교한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쟁점이다. 특히 교육자치를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로 보는 관점에서 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52) 이 논문에서는 교육자치의 개념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에서 찾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교육행정만 별도 계선으로 정착된 한국의 행정체제가 특수한 것임을 살펴본다. 미군정에 의해서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실행되면서 이를 교육자치의 원칙처럼 여기는 흐름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핀란드는 단위학교 지원 업무를 일반 행정단위에서 담당한다. 한국은 현재 혼재된 상태이다. 특히 무상급식을 일반 행정인 시청과 도청에서 시행하면서 이를 위한 교육협력과가 설치되었고 이로부터 혼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청에서도 교육지원과를 운영한다. 무상급식이나 교육복지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며 결국 시·도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과 업무 중복 영역이 생긴다. 이런 이유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조정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다.



2) 제언

- 가) 교원양성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한다.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 나) 교육지원청의 일반 행정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다. 순수 교육지원 영역의 업무만 남겨 보직제 장학사 제도를 도입한다. 단기적으로 현장 교사들이 보직제 장학사로 전직하여 업무를 맡는다(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2016)⁵³⁾. 장기적으로 ‘전보’의 방식으로 현장교사들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도록 한다. 장학사나 장학관은 본청이나 부속 기관에서 교육연구, 장학, 전문적 교육행정 업무를 전담하면 적절하다고 본다.
- 다) 단위학교의 관리직 임용에서 역량을 중시하는 평가체제를 확립한다(이수광, 2016). 이런 평가는 기존의 가산점에 기초한 점수 산출 방식보다 포괄적 역량평가 방식을 지향하는 공모제에서 가능하다(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2016). 따라서 현행 관리직 보직화와 공모제의 확장을 통해 역량중심 관리직 임용이 가능할 것이다.

53)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모든 교육전문직원을 3년 임기제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전문직원 5년차가 되어야 교감자격연수 면접대상자로 지명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전문직원 고유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런 제도를 중단기적으로 교육지원청 인사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참고 문헌

- 고영립 역(2006). 에드가 모랭. 미래의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7가지 원칙. 당대.
- 공은배(2016).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성과와 과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곽병선·문용린·한명희·윤기옥·김미숙·김재춘(2004).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교육개발원(2014).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portal/main.do>)
- 교육연수원(2016). 교육연수원 혁신 성과 및 향후 과제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 구본권(2015). 로봇시대, 인간의 일. 어크로스.
- 김명숙 외(2012). 현대교육평가의 이해. 교육과학사.
- 김병주·이길재(2016)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투자 성과와 과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 외(2006). 미래형 학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련(2015).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 복잡성과학, 사회적 자본, 교육거버넌스 원리 적용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3(2).
- 김용일(2013).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40(4).
- 김우경(2016). 제주한국국제학교(KIS Jeju)의 교육과정 운영. 2016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김유리(2016a). 서울미래교육(미래역량) 포럼 자료집(미발간). 서울특별시교육청.
- 김유리(2016b).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서울교육. 서울교육정책연구소.
- 김인숙(2016).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로 학생 성장 지원하기.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김재춘·김재현(2004).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의미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경·김민남·김성근·오수현·이중현(2004). 교과서 편제·집필·검인정 채택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김진숙(2016).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역할. 월간교육 7월호.
- 김진희(2015). 평화와 협력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2015 세계교육회의 의제 형성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김태완(2015). 미래학교 도입을 위한 기본설계 구상. 현안보고 CP 2015-01-8.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완(2016). 미래사회의 전망과 교육 구상. KEDI 창립 4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9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남유선, 김인숙(2015). 독일의 개방형 의사소통 시스템 ‘플랫폼’-독일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제70집.
- 류지성 외(2012).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삼성경제연구소.
- 마사 누스바움(2015). 역량의 창조-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서울: 돌베개.
- 민용성(2008).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의 가능성과 한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8). 핵심역량 정의 및 선정 프로젝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박수홍 외3인(2015). 메타포 분석을 활용한 현재교육체제와 미래 교육체제의 이미지 차이 분석 연구. 교사교육연구(2015), 54(1) 31-45.
- 박영숙, 벤 고르첼(2016). 인공지능혁명 2030. 더블북.
- 박재원, 윤지은(2009) 역. 후쿠다 세이지. 핀란드 교실혁명. 비아북.
- 변미리(2012). 2030 서울의 미래. 서울연구원.
- 변미리(2015). 2045 서울미래보고서 01-시민참여형 미래서울 만들기. 서울연구원.
- 보도자료(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 보도자료(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주요 사항(2014). 교육부.
- 보도자료(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시안 발표. 교육부.
- 보도자료(2016). ‘자유학기제와 2015년 개정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교원양성과정 개편 방안’. 교육부.
- 보도자료(2016).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교육부.
- 보도자료(2016).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교육부.
- 보도자료(2016).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기본틀 설계를 위한 공청회 개최. 교육부.
- 보도자료(2016). 현장에서 인정 못 받으면 교장·교감 되기 어려워. 경기도교육청.
- 사토 마나부(2000). 손우정 역(2006).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서울: 에듀넷
- 서울연구원(2016). 서울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세미나-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서울연구원.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2015). 서울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방안 연구. 서교연 2015-38 2015 교육정책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서울교육 방향과 해설.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혁신미래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 서교연 2014-49. 201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 연구 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2015). 서울교육통계(2011~201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배치계획(2016~2020).
-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안내자료.
- 송경오 외(2007). 역량기반 교육개혁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교육 34(4).
- 송경진(2016) 역. 클라우스 슈밥 저.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 송병준·주범(2011).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학교건축 계획 방향에 대한 기초연구. -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1), 190-198.
- 송순재(2005). 학교건축의 교육학적 성찰, 어디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초등 우리교육, 2005, 송순재의 학교 환경 이야기, 54-58.
- 송윤진(2016).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 엄문영 외(2014). 교육복지투자실태 및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온정덕 외(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초등학교) 개발 연구. 교육부.
- 유네스코 아이사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 학습 길라잡이-한국판 해제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유성상 외(2015). 역량기반 대학교육 담론의 한계 및 대안적 논의 탐색. 평생학습사회 11(2).
- 윤은주(2015). 2016 핀란드 국가 핵심 교육과정 개편 : 학습의 기쁨(joy of learning)을 향한 끝없는 여정. 한국교육개발원.
- 윤종록(2016). 소프트파워. KBS 명견만리.
- 윤희주(2012).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 이가영(2015). 전북 교육의 핵심역량 체계 개발 연구. 전북교육정책연구소.
- 이강운(2015). 인공지능(AI)의 현재와 미래, 삼성 Sericeo 삼성경제연구소.
- 이광우 외(2014).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7.
- 이기우(2011).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향’. 제도와 경제 4(1), 61-62.



- 이만열(2016).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21세기북스.
- 이미숙, 정구향, 이근호, 박창언(2011).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보고 RRC 201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민철 외(2015). 서울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이병호(2016). 지방교육재정 경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광(2016). ‘416 새로운 교육의 시작’,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연수(2009). 미래형 생활패턴에 대응하는 학교건축. 건축, 53(7), 15-18.
- 이용환·이용환(2011). 정보화시대의 교수·학습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학교 건축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1(4), 459-468.
- 이은진(2016) 역. 피시 살베르그 저. 핀란드의 끝없는 도전. 푸른숲.
- 이인희, 이지혜, 금창호(2016). J교육청의 조직문화 유형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2, 216.
- 이지선(2016). 제주한국국제학교(KIS Jeju)의 학생 평가 방법. 2016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이찬승(2014).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 그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찬승(2016). 한국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10가지 질문과 10가지 대안. 교육저널 제74호. 교육을바꾸는사람들.
- 이찬승, 김은역(2015)역. 앤디하그리브스와 데니스 설리 저. 학교교육 제4의 길 : 학교교육 변화의 역사와 미래방향. 교육을 바꾸는 책.
- 장남중 외(2016). 미래 서울의 도전과 선택. “서울의 미래 서울의 선택” 포럼자료집. 서울연구원.
- 장성훈(2016).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역할. 2016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전북교육정책연구소(2015). 전북 교육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실천 가능성 탐색-전북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전북교육2015-537 교육정책연구 2015-014.
- 정윤경(2015). 아마티야 센(Amartya Sen)의 잠재가능성 접근(capability approach)과 교육. 교육사상연구 29(3).
- 정인순(2016). 미래교육의 초석 완전학교자체평가. 서울교육, 224.
- 정재승 외(2014). 1.4킬로그램의 우주, 뇌. 사이언스북스.
- 조벽(2011). 인재혁명. 해냄.

- 조상식 외(2015).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학력관의 정립과 실현 방안. 서울교육 2015-108.
- 조희연(2016). 교육 불평등과 정의로운 차등. 2016 서울국제교육포럼자료집.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주형미, 최정순, 유창완, 김종윤(2016).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Ⅰ): 초·중등 교과 교육의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www.eduinfo.go.kr>
- 직업교육훈련촉진법(법률 제10776호).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 2016.8.4.]
- 차두원(2016). 제4차 산업혁명과 21세기 학생의 역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차윤경(2014). “선진국의 다문화 교육”, 교육개발 통권 190호.
- 찰스파텔 외(2016). 4차원교육 4차원 역량. 서울: 새로운 봄.
- 최병삼(2016). 꿈을 설계하는 플랫폼, TFA, 삼성 Sericeo, 삼성경제연구소.
- 최상덕 외(2013).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핵심역량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한국교육과정개발원.
- 최용수(2016). 아이들의 삶을 위한 교육, 그리고 교육과정-수업-평가.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최용환(2015). 서울형 혁신학교 성과평가 연구-고교유형별 학교효과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최윤식(2016). 미래학자의 인공지능 시나리오. korea.com
- 평생교육법 시행령[시행 2016.8.4.]
- 평생교육법[시행 2016.8.30.]
- 하정운 외(2014). 시스템 사고에 기반한 지역 교육청 기능 및 조직재편 정책의 문제 및 원인 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나믹스연구 15(2). 78-80.
- 한국교육개발원(2012~2016). 2012-2016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왜 지금, 토론·협력학습에 주목해야 하는가?. 현장과 소통하는 KICE 연구·정책브리프 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교육 발전 전략 구상: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1-12).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 한혜정, 곽영순, 김현비, 남창우, 박상욱, 이승미, 임은영, 주형미(2014). 창의융합교육과정



- 혁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6.
- 홍선주, 김태은, 황은영(2009). 초등학교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 홍선주, 이명진, 최영인, 김진숙, 이연수(2016). 지능정보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방향 탐색. 2016 KICE 이슈페이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홍후조, 광병선, 성열관, 정영근, 민부자, 이병호, 이승미, 김대석(2010). 한국 교육과정의 비판적 이해와 미래구상. 연구보고 RRC 201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황규호 외(2014). 국가 교육과정 개선의 과제와 방향. 국가교육과정포럼 제4차전문가토론회 자료집.
- Anne Raasakka(2016). Innovation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in Finnish Education. 2016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14).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 OECD(2001). Scenarios for the Future of Schooling. Published in What Schools for the Future?
- Regina Frei(2011). A complex system approach to education in Switzerland. In: Lenaerts, Tom, Giacobini, Mario, Bersini, Hugues, Bourguin, Paul, Dorigo, Marco and Doursat, Rene, eds. Advances in artificial life, ECAL 2011: proceedings of the eleventh European conference on synthesis and simulation of living systems. MIT, p. 247.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특별기고

- 교육불평등과 ‘정의로운 차등’: ‘성공’한 ‘추격산업화’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평등 정책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 미래교육 글로벌 트렌드 분석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전략특임팀 팀장
- 미래변화와 유아교육
양애경 한서대학교 교수
-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의 변화 방향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 변화하는 미래와 학교의 역할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교육불평등과 ‘정의로운 차등’ : ‘성공’한 ‘추격산업화’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평등 정책¹⁾

조 희 연 서울특별시교육감

I 머리말

이 글에서 나는, 한국의 ‘추격산업화’²⁾시대의 성공적 진행에 따라서 역설적으로 교육불평등이 심화되어져 왔고, 교육불평등은 이제 계급·계층적 격차를 세대 간에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한다. 나아가 서울교육청에서 이러한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정책실험들을 소개하게 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현존하고 그것이 교육의 영역에서의 불평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교육불평등이 존재하는가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다. 교육 영역에서의 ‘정의로운 차등’은 현실적으로 불평등의 구조가 현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차등적 정책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도덕적 관점에서나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정의로운 차등 정책은 한 사회에서 복지의 보편적 확장에 따라 그 적용의 지점과 형태가 다를 것이다. 예컨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전과 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 등록금이 무료인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의 적용의 양상은 다를 것이다. 정의로운 차등 정책은 복지의 보편적 확장에 따라 그 보편적 복지가 포괄하지 못한 영역에서 적용될 수도 있고,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일반적 가치지향이자 정책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상쇄하는 불평등 완화의 노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긍정할 수 있다. 실제로도 자본주의적 구조 및 시장 질서 내에서 개인들 간의 자유경쟁의 결과로 주어지는 불평등에 대하여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정의로운 차등은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1) 2016년 10월 서울국제포럼 자료집에 게재된 글임.

2) ‘추격산업화’란, 서구의 높은 산업적 단계에 도달하고자 빠른 속도로 그 뒤를 쫓아가는 식의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한국은 해방 이후, 특히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서구의 경제적 발전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전 국가적 동원 체제였으며, 그 결과 서구가 긴 시간에 걸쳐 이룩한 산업발전의 수준을 불과 수십 년 만에 달성하는 놀라운 성취를 보였으며 그것을 흔히 ‘압축적 성장’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추격산업화 과정에 결부된 한국의 교육체제 역시 ‘추격교육’이라 부르고자 한다.

위해서 시행되는 역차별 정책 혹은 차별상쇄 정책(affirmative action)에서부터 다양한 사회 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관철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강자와 약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약자에게 역차별적 우대를 하는 이러한 정의로운 차등의 정도와 형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지며, 한 사회 내에서도 역사적 발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³⁾. 이 글의 후반에서는 한국의 교육기관, 특히 서울교육청에서 이루어거나 지향하고 있는 정의로운 차등의 정책을 소개하는데 바쳐진다.

II 추격산업화 시대의 교육불평등과 추격산업화 이후의 교육불평등

한국은 주지하다시피 성공적인 ‘추격’산업화에 성공한 국가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공의 역설’, ‘성장의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

□ 교육입국의 의미

한국에서는 ‘교육입국(敎育立國)’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말 그대로 교육으로서 나라를 세운다는 동태적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육이 나라를 떠받치는 기본 토대라는 정태적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또한, 일정한 국가 설립 단계에서의 가장 중추적 동력이 교육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국가 설립 이후 이를 발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기능 요소가 교육이라는 개념이기도 하다. 근대화 이후 한국에서 교육입국의 의미는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도 한국은 교육을 통해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나라로 인식된다. 이 때 ‘교육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교육을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역량 있는 산업인력과 인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산업화라는

3) ‘정의로운 차등’은 복지적 측면과 더불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승자독식적인 분배의 불평등을 간접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경쟁 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차등 상태를 사후적으로 보정하기 위한 장치인데, 원리적으로는 ‘결과적(분배적) 차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불평등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점의 확장과 노력을 제약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의로운 차등’은 ‘사회적 차등(불평등) 해소 단계’(그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지향한다면)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적, 과정적 방법론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강자에게 덜, 약자에게 더 지원하는 ‘정의로운 차등’은 사회의 평등성이 높아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없거나 차이가 매우 적은 고차원적인 복지 국가에 도달한 사회라면 필요치 않은 원리다. 다시 말해,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없는 ‘정의로운 평등’의 사회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다. 적극적인 정의로운 차등 정책은 최근 이른바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선별복지 vs 보편복지 논란에서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보편복지로 규정하려는 노력과 일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 지향점으로서의 보편 복지로 가기 위한 현실적 경로상의 불가피한 방법론으로 선별 복지를 위상화 해볼 수 있다면, 정의로운 차등 역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지향과 논리적 충돌없이 현실에서 적용가능하고 필요한 원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것은 흔히 생산력이 증가하고 경제규모가 늘어나며 산업 구조가 전근대적인 데서 근대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현상적 결과는 저절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요건들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 중의 핵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또는 자원으로서의 인간)인 것이다. 그 인력의 ‘역량적 정도’에 따라 산업화의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 산업 사회로의 도약을 문명사적 흐름에서 하나의 입국 과정으로 본다면, 그러한 입국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역량 개발이고, 그런 경우의 교육입국은 바로 ‘역량 있는 산업인재의 양산을 통한 산업국가화’를 의미한다. 한국에는 일찍부터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통이 있었고, 해방 이후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그 전통 위에서 교육을 통한 근대적인 산업인력과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교육입국, 즉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의 ‘교육을 통해서’ 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교육이 ‘기회의 통로’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이 나라를 떠받치는 중추적 힘이 되는 것이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교육이 개개인의 삶을 떠받치는 토대가 된다. 산업화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민 전체의 능력 개발, 즉 국민의 보편적 역량 개발은, 개인 차원에서 보면 평등한 역량적 조건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된다. 물론 소수의 고역량인, 즉 엘리트집단을 통한 입국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근대화 이후의 산업화로서의 입국 과정은 전 국민적 차원의 산업인재화를 필요조건으로 하는데, 전 국민의 산업인재화는 모든 국민 역량의 상향평준화를 의미하고, 그것은 누구나 원하고 노력하면 그러한 역량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 국가의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도약은 쉽지 않다. 산업화로서의 교육입국 개념 속에는 ‘나에게 주어진 교육기회의 평등에 기초하여 나라를 세우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는 심리적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절대빈곤 상황에서 한국의 모든 부모들은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면 자신과는 다른 좋은 직장과 높은 국가엘리트, 산업엘리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졌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한국 부모들에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다. 실제 이처럼 일종의 계층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는 한국민들을 역동화시켰고 근대산업에 부응하는 형태의 ‘근로 역동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계층 간 이동은 활발해지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상태에서 산업화가 추진될 수 있었다. 많은 동아시아 발전에 대한 외국 학자들이 한국의 성장 모델을 ‘평등을 동반한 성장(growth with equity)’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⁴⁾.



실제 국내적으로도 교육은 한국민에게 희망의 상징이었고 희망의 통로였으며, 혹은 희망 그 자체였다(나는 교육을 충분히 못 받았지만 내가 희생을 하면 아이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그 자체였다).

교육평등 문제와 관련된 가장 첨예한 영역으로서의 고등학교 학교체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추격산업화 시기에는 이른바 ‘고교평준화’ 조치⁵⁾로 인해 적어도 중등교육 단계까지만은 일률적으로 평등한 교육을 받았다. 전통적인 사립 명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들의 수준이 일정하게 평준화되었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대학 진학이 이뤄졌었다. ‘개천에서 용나던 것’이 가능하던 시절이었다⁶⁾. 개인의 경제적 배경에 좌우되는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만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던 시절이었다.

□ 산업화 이후 ‘성공의 역설’

그러나 산업화가 역설적으로 성공하면서,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시장주의적 교육정책 기조가 출현하면서, 이러한 평준화의 기조는 균열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이른바 ‘5.31교육조치’ 이후, 일정한 신자유주의적 교육 기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경직성과 획일성을 극복한다는 명분하에 자유시장적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 핵심적 두 가지 경로가 ①고교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수직적 서열화,⁷⁾ ②사교육이라는 시장의 압도성이다.

4) 보다 정확히 하자면, ‘평등을 동반한 성장’에서의 ‘평등’은 결과적, 분배적 평등이라기보다는, 능력주의에 기초한 기회의 평등,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노력하면) 성공 내지 출세할 수 있다고 하는 출발선상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것을 위해서 초등학교의 의무교육화,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한 것, 거기에 더해 70년대에, 이른바 ‘고교평준화’는 그러한 교육 기회의 평등을 더욱 능동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산업사회적 교육입국은 이러한 국민 보편 교육으로서의 의무교육의 확대와 초·중등 단계에서의 평준화 조치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197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과도한 입시 경쟁을 통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폐단을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대도시의 소수 일류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심각한 입시 경쟁과 고등학교의 양극화적 서열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부터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지역 단위에 기초한 추천제로 선발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고교 간 격차가 일정하게 해소되었기 때문에 ‘고교평준화’라고 부른다.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무시험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재벌 중심의 산업화로 자본-노동의 극심한 소외와 국가 경제 불평등 체제를 심화시켜갔던 권위주의적 통치자였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와 같은 강력한 교육평등주의적 조치를 하였다는 것은 일견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6) 보잘것없는 환경과 형편에서도 개인의 노력의 결과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것을 비유하여 표현한 한국의 속담이 ‘개천에서 용난다’이다. 용은 한낱 개천이 아니라, 거대한 장강, 호수, 깊은 계곡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디 개천은 용이 나지 않는 것이 통례이며, 그렇지 않다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과거 교육기회의 평등 조건에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개인이 노력하여 충분히 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가능한 사회라고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천에서 용나는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는 진일보한 상태이긴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개천과 장강, 바다의 차이가 없는, 즉, 모든 ‘물’이 평등한 근본적 조건을 갖춘 사회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것 말이다.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보편적이고 상시적인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처한 학생이 서열의 정점에 있는 고교와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교육 자원을 독식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적 평등’이 있었고 교육이 기회의 통로로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초기 산업화의 성공의 조건들은 역설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종의 성장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추격산업화 시대의 교육평등은 그 시대적 조건에 한정하여 필요했던 특수한 평등, 불완전한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회의 평등이 갖고 있는 한계 또는 불완전성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국가 동원 체제 방식의 산업화를 위한 기능적 수단으로 설정되었던 교육 기회의 보편적 확대(의무교육)와 평등성은 후기 산업시대와의 불일치로 나타났고, 그 모순의 성숙이 임계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육평등으로 진화(전환)하지 못한 채,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압도된 채, 그것에 다시 종속되는 형태로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추격산업화시대의 교육평등의 일면성과 신자유주의의 창궐로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하는 이중적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추격산업화 시대의 교육평등성은 국가 산업화를 위한 도구적 지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내용적으로는 획일성, 기계성에 갇힌 채, 인간의 전인격적 성장과 발달을 제약하거나 왜곡하기까지 한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또 다시 교육이라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의 후기 산업 사회적 체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구적 역할로 설정하더라도 그 적합성, 기능성이 매우 떨어진 것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본질론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궁극적인 인간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미지의 시대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그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구시대적 교육 원리와 기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그 이후 시대에 부가된 교육불

7) 고등학교의 서열화 과정을 촉진한 것은, 1980년대 외국어 인재를 기르기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가 실제로는 중학교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대한민국의 서열화 된 대학 체제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소수의 대학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킨 것이다. 지금도 외국어고등학교의 그러한 입시 명문고로서의 최고 지위는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다양성’, ‘자율성’이라는 명목적 취지로 도입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유형은 이러한 고교 서열 체제를 급속하게 확장했다. 시장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정부의 교육 정책과 배타적 성공을 갈구하는 대중의 욕구가 결합하여 이러한 서열체제를 확장, 공고화하려는 힘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심각한 대학서열체제가 고등학교에까지 전이되고, 심지어 지금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도 그러한 서열화 자장 안에서 불안하게 동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등성 역시 해결하여, 역설적이게도 최소한 추격산업화시대의 교육기회의 평등성 수준으로라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와 있다. 한 마디로 후기 산업사회 시대의 평등한 복지국가적 체제에 조응하는 그러한 수준의 고차원적인 ‘신(新) 교육평등’이 필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⁸⁾. 그것을 나는 이 글에서 밝히듯이, ‘정의로운 차등’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에서의 정의로운 차등은, 그것이 존립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사회경제적 체제의 평등성을 전제로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⁹⁾.

이러한 성장의 역설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상대적으로 교육의 평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성공한 산업화의 의미는 국가적인 부가 대폭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가 이전에 비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모두가 동일하게 잘사는 것이 아니라,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으로 분화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잘사는 사람은 잘사는 부모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부모가 된다. 그 결과 잘사는 부모의 자녀들은 돈의 힘으로 없는 재능도 만들어 낼 수 있고(한국처럼 사교육의 힘이 큰 상황을 염두에 두어보라), 못사는 부모의 자녀들은 있는 재능도 개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growth with equity in education’은 이제 ‘post-growth without equity in education’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교육이 더 이상 한국민들의 경제적 역동성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역동성을 죽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8) 이 글은, 체제적 측면에서의 교육 평등을 논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다. 교육 평등이라 함은, 단순히 경제주의적 측면에서의 조건으로서의 평등, 기회의 평등, 또는 더 나아가 결과적 평등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천착할 가능성을 제약한다. 즉,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서 볼 때, 교육은 단순히 특정 사회의 유지와 세대 재생산을 위한 도구적 성격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또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평등주의적 인격으로의 수렴이라고 하는 원대한 인류학적, 인간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숭고한 역할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교육평등론은 이번은 별론으로 하여 또 다른 기회에 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9) 교육체제는 사회체제(국가체제)와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교육은 사회, 경제체제라고 하는 하부구조 토대에 조응된 상부구조(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결과물’) 사회기능영역이라고 하는 고전적 설명법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교육의 평등성은 사회체제의 평등성을 능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무심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은 사회의 결과물이므로 주어진 사회의 체제 수준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존재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이 사회체제를 극복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주의주의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가치와 정책은 한국 사회의 많은 모순적 한계를 혁파하고 보다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행위이기도 하다.



III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으로 가는 과정?

성장 ‘이후’, 그리고 성공적인 초기산업화 ‘이후의’ 조건을 검토해보자. 어떤 의미에서 60·70년대 급속한 추격산업화의 시기는 식민지 시기 이래의 전근대적 계급·계층구조가 해체되고 근대적 계급·계층 구조가 미확립된 과도기였다. 그 과도기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을 통한 경제적 역동성은 성공적인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역동적인 사회적 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의 큰 흐름은 이전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감소하고, 근대적인 계급·계층구조가 점차 형성·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실 산업화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대기업 집단과 상층, 고소득층은 새롭게 갖게 된 경제적 우월성을 지속성 있게 하고 세대 간에 재생산하고자 하며 새로운 진입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독점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산업화 시대 이후에 불어 닥친 민주화의 시기는 산업화 이후의 새로운 평등을 촉진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외환 위기 이후에 내부적인 힘으로 전환된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계급·계층 구조화를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교육현장에 마주하고 있는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가 미시적인 학교현장,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사회화적인 의미에서 계급·계층은 단지 객관적인 차원만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며, 문화적 차원, 주관적인 차원, 생활문화 및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분화를 내포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초기산업화 시대의 평등한 교육은 이제 불평등한 교육으로 그리고 교육불평등의 구조화로 나아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 교육을 통한 부모의 지위 전달

먼저 잘사는 부모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부를 도구로 하여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월한 경제적·사회적 위치를 자신의 자녀 및 손자·손녀 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공교육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의 융성은 이를 반영한다. 물론 이는 대학입시경쟁이 치열한 데 따른 것이기는 한데, 사교육을 통해서 우월한 학업성취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은 대단히 번창하고 있다. 14조에 이른다라는 한국의 사교육 규모는 평가자에 따라서는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친다면 30조에 이른다라는 보고도 있다. 교육부 예산 53.2조원(2016년 기준)을 상정할 때,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교육불평등과 관련하여, 사교육의 번창은 부모 세대의 경제적 격차가 자녀세대의 교육격차로 전이되는 매개적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 계층적 ‘구별짓기’: 빈부에 따라 다른 교육?

계층적 양극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별짓기(distinctions)의 노력들이 중상층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적 흐름이 격화되는 속에서, 국민들은 각자의 계층적 범주 내에서의 생존을 위한 경쟁, 그리고 계층간의 배타적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상층의 부모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재생산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일반적인 학생들과는 구별되는 ‘일류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류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서민들이 다니는 학교와는 구별되는 일류고교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구별짓기의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사회이다. 이 격차를 배경으로 하여 대학은 가파르게 서열화되어 있다. 이른바 ‘SKY대학’¹⁰⁾ 등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이러한 대학입시경쟁은 고교 수준에까지 확장되어 고등학교체제는 대단히 서열화 되어 있다.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사실 서열화 된 대학체제의 상위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이처럼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구별짓기의 노력은 어렵게 이룬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체도 불안하고, 한국사회가 사회복지제도도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사회적 불안의 반영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못사는 사람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잘사는 사람도 불안하다. 더구나 이러한 불안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으로, 그리고 그 불안을 상쇄하기 위한 ‘올인’ 식 교육경쟁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구별짓기의 또 다른 양상은 ‘중입배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교 수준에서의 구별짓기는 일류고교에 보내기 위한 경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의무교육의 일부로서 임의(random) 배정방식으로 진행되는 중학교 배정에서는 인근의 좋은 사립학교 및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는 공립학교에 자신의 자녀들을 배정받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근한 예로 2016년 중입배정에서 몇몇 지역에 나타난 갈등을 예로 들 수 있다.

A자치구의 경우, 갈등은 새롭게 건립된 중산층 아파트의 부모들이 기존 아파트 주민 자녀들이 다니던 좋은 사립학교에 배정해달라고 하는 민원으로부터 출발했다. 기존의

10)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의 각각 영어 이니셜을 합쳐서, 그것이 입학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늘만큼 높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SKY’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수년 동안 주어졌던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아간다고 하는 반발로, 신설 아파트 주민들은 중입배정의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자녀에게 새로운 입학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항변했다.

B자치구의 모 중학교는 신설중학교로서 인근의 부모들이 모두 선호하는 학교이고, 대규모 개발 이후 들어선 주택단지에서 어느 아파트의 주민이 이 선호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가하는 것을 둘러싸고 나타난 갈등이었다.

이 두 사례는 이미 경제적으로 분화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중학교 배정에서부터 선호학교에 입학하도록 구별짓기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중입배정을 둘러싸고 혹은 때로는 초등학교의 입학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구별짓기의 노력은 중산층 아파트에 사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임대아파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지 않기 위한 형태로도 나타난다. 인근의 임대아파트가 있는 경우 공공 임대아파트가 주변의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고 하는 취지에서 반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자녀들이 임대아파트의 ‘못사는 아이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으로도 나타난다는 말이다. 현실적인 조건과 각자의 경제적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적 관점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적 삶을 경쟁과 자기중심적인 갈등적 삶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 아비투스¹¹⁾의 분화?

사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부유층 고급 아파트에서 성장하는 아이들과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이미 그들의 생활양식과 인식 등에서도 이미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부르디외가 말한 아비투스(arbitus)의 차원에서 확연한 구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에서 계급·계층이 본격적으로 구조화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부모의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아비투스에서의 분화를 동반하게 되는 것은 총체적인 의미에서 계급·계층사회로 한국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계급·계층의 구조화를 향하는 흐름만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사회의 오랜 전통이 교육균등¹¹⁾의 가치가 지속되

11) 임시정부의 기본사상을 이룬다고 하는 조소앙의 ‘3균주의’에서 정치균등, 경제균등에 이어 다양한 사회적 영역 중에서도 교육균등이 3균에 든다고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교육평등에 대한 전통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를 바라는 다양한 운동과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의 다양한 시민사회의 역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추격산업화가 독재로 평가되는 권위주의 정권과 결합되어 진행된 상황에서 80년대 민주화의 물결은 산업화가 동반한 불평등의 확대에 대항하여 평등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평등을 향한 요구는 한편에서는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주장하는 공정성에 대한 요구로,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인 차원에서의 공평성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는 사회경제적 상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재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들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칙과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후자는 그러한 과정적 차원을 뛰어넘어 결과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한국사회의 동질성과 평등주의적 기대?

또한 더욱 심층적인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오랜 동안의 인종적·문화적·언어적·역사적 동질성은-최근에는 이질화되고 있지만-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공동체적인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를 갖게 만들고¹²⁾, 이는 교육불평등을 향한 다양한 열망과 요구, 그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내적으로 볼 때, 산업화 진전으로 인한 부의 격차의 확대와 교육을 통한 그것의 구조화의 흐름이 한편에 존재한다면, 다른 한편에는 민주화의 여파 속에서 분출한 평등에의 욕구, 한국민의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로 인한 반대의 흐름이 각축하면서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후자의 흐름은 산업화로 인해 부가 증대된 한 사회가 복지사회로 이행하려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등주의적 방향으로 한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단지 국내적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글로벌한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90년대 초반 국가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조건은 한국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과거제도’ 등은 학습, 교육을 통한 계급·계층 상승이라고 하는 가치가 현실에서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문 숭배적이고 교양과 지식을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유교문화적 전통에 의해서도 문화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12) 이 점은 최근 내가 방문한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학자들에 의해 복지국가 발전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동질성은 공동체적인 평등주의적 기대를 높게 만든다는 점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다.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에 대해서는 조희연, 2016, <투트랙민주주의> 1권, 서강대출판부 참조.



□ 사회주의의 위협이 아니라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위협?

사실 서구의 복지국가로의 전환-그 전환 속에서 교육평등과 교육복지의 확대를 포함한다-은 2차 대전 이후의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사회주의의 출현과 2차 대전 이후의 사회주의의 확산 속에서 이루어진 냉전적 대립에 의해서 촉진된 점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불평등으로 상징화된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사회주의의 등장과 확산, 2차대전을 계기로 한 중국사회주의 혁명 및 제3세계에서의 사회주의적 흐름의 위협적 확산은 자본주의로 하여금 평등을 향한 사회민주주의적 흐름이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등장은 이러한 글로벌한 조건에 의해 크게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이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한 조건은 정반대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과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는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80년대 말-90년대 초반의 소련 국가사회주의의 붕괴, 그에 따른 대안 부재의 TINA(there is no alternative)증후군, 후쿠야마 류의 ‘역사의 종말론’적 인식의 확산,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유시장논리의 전지구적 확산, 90년대 말 전후의 성장기조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뒤늦게 교육복지를 포함하여 사회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적 흐름과 시민사회적 흐름, 평등주의적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교육평등을 향한 흐름과 복지국가를 향한 흐름은 국내적·국제적으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13) 앞서, 근래 나타난 한국의 교육 문제의 두 경로는 고교서열화와 사교육의 압도성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개인적, 가정적 역할이 공적 기능의 불완전성을 대신하거나 압도하고 있다. 교육복지국가로의 진전이 매우 더디거나 요원한 상태에서, 마치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수준에서 각종 상업 보험과 최근 만연한 상조회사들에 의존하는 대중의 삶에서 확인되듯이, 교육 역시도 국가가 담보해주지 못하는 사회 안전성, 평등성의 공백에서 자구책을 통해 경쟁적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경제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보다 우월하고 유리한 교육 자원을 독점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가정의 역할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

IV 교육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

바로 교육청은 바로 이러한 조건 위에 있다.

1.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기 위하여

이상에서 서술한 것처럼, 현재의 한국사회는 국민들의 평등주의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불평등이 심각하게 되고 ‘교육을 통한 계급적 불평등의 재생산’이 우려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제력의 심각한 불평등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는 과잉교육경쟁은 이제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는 ‘그들만의 경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는 현재의 교육경쟁이 비합리적 경쟁으로 작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도덕한 경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경제력을 높아지면서 중산층 가족의 경우 가용(可用)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 자원을 ‘올인’하듯이 자녀교육에 투자하게 되면서, 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더욱 부도덕한 경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언 모리스는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최파일 옮김, 2013, 글항아리)는 근대로의 전환기에 왜 서양이 동양을 추월하기 시작했는가, 왜 한 강대국은 몰락하고 다른 강대국이 패권을 이어받는가라는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발전의 역설’과 ‘후진성의 이점’이란 개념으로 사회 발전과 쇠퇴를 설명하고자 한다. “발전의 역설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외려 발전을 가로막는 힘이 점점 세져 단단한 천장을 형성한다는 역설을 의미하며, 후진성의 이점은 문명의 핵심부를 모방할 방법이 잘 작동하지 않는 후진 지역에서 가장 큰 진보가 일어난다”는 역설을 의미한다. 바로 현재의 한국의 교육불평등 문제는 ‘발전의 역설’(사회가 발전할수록 외려 발전을 가로막는 힘이 점점 세져 단단한 천장을 형성한다는 역설)이 한국의 교육영역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연봉=토익 점수=대기업 취직’이 일치하는 식으로, ‘발전의 기득권집단이 그 기득권으로 자원과 재능의 합리적 순환과 발현을 왜곡’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것은, 근대화 혹은 ‘성장의 역설’이 교육영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우리 사회는 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초기에 상대적으로 ‘교육평등’이 있었다.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 잘한다’는 말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이제 이것은 아주 예외적이어서 ‘미담’이 될 뿐이다. 지금은 연봉이 높은 부모들이 어떻게든 애들을 닦달해서 토익점수도 높이고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에 보내고자 한다. 가난한 집 애들은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 잘사는 집 부모들이 아이들을 닦달해서 좋은 지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혹한 자본주의적 경쟁구조’와 ‘벼랑끝 사회’라고 내가 부르는 우리 사회의 현실 앞에서 개개인의 ‘합리적’인 전략적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재능이 없는 학생들도 ‘돈의 힘’으로 높은 지위로 가고, 재능이 있어도 ‘돈 없는’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이 재생산된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최고의 재능은 사장(死藏)될 수도 있으며, 최고의 재능이 아닌 경우에도 최고로 활용될 수 있다.

□ 개인의 합리성이 사회구조적·역사적 비합리성으로?

그런데 이것도 몇 년간 지속된다면 문제가 안 된다. 수천 년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회에 왜곡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국, 앞선 나라들이나 집단은 뒤처지게 된다. 다른 여러 내적 기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발전의 역설’은 바로 발전의 기득권집단이 그 기득권으로 자원과 재능의 합리적 순환과 발전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애들이나 연고집단의 애들이 그 기득권적 지위를 ‘세습’하기를 바라는 개개인의 ‘합리적’ 행위는 그 사회를 전체적으로는 퇴행하게 만드는 것이다(물론 이것은 집단과 사회의 ‘운명’ 같은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개인의 합리성이 사회구조적·역사적 비합리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여야 한다.

나는, 교육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촉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신(新)신분제 사회’처럼 작동한다면, 그 사회의 역동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내가 ‘교육의 사회학’에서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밥 굶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어느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온힘을 다한다. 그런데 이 가혹한 경쟁구조를 고쳐서 그러한 치열한 교육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려 하지 않고, 그 구조를 전제하고 어떻게든 부모의 부를 통해서 자식에게 안정적 삶을 물려주려 할 때 구조적 왜곡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2. 교육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차등’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

산업화의 성공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부의 분화 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희망의 통로’가 되는 방식으로 불평등이 공공적으로 제어되고 교육에 미치는 왜곡화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사회경제적 부에 의한 학부모의 서열화가 자녀들의 교육서열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사실 나는 교육감으로서 두 가지 미션을 중시한다. 첫째는 추격산업화 시대의 ‘낡은’ 교육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책에서도 교육불평등 완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관철하여 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일정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교육불평등 완화는 사실 진보교육감들이나 나의 지향만은 아니다. 교육부에서도 교육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 국가적 수준에서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교과서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부대 교육경비가 문제로 된다.

예컨대 저소득층 학생들(1998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중심으로 하여-지원범주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전국공통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급여와 교육감들이 재량으로 지급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이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부교재비(초 1-중3까지 39,200원), 학용품비(중 1-고 3까지 53,300원), 교과서대(고 1-3에 대해 131,300원), 입학금/수업료(고 1-3) 전액을 지원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학비(고 1-3), 급식비(고 1-3),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초 1-고 3까지 연 60만원 이내), 교육정보화 비용(인터넷 통신비. 초 1-고 3까지 월 17,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타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해서도, 서울교육청의 경우 생계·주거·의료 급여 수급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타 수익자 부담경비 중에서 2가지(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기회균등전형이나 사회다



양성 전형으로 선발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5가지(수학여행, 수련활동, 교복, 앨범,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다¹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교육청에서는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의로운 차등’이라고 명명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거나 개발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안) 증감

세세부별		2016년 예산현액	2017년(안)	증감	비고
교육비	학비	36,275,654	34,704,251	△1,571,403	학생 수 감소 반영
	급식비	35,611,042	32,371,158	△3,239,884	평균 급식일수 (1일) 감소 반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5,443,990	27,449,010	2,005,020	대상범위 확대 (중위소득 50% → 60%) 반영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5,645,348	5,624,890	△20,458	학생 수 감소
	기타수익자 부담경비	9,178,162	10,918,493	1,740,331	평균수학여행소요 액 100%반영, 교복비 지원 일반학 교로 확대(중1, 고1) 25억 미반영
교육급여		53,379,519	57,463,039	4,083,520	명시이월 3,340,730 포함
합계		165,533,715	168,530,841	2,997,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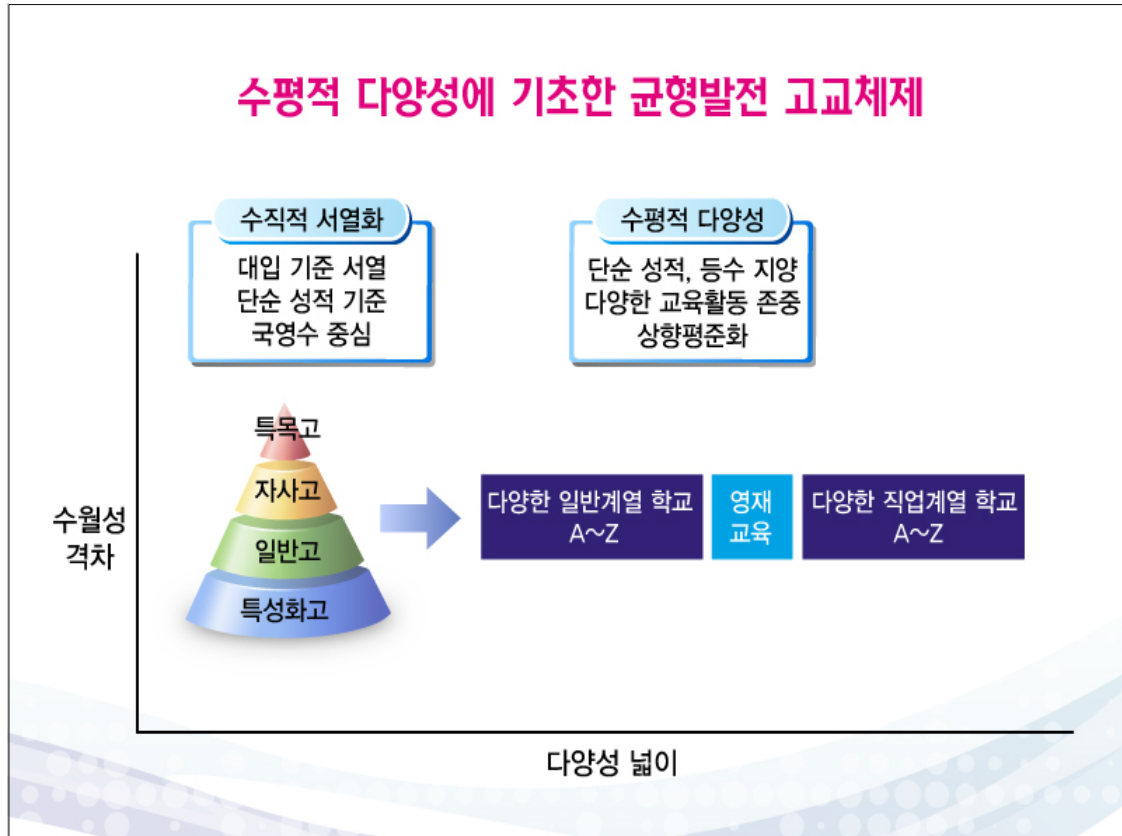
□ 고교체제의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먼저 고교 서열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들 수 있다. 대학서열의 전단계로서 고등학교가 ‘수직적 서열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수직적으로 서열화 된 특목고-자사고-일반고의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자사고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는 ‘수평적 다양성’의 고교체제를 지향하는 문제의식 위에 서 있다.

이 정책은 한편에서는 자사고를 폐지하거나 축소는 정책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서열화의 하위로 밀려나고 있는 일반고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14) 지원내용은 수학여행의 경우 초 14.5만원, 중 16.5만, 고 24.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련활동비는 초 8.3만, 중 8.6만, 고 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비는 중고 모두 30만원, 앨범지는 중고 4.5만, 기숙사비는 조식식비는 전액이되 순수 기숙사비는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5년 평가 작업을 통해 취소작업을 행하였다. 나는 자사고 취소 및 축소정책을 1974년의 고교평준화에 대응하는 ‘제2의 고교평준화’ 정책이라고 불렀다.



[그림 1] 고교 체제의 수평적 다양화 방향¹⁵⁾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를 고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과 2011년에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교 유형이다.

자사고는 총 49개에 이른다. 그 중 25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고교 서열화의 폐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2010년에 지정된 14개의 자사고가 2014년에 5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 평가를 받고, 2011년에 지정된 11개의 자사고가 2015년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다.

15)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화 개념도는 과거 그러한 서열체계가 공고하던 시점에서 조금 벗어나 지금은 일정한 균열이 발생한 상태이다. 즉, 특목고의 대표적인 외고가 예전만 못하다거나, 상대적으로 일부 자사고가 대입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거나, 실업계고로 분류되던 특성화고의 일부는 일반고보다 더 인기가 좋다거나, 일반고 내에서의 격차도 심하다거나 등등, 지금의 양상은 그리 단선적이지는 않지만, 고교서열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하여 강조했다. 잘 알겠지만, 이와 같이 민감한 도식화의 목적은 고교서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해소이다.



1차 자사고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지정취소는 다음과 같다.

지정 취소 학교(6교) :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지정 취소 유예 학교(2교) : 숭문고, 신일고

그런데 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6개 자사고에 대해 11월 18일 교육부에서 곧 지정취소를 다시 취소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교육청에서는 이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도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음으로 2015년에 5년마다의 운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자사고는 11개였다. 2015년의 자사고 평가에서는 2014년 평가에서 평가지표를 교육청에 수정했다고 하는 자사고와 일부 언론의 비판을 고려하여 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기 위해, 교육부의 평가지표를 기본으로 하고, 교육부의 평가지표에서도 허용하는 교육청의 자율지표에 ‘자사고의 공교육 영향’ 등의 지표를 일부 추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2015년 7월 20일, 2015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정 취소 대상 학교 4개교에 대하여 청문 절차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쳐 미림여고 1개교는 ‘지정취소’,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3개교는 ‘2년 후 재평가’로 최종 확정했다.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엄호’ 정책과의 긴장 속에서 자사고 평가 정책은 위와 같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미림여고와 우신고가 자사고로 전환되었다.

고교체제의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반고에 대한 집중지원을 펴는 것을 들 수 있다.

2014년 당시, 아래와 같이 전체고교 318교 중 자율고(44교), 특목고(19교), 특성화고(70교)를 제외한 일반고는 184개교(58.0%)¹⁶⁾이다.

총계	일반고		소계	자율고		소계	특수목적고						소계	특성화고		소계
	일반1	일반2 (종합고)		사립	공립		과학 고	외국 어고	국제 고	예술 고	체육 고	마이 스터		직업	대안	
318	183	1	184	25	19	44	3	6	1	6	1	3	20	70	·	70

16) 김진숙 외 (2014).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질적 개선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9.

그런데 학업우수자가 특목고, 자사고, 일부 특성화고로 몰리면서 일반고에 중·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아래와 같이 일반고 사이에서도 후기일반고 배정 방식의 영향으로 입학생의 성적 차이가 확대되어져 왔다.

* 서울지역 학교유형별 최상위권(중학교 내신 석차 10% 이내) 학생 분포 비율¹⁷⁾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자사고 평균	22.5%	24.5%	25.2%	25.6%	22.5%
일반고 평균	9.2%	8.4%	8.6%	8.5%	8.7%

* 서울지역 일반고 학생성적 분포비율¹⁸⁾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A고	최상위권 학생	18.5%	24.8%	22.3%	24.5%	23.5%
	최하위권 학생	1.1%	2.7%	1.4%	1.1%	0.6%
B고	최상위권 학생	3.9%	3.1%	6.1%	6.4%	2.6%
	최하위권 학생	18.4%	20.8%	20.3%	31.3%	26.7%

(최상위권 학생: 중학교 내신석차 10%이내, 최하위권 학생: 중학교 내신석차 90% 이하)

그 결과 일부 지역의 일반고는 수업과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반고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낮은 대학 진학률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고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학업 의욕, 희망 진로가 다양한 교실에서 일반고 교사들의 수업 좌절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른바 ‘일반고 황폐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황폐화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것이 일반고를 과잉 저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고 대안마련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2014년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왔다. 먼저 일반고와 실업고가 존재하던 과거의 고교체제와 달리, 현재는 특성화고가 ‘상위’ 직업교육학교로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일반고에는 i)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ii) 특성화고에 입학하지 못하였거나 차후에 직업교육을 희망하게 된 진로직업 희망학생, iii) 부적응 학생을 포함하여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크게 범주화해볼 수 있다. 일반고가 향후 이러한 3가지 교육방향에서 무엇을

17) 같은 보고서. p.10.

18) 같은 보고서. p.10.



중점에 둔 학교로 갈 것인가, 혹은 현재와 같이 복합적 성격을 갖는 학교로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교육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태를 전제로 하면서, 이 3가지 모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을 펴고 있다.

□ 일반고를 고교 공교육의 중심에 위치시키기 위한 노력

2014년 9월 4일 발표한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는 ① 일반고 교육정상화 기반 구축, ②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방법 혁신, ③ 진로진학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④ 책임교육 지원 강화, ⑤ 교육 불평등 완화, ⑥ 일반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등이다¹⁹⁾.

다음으로 세칭 일류고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을 50%로 확대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 평등예산제

다음으로 평등예산제를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학생 수, 학급 수 등에 기반하여 개별학교에 대해 학교 운영비가 교부된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1인을 3인으로 간주하여 학교 운영비의 지급에서 차등을 하는 것이다.

19) 보다 자세하게 위의 정책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 교육정상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확대하고, 학급 당·수업 당 학생 수를 감축하며, 고입 배정 방법 및 전편입학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당 평균 5천만 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를 학교의 규모와 여건에 따른 사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그 기준을 1 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반고에서 외고나 자사고에 못지않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교원수급,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과에 따라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집중이 어려운 수업에는 다양하게 분반할 수 있도록 수업당 학생 수 감축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일반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열악한 일반고에 30~40대 교사, 학교 경영 역량이 뛰어난 교장을 우선 배치하는 등 교원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고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일반고 학생들도 자사고나 특목고, 특성화고 학생들처럼 각자의 학업능력과 희망진로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형·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실질적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며, 수업 방법을 혁신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수준과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을 돕고, 소질에 맞는 직업 교육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다양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학교의 대입 진로진학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진학보다는 졸업 후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내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정보학교 등 직업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현 산업정보학교나 서초문화예술 정보학교 등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학교의 수용 인원수를 최대한 늘리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소규모학교에 대한 차등 지원

다음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차등적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학생 수의 급감에 따라 중학생 240명, 고등학생 3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 정부는 통폐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가 죽게 되면 한 마을공동체 전체가 죽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분교와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형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차등적 지원정책을 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8개의 소규모 학교를 선발하여, 특성화된 학교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급식비의 차등 지원

다음으로 소규모 학교의 경우 급식비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사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급식비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여유가 있는데,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식자재의 구입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전지에서 규모에 따라 작은 학교에 대해 일정하게 급식비를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직면한 한국사회의 도전

사실 이상의 한국사회의 인종적·문화적·역사적 동질성을 전제로 한 교육불평등의 완화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의 유입, 한국의 농촌 총각들의 아시아 여성과의 광범위한 국제결혼, 한국에 정주하는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 중국 교포들의 대대적인 이주 및 한국 취업 증대, 탈북민의 증대 등의 여러 요인은 복합적으로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영역에서도 다문화 2세 학생들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 즉 국경을 넘는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세계화의 진전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교육영역에서의 정책적 응전은 처음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화 교육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90년대 중반 UR 및 WTO의 출범에 즈음하여 한국사회는 세계화를 위기로 인식했고 기존의 교육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였다.

90년대 말 ‘민주정부’라고 규정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도 부터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다문화 교육이 부각되었다. 이는 한



편에서는 한국과 같이 인종순혈주의적 인식이 강한 나라에서 외국인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와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적·인종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다문화 학생’들로 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국의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서울교육청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정책	구체적 운영방식
다문화언어강사 배치 및 운영	총 80교에 85명 배치. 결혼이주배경 다문화 언어강사를 희망학교에 배치(강사 : 서울교대 연수과정 900시간 이수자)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2016년 12개교.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정규학교 배치 전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으로 초기 적응력 강화(한국어 및 문화교육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등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상담교사를 통한 부모 및 또래관계, 한국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한 조기적응 지원)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	3개 학교. 한국어 교육과정(KSL)의 내실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중점학교(글로벌문화학교) 운영	18개교. 일반학생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어울림, 상생의 실질적 통합기반 조성(다문화학생 다수 재학 학교 18개교 중점학교로 지정·운영, 중점학교 중 서울특별시 지원 외국 공관 연계 특별 프로그램 운영학교로서 ‘글로벌 문화학교’ 10교 지정)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11개 교육지원청별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	다문화교육 선도역량을 갖춘 유·초·중·고 교원 20명(유 1명, 초 11명, 중 4명, 고 4명) 공모 선정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운영 지원	교육청이 멘티(배움지기) 학생 선발, 대학이 멘토(나눔지기) 학생 선발 후 결연 추진. 대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결연시켜 돌보도록 프로그램. 2016년에 10개 대학을 나눔지기 대학으로 선정. 2016 배움지기 학생 모집(초·중·고등학교 다문화·탈북학생 중 희망자 656명). 2015 관내 희망자 792명 중 190교 388명 매칭 완료
다문화교육 교원연수 운영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및 지도 역량 강화를 통한 다문화 선도교원 양성 및 네트워킹
다문화 유치원 사업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으며 다문화교육 의지 높은 유치원 6개교 선정 지원
유네스코학교 활동 지원	학생과 교원의 자율적 참여로 유네스코 이념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여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타 회원국 유네스코학교와 교류(상호 방문, 자매결연 등)를 통해 지속가능한 우호적 협력 기반 조성. 서울 42교(초 10교, 중 15, 고 17), 국내 408교, 세계 187국 10,000여교

정책	구체적 운영방식
글로벌 브릿지 사업 운영	수학, 과학, 리더십 분야에 잠재 능력을 가진 다문화학생 선발 교육. 교육부에서 협력기관(서울교육대학교)을 지정하고 사업 운영비 교부. 4~6학년 및 중 1~2학년 다문화학생 및 일반학생(전체 선발인원의 20% 이내) 50명 선발. 주말(토)교육, 집중교육(캠프), 사이버(원격)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추수 지도
다문화학생 「친구끼리」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중·고 다문화학생에게 체계적인 직업교육 기회 제공.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학교(기관)를 공모하여 3개 학교 선정. 교육청은 수강료, 실습비 등 예산지원, 교육과정은 방과후학교, 토요(방학)학교 형태로 운영
선생님, 친구와 함께하는 다문화체험 캠프 운영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2박3일 체험캠프 운영. 모듬활동 및 소그룹 토론 등을 통한 상호 문화적 가치 이해 및 바람직한 교우관계 형성 도모
다문화학생 중심의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한국어 및 부모 모국어) 의사소통 능력 계발 및 언어 재능 조기 발굴. 17개 시도교육청 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운영(예선)
다문화학생 모국체험학습 지원	다문화학생의 모국(母國) 체험학습을 통한 정체성 확립 및 언어능력 계발 등 건강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수상자를 체험단에 포함하는 등 다문화학생 모어 사용능력 계발 동기 부여. 서울 다문화학생 출신 배경을 고려하여 중국 및 베트남 2개 국가를 체험학습 방문국으로 운영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교육불평등은 기존의 한국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더 크게는 ‘한국’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다문화학생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사회의 폐쇄성과 배제성을 넘어서서 어떻게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에 그 성공이 달려있다고 하겠다.

현재 서울교육청에서는 기존의 다문화교육을 세계시민교육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이 한편에서는 다문화·다인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긍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동화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다문화·다인종 학생으로 하여금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배우도록 하여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한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상정하는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교육의 동화주의적 경향을 뛰어넘고자 한다. 한국의 학생들은 지금도 국가, 인종, 민족, 문화, 종교 등의 여러 측면에서 거대한 차이를 갖는 이방인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방인을 이방인이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의 친구로, 지구촌 공동체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마주하는 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환대, 우의, 우정(friendship), 공존, 상생, 포용, 평등, 배려, 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것을 태도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국 중심적인 다문화 정책과 교육을 넘어서서, 다문화를 다름과 차이로 보되, 주류-비주류, 정상-비정상, 우(優)-열(劣)이라고 하는 차별적 인식틀로 보지 않고, ‘동등한 다름’, ‘상호존중적 차이’로 이해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기존의 다문화교육의 포용적 측면을 계승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세계시민교육으로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문화 교육정책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구체적 운영방식
서울형 이중언어교실 운영	총 15개교(초 13, 중 2), 이중언어 교실 강사 17명(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몽골어) 배치. 이중언어교실 강사의 수업활동(지원)으로 모어(母語) 사용 다문화학생 수업 참여 제고 및 다문화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의 이중언어 습득 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실현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운영,	총 14교(초 6, 중 4, 고 4). 학교급별 세계시민교육 내실화 방안 및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교육 학습동아리 지원	총 80팀(학생 50팀, 교원 30팀). 교사와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세계시민교육 공감대 확산. 주제는 지속가능발전, 인권, 다문화, 국제이해, 평화, 봉사 등.
세계시민교육 인정교과서 개발	학교급별 세계시민 인정 교과서 활용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인천, 강원, 경기교육청과 공동 개발 중. 교과서 및 지도서 각 3종(초, 중, 고). 2016년 2월에는 학습보조자료로 「교실에서 만나는 세계시민교육」 개발 보급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 운영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 내용 편성. 자격연수(교장, 교감, 1급정교사, 부전공) 대상자 교장, 교감, 1급정교사, 부전공 대상자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과 MOU 체결(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단(54명) 운영. 특별지원학교 담당교사(14명), 동아리 대표교사(80명), 유네스코학교 담당교사(68명), 선도교사(54명) 등 네트워크.
문화소통 세계시민양성 모델학교(연구학교) 운영	2개 학교 운영. 서울 서남권 다문화학생 밀집 초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학교 모델 방안 적용

☐ 협력적 인성과 공동체적 인성

다음으로 정의로운 차등과 직접적 연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서울교육청의 인성교육의 방향으로서의 협력적 인성정책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교육은 서열화된 직업세계와 학교를 전제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차별적 보상을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교육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추격산업화 단계에서 이러한 경쟁은 학생들로 하여금 일등인재가 되어 수출을 잘하는 일등기업의 일등인재

가 되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앞서 언급한 교육입국에 기여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 간의 무한대의 경쟁을 촉발하였고 개인적인 성공, 개인의 더 높은 보상과 이익을 향한 이기적 본능을 과잉 확대하였다. 이것은 90년대 이후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확산 속에서 더욱 촉진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가 협력적 인성과 공동체적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쟁 속에서 자기만이 최고의 승자가 되고 그 결과 최고의 이익과 부를 향유하고자 하는 인성이 아니라, 협력하고 협동하는 능력을 갖는 존재가 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공동체적 헌신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칼 폴라니(K. Polanyi)가 시장의 지배가 확장되면 ‘악마의 맷돌’이 작동하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사회의 자기보호’를 향한 힘이 작동하도록 한다고 말할 때, ‘사회의 자기보호’의 지향은 바로 이러한 협력적 인성과 공동체적 인성이 확산될 때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화의 시대에는 개인의 무한대의 이익추구가 하나의 ‘시대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민주화의 시대에는 권위주의 하에서 억압된 개인의 이익과 권리에 저항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또다른 ‘시대정신’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새로운 미덕이 필요하다. 개인의 무한대의 이익추구가 교육영역에서는 큰 교육불평등을 낳았고, 억압된 개인의 이익과 권리투쟁이 사회적 약자들의 몫을 확대하고 보호하는 효과를 낳았지만, 결국은 ‘자기 몫의 확장’이라는 하는 개인주의적 지향을 넘어서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제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나를 넘는 우리의 차원, 개인을 넘는 공동체의 차원을 고려하는 사회적 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미래지향적인 ‘정의로운 차등’에 대한 고민들

다음으로 이러한 차등 정책 외에도 다양한 정책 내부에서 ‘정의로운 차등’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이를 관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먼저, 교육불평등을 드러내주는 여러 교육불평등 지표를 원용하여, 교육예산 및 교육복지 예산의 전반적인 배분에서 차등을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몇 가지 예를 든 것이고, 더욱 다양한 방안으로 ‘정의로운 차등’을 통해서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학교에서는 어려운 지역의 비(非)선호학교들이 존재한다. 나는



‘어려운 지역의 학교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차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학교의 기본시설 중의 하나인 체육관이나 급식실의 건립에서 어려운 지역이나 비선호학교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하면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여 체육관이나 급식실 건립의 우선순위가 부여되게 된다. 그러나 노후도만이 아니라 ‘교육불평등 지수’가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청의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서울특별시와의 협력 사업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것은 대체로 공모를 통해서 부여되게 되는데, 어려운 지역의 학교나 비선호학교에 대해 차등적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게 된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대로, 어려운 학생들을 3배로 계상하여 약간의 운영비 지원을 추가하는 ‘평등예산제’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지역의 학교나 비선호학교에 일괄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자율예산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현재 학급당 학생 수 배정에서 일부 인기학군이나 선호학교의 경우 학생이 몰려서 타학군 또는 여타의 학급당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조건을 활용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교육불평등의 여건을 감안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의 차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로부터 더욱 많은 배려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학급당 학생 수의 설정에 있어, 불평등의 정도를 감안하여,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이 더욱 혜택을 보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담교사, 협력교사, 간호사 등 지원인력의 배분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서울 ‘교육불평등 지도’와 ‘정의로운 차등 정책 지도’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V

맺으면서

-수직서열화의 사회에서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로, 수직서열화의 교육에서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서양을 따라잡는 추격산업화에 매진해 왔고 그것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추격산업화의 성공은 한국사회가 경제적 후진국에서 경제적 (준)선진국으로,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절대적 풍요의 사회로, 전근대적 경제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로, 그것도 독점적인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더욱더 ‘수직서열화의 사회’로 변모되어 왔다. 경제적 부의 증대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분화로, 거대한 독점재벌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의 분화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분화로, 거대자산가와 빈곤층의 분화로 이어졌다. 직업, 소득, 자산, 매출, 지역, 계급·계층, 고용 등 모든 측면에서 수직서열화된 사회로 변모되어 왔다. 그것은 점차 고착화의 경향과 세대 간 재생산, 세대를 뛰어넘는 대물림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추격산업화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 운영원리를 ‘수직서열화’의 원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수직서열화의 사회원리는 점차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도 관철되고 확대되어져 가고 있으며, 수직서열화 된 교육으로까지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직서열화는 일차적으로 대학체제의 서열화로 관철되었고, 그것은 이제 고교체제의 수직서열화로 반영되어져 가고 있다. 교육영역에서의 이러한 수직서열화는 이제는 초·중등, 심지어 유아 영역까지 급속히 하향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원리를 나는 ‘수평적 다양성’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회구성원 개인들, 사회조직들, 사회단체들, 학교들, 직업들의 관계가 수직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성의 관계로 만드느냐 하는 과제가 우리 사회에 절박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평적 다양화란,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성단위들(개인, 집단, 조직, 지역, 계급·계층 등)이 하나의 기준으로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다양화되고 다양한 기준에서 하나의 구성단위가 일관되게 독점적 상위를 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는 ‘하나의 척도’ 혹은 ‘하나의 기준’에 의해 일렬 종대로 평가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척도’ 혹은 ‘다양한 기준’이 작용하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통상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해왔다고 말해진다. 그 표현에 준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산업화 ‘이후’, 민주화 ‘이후’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갈등과 각축, 고투(苦鬪)의 도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한때는 ‘선진화’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사회로의 이행’이나 ‘복지국가화’를 이야기한다. 나는 사회원리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지금 ‘수직서열화’를 운영원리로 하는 사회에서 ‘수평적 다양성’을 원리로 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러한 과제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하지만, ‘교육입국’에 성공한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영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수직적 서열화’의 사회를 개혁하는 핵심에 ‘수평적 다양화’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제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직적 서열화의 교육을 개혁하는 것은 수직적 서열화의 사회를 극복해가는 운동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와 교육 간에는 상호작용적 관계가 존재한다. 분명 수직서열화의 학교체제, 그리고 불평등한 교육은 수직서열화 된 사회의 반영이고 결과물이지만, 반대로 그러한 학교체제와 교육을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수직서열화의 사회를 혁신하는 또 다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직적 서열화의 사회 개혁이 완결될 때까지 교육개혁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부에서부터 수직적 서열화의 교육을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상호작용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미래교육 글로벌 트렌드 분석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전략특임팀 팀장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 발달에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격돌과 포켓몬고 등으로 관심이 쏠린 4차 산업혁명이 사회와 역사를 바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결국 사회를 이끌고, 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과는 별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2015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름 교육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방향보다 현실에 기반을 두되, 미래사회와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조망과 해안 속에서 실천적 방안을 찾아보고 적용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적용코자 하는 학습 방식이 학습 역량 발달 관점에서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성찰은 내가 해왔던 경험이나 방식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론 탐색과 트렌드 분석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의 학습 방식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큰 차원에서 교육의 흐름과 방향을 트렌드 분석을 통해 살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의 흐름을 잡기 전에 ‘왜 교육이 혁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보면, 이는 결국 사회 발달과 학교의 역할 변화 속에서 찾아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어떠한 학습 방식이 글로벌하게 보편화되고 확산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 4차 산업혁명과 학교의 역할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사회 변화속에서 교육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질문이 ‘학교가 사라질 것인가?’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학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위 전통적 형태의 학교, 주어진 시간에 등교해서, 1교시, 2교시 등 정해진 교과를 물리적 교실 환경에서 학습하는 형태의 학교 모습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35년, 2025년 등 향후 15년에서 20년 사이의 학교 체제의 변화를 예



측하는 관련 보고서 등(JRC, 2015, 이찬승, 2016))에서는 몇 가지 의미있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통적 학교의 규모 축소 이외에도 학교의 제도적 유지 기반인 학력 인증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예측이다. 즉, 학생들은 온라인학교를 포함한 비전통적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공교육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자격증이 나타나면서, 고교와 2년제 대학의 경계가 흐려짐은 물론 4년제보다 교육성도가 좋은 2년제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등은 학교의 역할 변화를 가져 올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도 학습 공간의 공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체험 중심의 학습이 확대되며, 교육 시스템은 상호 연결되고 학문간 융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결국 학교는 정해진 학제와 학력 인증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관, 평생학습 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변화는 결국 교육 수요자와 사회적 수요에 현재의 학교체제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면서, 더 이상의 변화 외면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출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칸아카데미의 설립자로 유명한 살만 칸은 칸랩스쿨(Khan Lab School)¹⁾이라는 오프라인 학교를 2014년도에 설립하면서, 초등과 중등 정도의 구분만 있는 무학년제를 표방하고, 전적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춘 프로젝트학습과 시험 평가가 없는 학교 운영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알트 스쿨(Alt School)²⁾은 구글 직원이었던 맥스 벤틸라가 2013년도에 설립한 학교로 1,500억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로 세운 학교로 유명하다. 이 학교 역시 학생들의 흥미와 특성에 따라 반이 편성되고, 학생들의 활동은 철저히 기록, 관리되면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춤형 수업이 제공된다. 고등교육기관의 사례로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³⁾은 2011년에 설립되었지만, 올해 하버드대학의 입학 경쟁률보다 높은 경쟁률로 관심을 받았다. 이 학교는 교수와 20명 이내의 학생이 100%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지식을 쌓고, 학생들은 6개국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100% 공동체 경험을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학교를 현재의 법, 제도 측면에서 학교라는 범위에 두고 고려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와 같이 대입제도가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 학교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겠는가? 라든가, 이러한 학교의 출현이 공교육에 대한

1) <http://khanlabschool.org>

2) <https://www.altschool.com>

3) <http://www.minerva.kgi.edu>

도전, 학교의 붕괴로 비춰지는지에 대한 논의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산업체에서 한 해 한 명당 5천만 원의 재교육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학교체제에 대한 변화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다행히 현재 출현한 학교의 운영 방식을 분석해 보면, 향후 학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칸랩 스쿨은 왜 온라인 기반의 칸 아카데미를 통해 교과 학습 지식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음에도 오프라인 학교를 설립했을까? 미네르바 스쿨은 왜 물리적 공간인 강의실에 교수와 학생은 함께 있지 않아도 되지만, 기숙사 생활은 학생들이 함께 하도록 학교를 운영할까? 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학교가 그 동안 수행해 온 지식습득과 학습공동체의 경험 제공에서 이제 지식습득은 다른 대안적 형태로 대체, 혹은 혼합될 수 있지만,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학교 내의 규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공동체 경험은 학교 체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앞선 사례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더 이상 나이와 결부시킨 정해진 학년, 내가 아닌 학교가 선택한 정해진 교과가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 개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체제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영에는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필수 리터러시로서 IT 기술을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서, 전체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즉 학생들의 학습 활동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학습공동체의 경험을 제공해 주고,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가 고려된 선택적 교육과정이 확대되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효율성을 꾀하는 학교가 유지되어야 할 학교의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II 학습의 변화 방향

전체적인 학교 운영과 역할 변화를 찾는 노력에서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운영, 향후 교실에서 이루어질 학습의 형태를 논의하기 위한 트렌드 분석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될 계획이며, 학교 수업의 변화, 학습의 변화 트렌드는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습 트렌드 분석 레포트가 매년 50명 이상의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된



NMC Horizon Report⁴⁾와 영국의 Open University에서 발표한 Innovating Pedagogy Report⁵⁾ 등이다. 이러한 레포트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학습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김진숙, 2016).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 경험 융합(Blended Learning), 교과 간, 학문 간 융합(STEAM Learning),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의 융합(Crossover Learning), 과학적 논쟁과 맥락 기반 학습(Context-based Learning) 등이 향후 3년 이내 보편화될 학습이라는 예측과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학습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암기하기를 권했던 개념과 원리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로 존재토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실생활에서의 적용 사례를 스스로 찾아보고, 토의와 논쟁을 통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미 교과 간 융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 학습은 1, 2년 내에 확산될 학습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10년 후에 내가 살 집을 디자인해보는 과제가 도화지에 그려내는 미술 시간의 활동이 아니라, 공학적 원리를 고려한 설계서에 기반해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실제와 가까운 집을 만들어 보고, 교사는 이 집에서 살게 될 가족들의 삶이 어떨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도록 하는 교과 간 활동이 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와 교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 전제이다.

둘째, 시공간을 넘나드는 협력 활동과 학습자의 역할을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메이커(Maker) 또는 창작자(Creator)로 전환시키는 학습 활동,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 학습, 과제 기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습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 2015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협력의 범위가 온라인을 통해 한 교실의 교사와 학생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는 경험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SW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전 교과에서 IT 기술이 융합되어 학생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형태(SW, 마인드맵,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로 표출되도록 해야 한다.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은 교과 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연결되도록 깊이 있게 설계(이를 Horizon Report에서는 디퍼러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 활동을 기획하고 설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 간에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의 학습

4) <http://www.nmc.org/nmc-horizon>

5) <http://www.open.ac.uk/blogs/innovating>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사 연수에 있어서도 기술 융합을 위한 기본 역량과 학습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연수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 활동은 기술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되고, 분석되어, 학습 개선 정보로서 교사와 학생에게 제시되고, 이러한 학습 분석(Learning Analytics) 기술이 전반적인 평가 체계를 바꿀 수단이 됨을 예측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분석 정보가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을 가능케 하고,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가 없어도 학습 성과가 진단되는 스텔스 평가(Stealth assessment)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모든 학습 활동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분석되고, 결과가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시간을 요한다고 해도, 이미 우리 교육에서도 권고되고 있는 수행 평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결과 판단이 교사의 관찰이나 직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온라인에서의 학습 활동 분석 정보가 교사의 관찰이나 기록 정보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시도는 이미 있어 보인다. 이러한 학습 방향은 학교나 교사의 노력에 앞서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과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글로벌한 트렌드 속에서 지향하는 학습 방향은 한 가지이다. 한 사람의 천재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재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즐거움과 유용성을 깨닫게 하는 것은 기본이다.

III 학습트렌드의 몇 가지 핵심 개념

학습 변화를 이야기하는 경향 속에서 몇 가지 수업 방식에 대한 핵심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방식은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실제 수업 설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개념들이다.

1. 혼합학습(Blended Learning)

혼합학습은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전달과 교실에서의 학습 지도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혼합학습 모델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시간, 속도, 학습 경로 등에 대한 학습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교실에서의 활동과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결합하는 것이다.



혼합학습은 이미 글로벌하게 1~2년 내에 보편화될 학습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혼합학습을 수용한 미국의 학교들은 온라인 학습 환경이 보완적 학습 기능으로 작동하여, 교실에서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오히려 높여주고, 수업 시간에 대한 제약을 덜 받게 해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 의해 밝혀진 효과로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대한 책임 의식과 주인 의식이 강화되고, 학습에 문제가 있는 소그룹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밝히고 있다(NMC, 2015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플립드러닝도 혼합학습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

협력학습에 대한 관심은 지난 몇 년 간 급속하게 증가되어 왔으며, 향후 3년 이내 자리잡을 학습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학교 경영이나 운영에 성공적인 학교 사례를 분석해 보면,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협력학습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학습은 학습자 개개인이 본인이 만든 결과물에 소유권을 가짐과 동시에 또한 그룹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 학습 경험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MC, 2015 재인용).

또한 협력 활동 과정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도구들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협력 스킬을 고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도구로서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협력 문서 도구, 협력적 마인드 매핑 소프트웨어, 온라인채팅 도구 등이다. 협력학습 활동은 국제적인 교류를 기반으로 한 학습 경험을 확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협력학습을 적용하기 위해 목표와 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룹들을 작은 규모로 유지하며, 학습자들을 가까이에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와 같은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3. 디퍼러닝(deeper learning)

디퍼러닝⁶⁾은 표준화된 시험의 목표들과 의사소통, 협력, 그리고 자기주도학습과 같은 학습역량을 조합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시험 성적이 아닌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관리해 나가는 학습 모

6) deep learning: 기계학습의 일종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메커니즘. 기계분야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주제임.

deeper learning: 학문중심학습 결과를 실생활 문제해결에 적용해 봄으로써 핵심내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 기반 학습, 탐구 기반 학습 등)을 통칭함.

텔이다. 학습 방식으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 기반 학습, 탐구 기반 학습 등과 일맥상통하나, 학습목표가 학습역량으로 이어지는 평가와 학습 과정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디퍼러닝으로 불리워진다. 또한 디퍼러닝은 프로젝트의 결과가 실제 지역적 문제들과 글로벌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활동까지 확장되도록 학습이 촉진된다.

디퍼러닝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적 접근법들은 전 세계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전통적 패러다임을 개혁하고 있다. Fontan Relational Education(FRE)은 학생들을 자율적인 학습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전 세계 공립, 사립 학교들이 활용하고 있는 교육학 모델이다. 학생들은 FRE를 통해서 그들의 지식, 관심사, 능력에 대해 평가를 받고, 개개인의 학습 계획이 주어지며, 그들이 학습한 모든 것들을 일상 생활에 관련지을 수 있게 된 이후에야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옮겨 간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평가, 학습 계획, 작업, 그리고 다른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Quino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활용 플랫폼을 이용한다. 플로리다 주 Foundation Academy의 중학교 과정 학생들은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질문들에 답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직접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학생 프로젝트는 건강한 먹거리, 치명적 질병, 그리고 물 부족과 같은 더 거대한 사회적 문제들에 주목하는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혹은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게 하는 목표는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또한 그들이 비록 학생이지만 세계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4. 크로스오버 학습(crossover learning)

크로스오버 학습은 형식과 비형식 교육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참여 활동을 의미 있게 연결시켜주는 학습 방식이다. 학습은 평생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그들의 다양한 학습 결과를 기록하고, 연결하며, 재생시키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크로스오버 학습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교사는 박물관이나 현장 체험을 통해 얻은 학습 경험에 대해 수업 중에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고, 학습자에게는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현장학습을 통해, 증거로 사진을 수집하거나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개별 또는 그룹 차원의 해답을 찾기 위해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크로스오버 학습 경험은 두



가지 환경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고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진정한 기회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Open University, 2015).

5. 논쟁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argumentation)

학생들은 전문 과학자나 수학자와 유사한 방식의 논쟁을 통해 과학과 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논쟁은 학생들이 반대되는 아이디어를 접하도록 하여 학습 이해를 높이고, 기술적 추론과정을 공개적인 것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유효하다. 또한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교류하고, 과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립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배워나가게 된다.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하고, 보다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을 구조화하기 위해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실에서 의미 있는 토론이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논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차례를 정하는 방법과 능동적으로 듣고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6. 분석 기반 학습 설계

학습 설계는 교육자들이 미디어와 기술, 교육철학을 논리적인 순서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나 일련의 과정을 개발할 때 사용된다. 학습 설계 도구 및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교과 내용, 콘텐츠에 쏟아지던 관심이 학습자의 행동 및 학습 과정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학습 설계는 의도된 학습 결과를 특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규명하며 평가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학습 활동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는 미디어의 선택과 활동 순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학습 설계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학습 데이터 분석이 학습 설계를 평가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 그 과정이 완료되며, 성공적인 교수학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 및 분석 작업도 끝이 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습 트렌드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하나하나의 개념이 결국 하나의 교수 설계에서는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학습 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무엇을 채택할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다만, 이미 이론적으로는 익숙하다고 해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교사가 필수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지 않은 채 온전히 학습자에게 확인하도록 맡

길 수 있는가, 학습자들이 다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찾아갈 활용과 적용 활동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는가, 토론이나 논쟁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몇 번의 프로젝트 적용으로 발전될 수 있는가 등등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게 될 것이다.

IV 학습 혁신을 촉진할 정보기술 적용

혼합학습, 깊이 있는 프로젝트학습(디퍼러닝), 논쟁을 통한 맥락적 학습, 분석에 기반한 학습 설계 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전제가 된다. 온오프를 넘나드는 다양한 정보의 탐색을 기본으로 생성된 정보를 표출하고, 좀 더 확대된 정보 교류를 통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게 될 때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폭과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보기술의 다양한 개념속에서 학교 단위에서 추진해 볼만한 기술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를 학교나 학습자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는 국가나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1. BYOD(Bring Your Own Device)

BYOD란 학습자들이 랩탑,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직접 학습 환경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BYOD를 통해 학습자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디바이스에 적응하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편하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장점은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들을 소유하고, 학습을 위해 여러 다른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동성이 강화되는 글로벌 트렌드와 더불어 전세계 학교들이 BYOD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BYOD 정책을 수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샌디에이고의 Poway Unified School System은 학생 중심의, 그리고 BYOD를 활용한 접근법에 토대를 둔 완전히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다. Design39Campus라고 불리는 이 학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개인화된 학습을 강조한다. 교사들은 “학습 체험 디자이너”로 불리며 글쓰기를 가르치는 수업에 블로그를 활용하고, 학생들은 과제를 하면서 자신들의 모바일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교수자에서 촉진자로 변화시키고 있다(KERIS, 2016).



2.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간적·공간적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강조되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 환경은 점차 이동성, 유연성, 다양한 디바이스 사용 등이 고려된 상호작용 환경으로 설계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는 “메이커 협동학습 공간(maker co-learning spaces)”으로 반영되고 있다. 메이커 협동학습 공간이란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등이 뒤섞인 트렌드들을 기반으로 한 공간이다(KERIS 교육정보 화글로별동향, 2016). 이 경우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실이 재설계된다. 하나의 형태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강단의 위치가 교실 전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상호작용 매체가 활용되어 기존 교실과는 전적으로 다른 형태로 설계된다.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는 기술로는 학습자 간 협력, 학습자-교수자 및 학습자-매체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협력 학습을 지원하는 매체인 인터랙티브 테이블,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등이 있다.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란 디지털 교육용 디스플레이로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쉽게 디스플레이에 출력하거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시 교사나 학생이 그림이나 글씨를 쓰는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테이블의 경우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와 크게 다른 테크놀로지는 아니나, 1명의 터치만 허용했던 기존의 스마트패드와는 달리 멀티터치가 가능한 테이블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구현되어 여러 학습자 및 교수자가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다.

3.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기술이며, 가상현실은 현실에 가까운 가상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로 구별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습자에서 실감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원거리 협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기 시작한 구체적인 사례는 미국의 K-12학교들을 살펴볼 수 있다.⁷⁾ 먼저, 필라델피아 매스액튼 학구(Methacton School District)에서는 구글의 가상현실 현장학습 시범 프로그램인 익스피디션 파이오니어

7) <http://thejournal.com/Articles/2016/06/15/Augmented-and-Virtual-Reality-Where-Is-the-Educational-Value.aspx?Page=1> (T.H.E. Journal, 2016. 6. 15)

프로그램(Expeditions Pioneer Program)⁸⁾에 참여하였다. 구글 카드보드(Cardboard)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가상의 현장학습을 통해 수업에서 학습 주제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며, 교사와 학생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었다. 조지아주 리버티키운티(Liberty Country Schools)는 가상현실 교육 시스템인 zSpace의 VR System Lab을 활용하여 가상의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속의 물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전략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지능정보기술은 필수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 도입을 선결 조건으로 하거나 혹은 기술 도입을 배타적으로 보는 시각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능정보사회를 이끄는 정보기술이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에 융합되고, 그 경험이 학습 역량 증진과 교사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BYOD를 교실로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학생 간 기술 격차 문제, IT 보안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문제나 학생들이 디바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무선 인프라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학습 환경 설계와 활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진숙(2016). 4차산업혁명과 교육의 역할. 월간교육 7월호.
- 김진숙, 정제영, 임규연, 정광훈, 계보경(2016). 지능정보사회대비 미래교육 Big Picture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찬승(2016). 2030 미래사회 조망과 교육비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30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방향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6). 글로벌 교육 동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Johnson, L., Adams Becker, S., Estrada, V., and Freeman, A.(2015). NMC Horizon Report: 2015 K-12 Edition. Austin, Texas: The New Media Consortium.
- JRC, IPTS(2010). The Future of Learning: New Ways to Learn New Skills for Future Jobs. http://ftp.jrc.es/EURdoc/JRC60869_TN.pdf
- Sharples, M., Adams, A., Alozie, N., Ferguson, R., FitzGerald, E., Gaved, M., McAndrew, P., Means, B., Remold, J., Rienties, B., Roschelle, J., Vogt, K., Whitelock, D. & Yarnall, L.(2015). Innovating Pedagogy 2015: Open University Innovation Report 4. Milton Keynes: The Open University.

8) 구글이 전 세계 학교들에게 가상현실 기반의 현장학습을 시범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미래변화와 유아교육



양 애 경 한서대학교 교수

I 서론

최근 많은 나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소양과 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초점 맞추어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 개개인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양질의 교육으로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사명이고 우리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사람이 곧 국가의 희망이다”는 말과 같이 유아는 우리의 희망이고 후세대를 이끌어 갈 귀중한 자산이다. 이 귀중한 자산이 빛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갖고 닦는 것이 교육의 힘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유아교육의 방향이다.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미리 체득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유아기부터 공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Heckman(2006)은 유아교육이 교육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 경쟁력과 효율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유아교육에 효율적·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며 사회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1970년대 후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학부모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아교육 기관 증설 필요성이 급격하게 늘어나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학원 등이 생겨났다. 이는 유아 교육기관의 다양화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 따른 교육의 질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가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찾게 되었고, 이는 곧 교육의 격차와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모든 유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유아들에게 동일한 질 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고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누리과정을 도입하였다. 유아교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2012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하

여 모든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에게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3~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공통 누리과정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공통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 3~5세 유아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공통내용을 선정하여 큰 어려움 없이 활동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장명림, 2012).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아무상 교육과 보육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기회균등이라는 목표는 실천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아직도 도시와 농촌,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 교사의 질, 교육환경의 개선 등 보완해야 할 점은 많다. 이러한 문제를 일시에 개선하기에는 많은 시일과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의 방향과 핵심역량으로서의 유아의 바른 인성교육, 유아 놀이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유아들이 교육격차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의무교육 방안을 탐색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의 방향

다니엘 핑크는 정보화 시대는 갔으며, 미래사회의 역량을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시대로 창작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적 공감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미래 인재의 조건을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후세대를 살아갈 유아들과 부모들에게 다가올 미래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고 이에 대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며, 교육을 통해서 유아들에게 미래역량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의미하고 있다고도 본다. 미래 학자들은 현재의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일자리를 찾게 될 때는 현재의 일자리 중 60~70%는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물론 전문가마다 이견은 있으나 클라우스 슈밥이 쓴 제4차 산업혁명을 보거나 다른 책을 보아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모 자신이 교육을 받고 경험한 시대의 영향으로, 미래를 살아갈 자녀들의 교육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사교육에 투자함에 따라 유아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유아교육은 부모들의 관점에서 보고 과거의 교육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 사회, 국가가 나서서 전면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유아를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은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모든 유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유아교육도 초등학교와 같이 의무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유아 교육은 교과 학습보다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서 비롯된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이루는 통합적인 교육,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전통적인 학문 영역인 교과 혹은 발달 영역보다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중심으로 유아기의 발달에 적합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소양과 역량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아교육은 유아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은 앞으로 초·중등교육 단계의 성취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 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교육개혁위원회, 1997). 미국 유아교육에 대하여 클린턴 대통령의 ‘21세기 미국교육을 위한 호소’ 중 유아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근거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인간의 뇌 발달에 관한 최신의 연구 동향은 우리가 전부터 익히 알고 있던 것을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것은 아동 생애의 초기 및 몇 년이 그들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학습할 준비를 갖춘 채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부모들이 그들 자녀의 첫 스승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아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역설하면서 부모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2만불 시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넘어 유아교육과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혹은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사람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유치원 교육부터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유아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인간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 인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이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인 우리 유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아들이 튼튼하게

자라나 새로운 세계를 경영할 미래 인재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 시대에 합당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III 유아교육에서의 놀이교육과 인성교육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이냐고 설문 하였더니 81.1%가 잘 노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47.2%는 놀이를 통하여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여 창의성이 자라기 때문이고, 10.3%는 놀이할 때 즐기듯이 즐길 때 아이디어가 샘 솟는다. 6.5%는 놀이를 통하여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했다(연합뉴스, 2008. 8. 24.). 앞으로 미래 인재의 첫 번째 조건은 잘 놀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놀이는 어린이,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끔은 요즘 젊은이들은 놀 줄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한다.

이는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놀이를 통한 교육보다는 학과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여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모들 역시 대학 진학에 모든 투자하느라 노는 방법을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과 노는 방법을 모르고 아이패드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교육기관이나 사회교육을 통해 보충해 주어야 하나 이 또한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유치원의 교육은 놀이에서 시작하여 놀이로 끝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아에게 놀이는 학습 그 자체이다. 놀이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적 긴장이나 두려움 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기회가 된다. 놀이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도 발달하게 된다. 또한 놀이를 통해서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을 도모하며 사회성 발달과 언어 발달 그리고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놀이의 중요성은 이미 유아교육에서는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놀이가 곧 어린이의 삶(손영수, 2001; Miller&Almon, 2009), 놀이는 어린이라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울고 웃고 갈등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삶(유혜령, 2001), 끊임없이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구성해 가는 과정(권용훈, 2006)으로 유치원의 하루 일과가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에서는 ‘즐겁고 신나는 초등돌봄놀이활동’ 프로그램



램을 개발하여 창의, 인성 신장을 위한 놀이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놀이란 ‘일’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아동의 흥미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여 몰입할 수 있는 활동,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능동적,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16)이 공동 개발한 ‘즐겁고 신나는 초등돌봄놀이활동’에서는 아동기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반복되는 놀이 경험을 통해 인지, 신체,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도우며, 놀이를 통해 적대심, 공격성 혹은 행복감, 만족감, 자신감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놀이를 통한 창의적인 경험과 표현은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놀이 활동에서의 사고와 상상의 표현경험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발달시킨다. 놀이를 매개로하여 접촉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술이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집단에 참여하는 기술 등도 학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운동을 놀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도 놀이 중심교육은 유치원 교육의 고유성이며, 유치원 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의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아의 삶은 놀이이고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유아를 자라게 한다는 의미가 놀이를 도구화한 교사 주도의 교수·학습 방법이 유치원 교육인양 교육성과 정체성이 변질되어 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유아교육을 보면 유아교육기관은 ‘레저타임센터’이다. 여기서는 놀면서 배운다는 의미로 즐겁게 노는 것 즉, ‘fun’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놀이를 통해 사회성과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이다. ‘교실’은 ‘Education’과 ‘Care’ 즉, 교육과 보육 기능을 수행하는 에듀케어링 시스템(edu-caring system)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덕목으로 21세기의 인재로서 중요한 요소가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인성은 유아기에 거의 형성되기 때문에 유아기의 인성교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요즈음은 형제가 없거나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회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놀이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개선해 주어야 하는데 이 또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놀이는 인간의 부족한 모든 점을 보충해 주어 바른 인성을 지닌 인간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

특기·적성분야를 개발하고 창의성, 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예술, 체육 등 예체능 중심의 놀이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즉, 아동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의, 인성덕목 및 습관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는 놀이활동 개발과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놀이 활동 영역, 집단규모(대/소집단), 실내외 활동을 균형 있게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유아 인성 덕목으로 질서와 협력, 타인 배려, 존중 및 공감 등이 대두되고 있다(양애경·장원동·최희양, 2016). 또한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역량, 다양하고 글로벌한 사회에서 의사소통하는 역량, 창의적 역량, 자연 존중과 환경보호 등의 녹색성장 관련 역량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점을 배경으로 유아의 미래 인성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양애경·장원동·최희양, 2016; 나귀옥, 2013).

첫째, 유아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으로써 인지적 학습보다는 기본생활습관과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즉, 유아기부터 놀이를 통해 올바른 질서의식, 협력, 건강 등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며,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사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문화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주도성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모든 학습과 발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유아기 때부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기본생활습관과 인성, 자율성 이외에 창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초등학교의 2015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에도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에서는 창의성이 어느 한 영역에서만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환경생태교육을 들 수 있다.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자연교육, 환경교육, ‘숲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존중교육과 환경교육을 통해 유아기 때부터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도록 하며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생태교육의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은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수준별 맞춤교육이 필요하다. 즉, 놀이활동 중심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이루는 통합적인 교육,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통적인 학문 영영인 교과 혹은 발달 영역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중심으로 유아기의 발달에 적합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소양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IV 의무교육으로서 유아교육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런 태도는 유아기부터 바른 교육을 통해 바르게 길러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가정 형편상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국가가 교육과 양육에 개입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체제가 의무교육이다.

장명립(2013)은 유아교육이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아교육 기회제공의 보편성과 균등성을 확보한다. 둘째,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한다. 셋째, 유아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한다. 넷째, 유아교육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 한다. 다섯째, 유아교육과 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 지향한다.

이 모든 것을 의무교육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행 제도 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제도가 의무교육이라 보며 유아교육도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으로 가야 한다.

2007년 유니세프 이노첸티 연구소의 보고서에서 ‘경제 선진국의 아동복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 국가의 순위에 대한 진정한 척도는 그 국가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 물질적인 보장, 교육과 사회 그리고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보살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엔 세계아동인권선언은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다.

2009년 11월 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제 1차 저 출산 대책회의’에서 저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 즉, 만 5세아 초등학교 취학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만 5세아 초등학교 조기 취학에 앞서 ‘영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육아정책’을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예산지원 면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고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을 살펴보면 공립이나 병설유치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22만원이 지원됨에도 다른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모순점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의무교육이다(김은설, 2014).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필요성은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 가정과 사회의 요구 수용, 초등학교와의 연계성, 교육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정경화, 2003).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는 매우 큰 영역 간의 이동이므로 유아의 각 영역의 정서적 리듬이 방해받거나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Elkind, 2003). 즉,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주고 적극 지원해주는 정책방안이 요구되어진다. 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순응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최인선, 2004). 즉 아동이 학교생활 속에서 대인 관계, 규칙과 질서 등에 있어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윤미, 2008).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과정으로서의 균등 실현과 안정적 재원 확보 및 법적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쉽게 또는 어렵게 되기 때문에 국가, 지역사회, 학부모 등이 협력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지자체와 정부 간에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저출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 5. 27. 교육과학기술부. 227-249.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즐겁고 신나는 초등돌봄 놀이활동 -창의, 인성 신장을 위한 놀이중심 프로그램 모델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권동택(2008).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예기준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8(3), 1-25.
- 김은설(2014). 유치원 교육비 부모부담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육아정책 연구소.
- 김희태(2010). 만 5세아 유아 취학 제안에 대한 논의, 유아교육논집, 14(1), 5-22.
- 나귀옥(2013). 핵심역량의 관점에서 본 누리과정의 방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425-447.
- 송기창(2009) 유아교육재정 관계법령 개정 방안, 유아교육재정지원실태와 개선, 2009년 정책토론회 자료집.
- 안소영·최윤정(2009) 놀이중심의 유아교육: 유치원에서 하루종일 놀이에 몰입하도록 지원하기,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13(4).
- 양애경·장원동·최희양(2016). 창의인성론. 서울: 동문사.
- 양애경·조호제·노신민(2008). 초등 방과후 보육 교실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육아정책연구, 2, 66-94.
- 연합뉴스(2010. 02. 15). 초등학교 취학률. 연합뉴스.
-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육아정책포럼 제 14호.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핀란드의 육아정책.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개발센터(2007). 경제 선진국의 아동복지(유니세프 이노첸티연구소 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경민(2010). 초등학교 입장에서 본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 -교육주체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319-348.
- 이기우·이대균·현은자(1998). 5세 조기취학 아동의 적응도 연구. 유아교육연구, 18(1), 5-31.
- 장명림(2012). 5세 누리과정 추진 경과 및 3-4세 누리과정 추진 과제. 육아정책포럼. 29(3/4), 15-22.
- 장혜순(2010). 이 시대 유아교육: 당면과제를 해결을 위한 현상학적 접근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30(1), 5-37.

- 정경화(2003).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교육현황 분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 정미라·박은혜·허혜경·권정운·임준희(2007).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보장을 위한 영유아 교육복지정책 비교: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1(3), 207-225.
- 지성애(2010). 유치원·초등학교 연계교육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및 실태비교. 유아교육연구, 39(2), 283-308.
- 한국교육개발원(2008). 연령별, 설립별 유치원 취원아 수 및 취원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Educational Effects of a H-STEAM Group play course in College Liberal Arts Curriculu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1(6), 29-37.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의 변화 방향¹⁾

이 찬 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더 나은 학교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교장/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를 더 잘 지원하고자 노력하시는 장학관, 장학사 여러분들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I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어야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은 개인이든 사회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신 강연 주제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의 변화 방향”이란 제목도 풀어서 생각하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은 지금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떤 지식과 역량을 길러줘야 하는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의 학생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인들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인들에게 미래사회가 마주할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 역량, 가치, 태도 등을 길러줘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학교교육은 입시 준비 교육에 가깝다. 어떤 가치 있는 내용도 점수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교육으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육이 학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은 학교교육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학교교육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요국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핀란드의 학생조차도 1/2이 학교교육에 의미를 느끼지 못해 냉소적이라고 한다. 이제 “21세기 학습자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교육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 2016년 9월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 발대식 자료집에 게재된 글임.

먼저 지금의 학생들이 마주할 미래사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란 편의상 ‘2030년’으로 칭하겠다. 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이 대학을 마치는 시기이다.

II 2030년 미래사회 조망

다가올 2030년은 지금부터 약 14년 후의 세상이다. 이때쯤이면 정치, 기술, 경제, 직업, 인구, 문화, 가치관 등에 상상하기 어려운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변화를 앞두고 학교교육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큰 과제가 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기술의 혁신이 몰고 올 사회와 삶의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알파고 바둑대국과 ‘제4차 산업혁명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다보스 포럼에 대해 국내 언론의 많은 보도가 이를 촉발한 측면이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달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하던 대부분의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물적으로 강화되거나, 기관대체·이식·부착 등으로 기계적으로 강화된 증강인간(augmented human)이 탄생할 때 인간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특이점(singularity)이 정말 온다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인간 게놈에 대한 연구와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체를 합성하는 것이 일반화라도 된다면 인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인공지능 튜터에게 개인지도를 받는 세상이 오면 학교와 대학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또 ‘백과사전의 정보를 칩의 형태로 인체에 심어서 인간의 인지기능과 연결할 수 있게 되면 학교교육의 형태는 어떻게 변할까?’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우려되는 부분도 매우 많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든 기술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조절해 가리라고 생각한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너무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새로운 변화의 징조가 확실해질 때 얼마나 신속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미래사회의 변화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학교교육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갈지에 대해 살펴본다.



III 학교교육을 변화시키는 주요 동인(動因)과 시사점

학교교육이 인간의 능동적 의지에 의해 변해가는 부분도 크겠지만 어찌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면 그 결과가 학교교육에 줄 충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술과 과학의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가 학교교육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 주요 동인(動因)들은 ‘기술의 변화(4차 산업혁명), 경제적 불평등, 직업세계의 변화, 다양성 증가, 대학 졸업장과 자격증 경쟁시대의 도래, 지식·정보의 양 팽창과 생명주기의 단축, 뉴미디어 세대의 뇌의 변화, 낙오세대의 출현’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이러한 주요 동인들이 미래사회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1. ‘기술의 변화’가 교육에 주는 시사점

많은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일컫는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 모바일, 3D프린터, 나노·바이오 기술 등이 우리의 사회와 삶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은 속도, 규모, 영향의 크기가 이전의 혁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교교육의 변화 속도가 느림으로 인한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 감소라고 생각한다. 학교교육이 사회변화와 수요자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학교교육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오늘날 학교교실이 붕괴된 것도 국가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과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의 불일치가 큰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기술의 발전이 교육에 미치는 다른 영향 한 가지는 일자리 감소로 인해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에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큰 불안감을 줄 것이란 점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하던 많은 일을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탈학교와 학교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며 후자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변화의 속도에 대해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기업의 변화속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정부조직의 변화속도는 25, 학교의 변화속도는 겨우 10이라고 했다. 이제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분권화와 학교자치 실현을 통해 변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과 학교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새로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

다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살펴보겠다. 경제적 불평등은 곧 부의 양극화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와 승자독식 경제로 인해 2030년에는 부의 편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경제의 혜택은 주로 상위 소수의 엘리트층에 집중될 것이란 예상에는 이견이 없다. 이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누진세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의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3. ‘직업세계의 변화’가 교육에 주는 시사점

금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향후 20년 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다가오는 미래사회에는 자동화로 인해 기존의 많은 일자리를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향후 5년 내에 7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210만 개의 직업이 신규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학생의 65%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국가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와 줄어드는 분야에 대한 질 높은 연구와 예측을 통해 직업의 수요와 공급에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소수의 인원만으로 생산이 가능한 시대이다. 그래서 일자리의 창출을 국가와 사회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이다. 21세기에는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보다는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보다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정답만 찾게 하는 교육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21세기는 팀으로 일하는 시대, 더 나아가 서로 다른 팀들이 더 큰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사회성과 감성, 공감능력, 모험에



도전하는 정신, 네트워킹 등의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해진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는 직업과 지식의 생멸(生滅) 속도가 매우 빨라 평생학습능력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일하는 도구, 일하는 방식 역시 많이 변할 것이다. 또한 빅 데이터 분석, 평가, 활용을 위해 ICT 활용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4. ‘다양성의 증가’가 교육에 주는 시사점

교실 내 학생의 능력, 학습준비도, 학습양식, 흥미, 장래 희망, 문화자본, 인종 등의 차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미 다문화 가정 아동의 증가 비율이 20%를 넘는다. 갑작스런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의 주요국들은 교실 내 학생의 다양성에 대처하는 것을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 시작했다. 헬싱키 디자인 연구소(2011)의 말을 빌리면 미래사회에서 교육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다양성에 대해 얼마나 잘 대처하며 다양한 아동들을 모두 학습에 참여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다양성의 증가는 무학년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개별화 지도(differentiated instruction: DI),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도 일반 학생들처럼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학습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등의 도입을 재촉할 것이다. 다양성의 증가는 또, ‘누가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모든 아동을 몰입시키고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낼 교수법은 무엇인가?’,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은 타당하고 유효한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기존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점진적으로 재설계, 재창조되어야 한다.

5. ‘대학 졸업장과 자격증 경쟁시대의 도래’가 교육에 주는 시사점

2030년경에는 학습과 학력인증의 경계가 흐려질 것이란 예측이 많다. 학점과 학위는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대학 졸업장과 자격증명서가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기업이 수여하는 자격증이 직원을 채용할 때 대학 졸업장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대학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4~5년을 투자하느니 1년 미만의 기간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는 대학 졸업장의 미래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학교교육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졸업장의 가치 하락은 학교교육에 어떤 변화

를 몰고 올지 자못 궁금하다. 대학졸업장이 진정한 실력을 의미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제 대학도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6. 지식·정보의 양 팽창과 생명주기의 단축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

21세기에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수명주기(life cycle)도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촉이 누구에게나 매우 쉬워졌다. 금년 다보스 포럼 발표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20년이 되면 현재 대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의 50%는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학교교육에서 배우는 지식의 수명과 관련하여 “우리 자녀 세대가 4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 80~90%는 쓸모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과학적 지식의 경우 그 수명은 더욱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정보를 교과서에 담아서 이를 몇 년씩이나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식은 재고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21세기 사회에서는 수십 년 후에도 여전히 의미 있고 유용할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쓸모 있을 핵심개념과 핵심원리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이의 기반이 되는 핵심역량의 습득이 매우 중요해진다. 사고력, 학습능력, 사회적 기술(예: 공감능력), 함께 일하는 능력, 함께 살아가는 능력,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예: 디자인 싱킹), ICT 스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모든 단원을 핵심질문(essential question: EQ), 핵심개념(big idea) 중심으로 설계하고 깊은 이해를 위한 지도방법(Understanding by Design: UbD)이 오래전 개발되었고 그 효과가 검증되어 미국, 캐나다, 유럽의 일부 국가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낮은 수준이지만 시도한 바 있다. 이제는 학습방식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핵심적인 열린 질문을 던지고 열린 답을 찾는 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낱개의 지식과 정보를 관통하는 핵심개념이나 핵심원리 중심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과서의 단원이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과학적 주장에 대해 이를 믿을지 말지를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와 같은 핵심질문으로 시작하는 방식이다. 가령 ‘질병의 전염과 예방’에 관한 단위라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수업을 구조화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표 1〉 역순 설계방식에 의한 단위 수업 설계 모형

핵심질문(EQ)	“한 개인이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핵심개념 (big idea)	1. 개인의 선택이 질병의 전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기술의 발전은 국내외 질병과 의약 개발에 주요 영향을 끼친다. 3. 질병과 빈곤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단원활동 개괄	이 활동(module)에서 학습자는 전염병에 영향을 주는 과학적/문화적 상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폭넓게 정독한다. (A)란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하는 활동을 한다. “건강은 인간의 권리인가?” “한 개인은 문화, 종교, 과학, 의술 간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추가적으로 학습자들은 일련의 관련 글, 직접 경험한 체험, 보고서, 과학 논문 등을 분석하면서 전염병의 이해를 깊게 한다.
수행평가	1. 읽은 내용 분석을 위한 방향제시 질문: “글쓰기에 의하면 질병의 전염에 관련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할 때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복수의 증거를 인용한다. 또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 그 증거를 선택했는지 논리를 밝힌다. 2. 소크라테스 식 세미나: 소그룹 토론에 참가해 질병의 전염 원인 3가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평가한다. 3. 성명서 작성: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무관심해도 좋은가?”

7. ‘뉴미디어 세대의 뇌의 변화’가 교육에 주는 시사점

학교교육을 변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뉴미디어 세대의 뇌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미디어 세대는 새로운 뇌를 가진 신인류에 가까우며, 이들의 사고방식, 행동양식, 동기유발 방식, 삶의 방식은 기존의 기성세대와 매우 다르다. 뉴미디어 세대의 뇌는 충동성이 높고, 주의 집중시간(attention span)이 매우 짧으며 피드백이나 보상이 느린 것을 잘 참지 못한다. 개인의 집중시간 조사에서 1998년에는 12분, 2008년에는 5분, 2015년에는 8초로 짧아졌다는 최근의 보도(The Associated Press)는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주위의 강도 높은 자극에 뇌가 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학교교육이 마주한 가장 도전적인 과제는 ‘학습자를 어떻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이다. 모든 수업은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육의 표준화를 최소화하고 ‘학습자 중심 개별 맞춤 학습(personalized learning)’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모든 학습자를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제 학습의 권리와 책임(ownership)을 학생에게 이전해야 한다. 배움 내용, 수준, 방법, 장소까지 학생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도 게임처럼 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 피드백이 빠르고 즉시 보상이 주어지는 게임의 원리가 교수·학습에 적용될 때 학습자의 뇌는 더 잘 집중할 수 있다. 수업도 초등학생은 약 10분, 중학생은 약 15분, 고등학생은 약 20분마다 수업의 모드를 바꾸어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8. ‘낙오세대 출현’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

끝으로 ‘낙오세대의 출현’이 학교교육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교육을 받고 졸업장을 획득하는 것이 계층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 시대를 맞았다. 이제 기존의 학교 시스템은 특정 학생들에게만 적합한 곳일 수 있다. 앞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곳이 굳이 학교일 필요는 없다. 의미 있는 학습은 지역사회에서 또는 기업의 일터에서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나이별로 학년과 반 편성을 하는 기존의 학교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교육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더 정확히는 적응할 의사가 없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수업 중에 잠을 자는 것을 넘어 탈학교를 꿈꿀 것이다. 학교가 자신들에게 희망도 잠재력 실현의 기회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제 기존의 학교 제도 하나만으로 버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타당한가?’란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야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은 초·중고 과정을 다 마치면 마치 “교육된(educated)”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접근한다. 이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다. 변화가 빠르고 지식과 직업의 생멸 주기가 점점 더 단축되는 미래사회에는 중국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교 시스템의 변화 방향에 대해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존의 학교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최적화를 추구할지 아니면 학생 주도 개별화 맞춤교육을 지향할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당연히 후자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고 분권화를 통해 진정한 학교 자치의 실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낙오세대의 출현을 방지할 경우 교사들이 겪는 교직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자괴감이 보다 심화될 것이며, 이를 통한 교사의 소



진도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낙오세대의 출현은 고교 체제와 학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IV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교육의 대응 방식

이상과 같은 학교교육의 변화 동인에 대해 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때 다음 3가지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우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 학교교육이 너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 강도, 영향 면에서 지난 세 개의 산업혁명에 비할 바가 아닐만큼 크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교육과 관련해서는 변하지 않는 요소가 더 많다. 미래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교육의 목적은 거의 동일할 것이다. 최선의 자기되기, 건강,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의식, 공동선의 추구,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 불확실 한 것에 대한 도전 정신, 의사결정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미래의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등은 20년, 30년 후에도 교육의 목적으로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미래방향을 탐색할 때 경계해야 할 다른 하나는 ‘미래교육’을 ‘현재교육’과 매우 다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다. 흔히 미래란 현재와 무관하다고 착각하지만 미래는 언제나 과거와 현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다만 골고루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교육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현재교육, 현재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책결정자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에 지나치게 들뜨지 말고 ‘이미 도착한 미래’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력부터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미래사회는 만들어 가는 것이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포자’가 늘고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학교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도덕성 높은 교육철학의 부재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핀란드나 온타리오 주, 앨버타 주처럼 “모든 아동은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란 신념 속에 “격차를 줄인다”를 학교교육의 주요 목표로 삼았더라면 우리의 학교교실이 지금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날 마주하는 문제를 충실히 잘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드는 최선의 길이다. 교육의 공공성 위기, 교사 공동체의 붕

괴와 소진, 학교교육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수의 증가, 중상위권 위주의 수업으로 인한 느린 학습자의 일상적 배제, 표준화 시험의 폐해, 상대평가의 폐해, 교실 내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대학입시가 학교교육을 지배하는 문제 등은 현재의 학교교육이 마주한 도전적 과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방치한 채 관심을 미래교육으로 지나치게 이동시킨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교육이 안고 있는 현재의 핵심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이 비전 수립을 통한 변혁이다. 따라서 모두의 열망을 담은 가슴 뛰게 하는 ‘2030 교육비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V 2030 학교교육 비전 수립

학교교육은 크게 세 가지 힘에 의해 변한다. 첫 번째는 정치와 문화이고, 두 번째는 기술의 발전이 몰고 올 사회 변화(예: 앞에서 살펴본 8가지 동인)이며, 세 번째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하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인간의 능동적 의지이다. 바로 세 번째의 것이 2030 학교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을 말한다.

비전 설정 과정에는 미래사회의 조망 외에 고려할 요소들이 매우 많다. 먼저 학교교육이 지켜나가야 할 핵심가치와 핵심원칙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주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핵심가치에는 현재의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자율, 의미, 자신감, 존엄성, 공정, 평등, 탁월성, 협력, 공동선의 추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30 학교교육의 비전을 수립할 때 학교교육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아래 10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2030 한국 학교교육 비전 설정 시 고려할 요소들

- ① 모든 아동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교육의 최고 목표로 삼는다.
- ② 학생·교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상위 교육목표로 삼는다.
- ③ 학생주도 개인별 맞춤 학습(personalized learning)과 개인의 강점에 기반을 둔 교육을 지향한다.
- ④ 개인의 사적 욕망의 추구하고 공적 이익 추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⑤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교육 대신 모두가 승자가 되는 교육을 지향한다.



- ⑥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높여 출발선 격차를 줄인다.
- ⑦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는 차세대 평가와 책무성 제도를 도입한다.
- ⑧ 지식·정보의 홍수에 대응해 핵심원리·핵심개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한다.
- ⑨ 학생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
- ⑩ 새로운 미래학교의 모형으로 ‘학습공원(Learning Park)’²⁾을 지향한다.

서울교육은 2030년 학교교육의 비전을 어떤 내용으로 수립해야 할까? 한국 학교교육의 비전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겠지만, 위 10가지 요건이 반영된 ‘학습과 성장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한 모든 아동의 잠재력 실현(excellence through equity)’과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의 학교교육은 상위 30%를 위한 교육을 해왔다. 이제는 나머지 70%의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이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 “2030년까지 출신·성장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 신체적·정서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 일,
 -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해 이를 키우는 일,
 - 진학·취업·삶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는 일,
 - 개인의 발전과 성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공에 기여하는 일,
 - 참여하고 기여하는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일을 교육목표로 삼고 이를 충실히 실천하는 학교 및 학습공동체를 구축한다.”

비전의 수립과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변화의 원리를 잘 알고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가치, 비전, 새로운 교육목표, 핵심성공요인의 도출, 평가지표의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핀란드는 비전 설정과정을 모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벤

2) 2030년의 이상적인 학교 모습으로 소개하는 ‘학습공원(Learning Park)’은 전통적인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된 무학년제 미래학교다. 이는 다수의 소규모 학습공동체로 구성되고 학습은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생이 학습을 주도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코치와 가이드로 바뀐다. 교육과정은 최소한의 공식적 교육과정 외에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 비공식적 교육과정 등이 함께 운영된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원 중심이며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동조합처럼 운영하는 학교다.

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의 요건 중 ③항과 관련해서는 학생을 변화의 주체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 기획자로서의 학생(students as planners)
-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학생(students as teachers)
- 교사 전문성 개발의 파트너로서의 학생(students as professional development partners)
- 의사결정자로서의 학생(students as decision-makers)
- 변화를 위한 작업의 동반자로서의 학생(working With not For students)

이상과 같이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 의해 보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알림] 이상의 내용은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이트의 본인 칼럼, 『서울교육』 가을호에 기고한 내용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변화하는 미래와 학교의 역할¹⁾

정 제 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2016년에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알파고(AlphaGo)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한 층 높여주었고, 미래사회와 교육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다. 이미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았으나, 알파고의 등장으로 이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 사회는 18세기 증기기관 발명을 계기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20세기 초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시작된 2차 산업혁명, 1970년대 이후 로봇을 활용하기 시작한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다(김정욱 외, 2016). 사회적 발전으로 교육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초기의 근대적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지능정보사회로 지칭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상상 속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되고 있다(김정욱, 박봉권, 노영우, 임성현, 2016).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발달해 왔던 각종 기술들 사이에서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종전의 산업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무인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드론,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창의적인 기술의 산물이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다. 박종현 외(2014)는 지능정보사회를 인공지능과 ICBM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ICBM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Cloud)에 저장하고, 축적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 서비스(Mobile)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학교교육은 크게 변하지 않

1) 이 원고는 필자의 교육행정학연구 제34권 제4호(2016. 10. 31.)에 게재된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 시스템 재설계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Glickman, Gordon, & Ross-Gordon, 2010: 31).

학교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사회의 특징인 대량생산 방식의 공급자 위주라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 개인의 흥미와 소질, 적성, 학업 이력과 수준, 학습의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엄격한 상대평가를 통해 선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학교는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Hargreaves & Shirley, 2012).

대량 교육(mass education)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학교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장에 비유해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의 운영은 공장의 공정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학생들을 올려놓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년을 이동시키고 있다. 공장은 상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 공정별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불량품이 발생하면 이를 교정하기 위한 품질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기별, 학년별로 나타나는 학습부진아에 대해 철저한 학습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장보다 품질관리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OECD(2001)에서는 혁신의 노력이 없으면 현재의 학교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다양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대안적 교육 경험에 대한 인증도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은 학교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의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삼는다면 학교교육은 한 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하고, 학교교육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시스템들을 총체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미래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학교교육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II 학교교육 시스템의 문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을 매우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투입 요인으로서 학교제도를 살펴보면 전국이 ‘6-3-3-4제’의 동일한 수업 연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교육재정, 교육여건



등은 전국이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원은 세계적으로 전문성 수준이 높은 자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환과정을 살펴보면, 국가교육과정은 높은 수준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학교교육의 평가 기준과 방식도 동일하며, 학교의 성과를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양식과 기재 방식도 표준화되어 운영하고 있다. 산출의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 편차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학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성과 경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교수-학습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의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하위 시스템들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학교제도의 경직성

우리나라의 현행 학제는 교육법령에 근거하여 학교 단계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6-3-3-4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직성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존재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6년이 지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또 중학교에 입학한지 다시 3년이 지나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초등학교 과정을 덜 배웠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7년 동안 다닌다거나,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모두 학습하였다고 해서 5년 만에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연성도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생의 학습 수준, 학습 속도, 학습 필요, 문화적 차이 등을 반영하지 않는 가운데 경직되고 고정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수준과 속도에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은 더 빠르게 가는 학생과 더디 가는 학생 모두 소외될 수밖에 없다(최상근, 박효정, 서근원, 김성봉, 2004). 결과적으로 학교제도를 너무 획일적으로 경직되게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육적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김영철, 임천순, 반상진, 오현석, 신준섭, 2004). 학생들은 모두 다른데 학교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획일성

학교제도의 경직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제도는 바로 국가교육과정이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 간 학습 수준과 속도에서 차이가 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단일한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획일적인 교육과정은 수업시수, 과목별 단위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의 양과 시간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습자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허경철(2001)은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을 보다 유연하게 할 것을 강조하면서, 현행 국가교육과정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목의 종류와 시간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학교 입학 시기의 학력 수준 격차는 공급자 중심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 한 번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 계속 누적되어 이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양정호, 서정화, 김영철과 백순근(2008)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부진 책임지도 정책 연구를 통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평균적인 학력성취 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조지민, 김명화, 최인봉, 송미영과 김수진(2007)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아져 학습부진이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정근, 성열관과 김정숙(2007)은 학력 부진 아동의 특징과 학력 부진 학생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면담법 등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교육과정의 높은 난이도가 연구대상 학생들의 낮은 학력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흥미를 잃고 잠자는 아이들의 문제나 일반고의 위기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3. 무한 경쟁을 유발하며 실패자를 양산하는 상대평가 제도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상대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서열에 따라 등급으로 나누어 측정하기 때문에, 9등급제에서 상위 4%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학교에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은 학습의 결과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실제 학생들의 역량을 파악하는데 상대평가의 등급이 주는 정보는 피평가 집단에서의 서열 이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해당 학생이 수학 교과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의철, 양혁승(2015)은 절대평가 대비 강제배분 상대평가 방식이 피평가자의 외재



적 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강제배분 상대평가 방식이 절대평가 방식에 비해 외재적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대공정성, 지각된 통제감, 기대결과치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제배분 상대평가 방식이 외재적 동기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효과는 기대공정성, 지각된 통제감, 기대결과치를 통한 부정적 간접효과로 인해 일정 수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일, 윤미선과 소연희(2008)는 흥미와 내재동기에 대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흥미를 보이는 주된 이유를 통제적인 학습환경, 경쟁으로 인한 불안 및 스트레스와 함께 빈번한 상대평가에서 오는 유능감의 박탈 등으로 파악하였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는 결과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학습에 실패한 학생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실패하여 좌절하는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연결된 내신 평가는 학년별 평가로서 동일 과목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구분 없이 동일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수준별 반편성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도 평가의 문항은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다. 학생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교사에게는 거의 평가권이 주어지지 않고, 정답을 정확하게 응답해야 하는 선택형이나 단답형 위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가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교사의 수업도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토론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교실 수업보다는 진도에 따라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생 개인에 대한 수시평가나 형성평가의 적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고부담의 상대평가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뿐만 아니라 높은 학생들에게도 비교육적인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교육이 아니라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모두가 그만두지 않으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경제학적으로 위치재(位置財)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입학이라는 인생 최대의 고부담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정해진 교육내용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무한 반복적인 학습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학교의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III 학교 재설계의 방향과 전략

1. 기본 방향 : 맞춤형 교육을 통한 완전학습 구현

학교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교육의 원형(原形)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학습에 성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과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특히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맞춤형 교육이 대두되어 왔으나, ‘학습자 진단-맞춤형 처방-평가’의 과정을 아우르는, 즉 맞춤형 교육의 정의에 적합한 학교제도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맞춤형 교육이란 개별 학습자의 학업성취 수준, 심리 특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교수지원을 의미한다. Rotherham과 Willingham(2009)은 21세기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지식과 역량을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춤형 교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지식은 학생들이 각 교과에서 학습하는 교과지식을 의미하며 역량은 논리적 사고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을 의미한다.

맞춤형 교육은 차별화(differentiated), 개인화(individualized), 개별화(personalized) 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차별화는 모든 학생의 교육목표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학습속도와 선행학습 정도를 반영하여 소규모 집단별 수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화는 모든 학생의 교육목표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학습속도와 선행학습 정도를 반영하여 개인별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화는 각 학생의 교육목표와 내용이 다르고 교수방법도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저학년 수준에서는 개인화를 의미하며, 학습자로서 성숙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개별화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U. S. DOE, 2010).

지능정보사회로 지칭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인성과 사회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기본적인 과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 꼭 필요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학습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 학교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여 완전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기본 전략 :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적용

학교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기본 전략은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기의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종현 외, 2014). 기존에 이루어진 학교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적용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볼 때, 1단계는 학생의 수행 정보 및 교사의 평가 결과 등을 디지털화하여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컴퓨터 보조 학습(computer aided instruction, CAI)으로 기존의 정보 저장을 넘어서 교사의 수업 외에 보조적으로 컴퓨터를 통한 학습 내용을 보충하여 제공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학교는 거의 2단계 수준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학습자에 맞추어 교수·학습 내용을 결정하고,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빅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technology-based learning)은 전자적 기술로 이루어진 학습 과정을 의미한다(Cavus & Kanbul, 2010).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의 적용 사례로는 모바일 또는 스마트 기기 활용, 웹 기반의 사회적 네트워킹 도구인 Facebook, Twitter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사의 교수 과정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학생의 학습 효과가 촉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측면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Scruggs & Mastropieri, 1996).

지능정보사회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테크놀로지 기반 맞춤형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 기반 맞춤형 학습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이 과정에서 스캐폴딩(scaffolding)을 제공하는 쌍방향 학습지원으로 볼

수 있다. 스캐폴딩이란 학습자들이 혼자서 스스로 성취하기 힘든 것을 성취 가능하도록 해 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의미하며(Wood, Bruner, & Ross, 1976), 교수자 또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지원으로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Rachel, 2002).

지능정보사회의 테크놀로지는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학생의 흥미와 사전 경험, 태도 등을 고려해 학습 속도와 방법을 조정해 주고, 그 결과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점검하여 자기주도학습을 도와줄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IV 미래 학교의 모습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연계성에 기반한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교수-학습 활동’에서 학생들의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학교제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 중심의 절대평가의 도입, 지능정보형 교수-학습 시설, 창의적 역량을 갖춘 교사, 미래형 교육지원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정제영, 2016).

1. 유연한 학교제도로의 전환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제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산업화 시대의 학교제도가 갖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줄이고 교육의 목적이 구현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인성과 사회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성과 사회성은 인공지능 로봇의 기계성에 대응하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창의성은 다른 말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 필요에 민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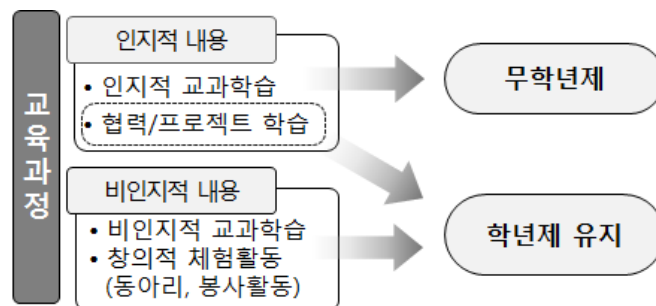


탄력적인 교육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학교제도를 운영하는 교육행정도 종래의 획일적 통제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율화 방향으로 유연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김영철 외, 2004).

허경철(2001)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획일성을 경계하고, 학년이 달라도 능력 수준이 비슷하면 하나의 학습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습집단을 구성하는 보다 교육적인 원리는 학년보다는 능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삼환(1997)은 21세기 사회는 학생 개인에 초점을 맞춰야하고, 개인의 능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급 학교 간의 구분과 이동이 엄격하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보았으며, 학년의 개념이 줄어들고 꼭 1년마다 진급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학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학급의 의미가 자연스레 사라지거나 약화된다고 보았다.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지식과 이해 위주의 인지적 교과 학습의 영역에서 학습자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습속도에 맞는 무학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학생 개인의 필요와 학습 성과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지적 학습에 적용되는 무학년제란 학년이나 계열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수준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해 주는 학제를 의미한다. 무학년제 도입은 모든 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학년제는 국가교육과정 운영에서 학년(school year)과 교육과정(curriculum)의 강력한 연계를 끊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과정을 학습자에 맞추어 개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요구한다. 무학년제가 적용되는 인지적 교과의 학습활동은 수월성(excellence)의 원칙이 적용되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습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학습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인지적인 내용의 교과 학습 중에서도 다른 학생들과의 협력적 학습 방법이 필요한 프로젝트 학습 등에서는 학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비인지적 교과와 동아리,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에도 학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년이 유지되는 팀 학습과 비인지적 활동에서는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조화(harmony)와 형평성(equity)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림 1] 학년제와 무학년제가 공존하는 유연한 학교제도 모형

2.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절대평가 도입

맞춤형 교육이 적용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개별 학습자의 필요와 수준에 맞춘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이후에는 학점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주어진 교과 내용을 주입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동기에 의하여 자신의 학습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planning)과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 자신의 학습 흥미와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개인의 성취목표를 세우게 되고, 이를 해내기 위해서 배워야 할 학습 내용 설정, 학습 자원의 배분, 적합한 학습 방법의 선택, 평가 및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매 순간마다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 총론에는 학습자 맞춤형 운영이 목표로 제시되어 왔으나 실제 교실 상황에서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운영으로 인해 학생들의 준비도(readiness)나 학습 속도와 무관하게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학생 개인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표준형 교육과정에서 학교기반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정제영, 2016).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의 과목별 교과내용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교육과정은 학교급과 학년별로 이수해야하는 최대한의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하는 최소한의 핵심 교육과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화하면 학년군이나 학교급별로 모든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핵심 성취기준(standards)을 설정하고, 성취기준에 따라 절대평가에 의해 이수를 점검할 수 있는 성취수준(mastery level)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



들이 핵심 성취기준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해 주고, 이를 확인하는 학습 성과관리 체제를 도입하면 학교교육의 책무성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교수-학습 활동에서 학교급에 맞추어 차별화(differentiated), 개인화(individualized), 개별화(personalized) 교육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차별화와 개인화 전략을 통해 교육의 목표는 공통으로 설정하되 다양한 소집단, 개별화 교수 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개인화와 개별화 전략을 활용하여 학점제 도입 등 다양하고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평가의 측면에서는 모든 학습자들이 학습의 과정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습자의 학습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보다는 학습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측정하는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학교 이후에 적용되는 상대평가는 교육적 기능보다는 사회적인 활용을 위한 선별 기능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가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 상호 간 경쟁심과 서열주의를 조장하는 상대평가보다 교육과정 상의 목표와 준거에 비추어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지향하고,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보다는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가 필요하다. 결과 중심의 선다형 문항 위주 지필평가에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지향함으로써,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지식 중심의 평가 대신 종합적이고 다양화된 문제해결능력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정제영, 강태훈, 김갑성, 류성창, 윤홍주, 2013a).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평가 방법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설정한 개인의 목표에 따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개인별로 학습 시작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취 가능한 목표점을 다르게 설정하고 학습 후 이를 달성하였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여 완전학습을 이루는 절대평가 방식의 '학습자 맞춤형 성취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된 개별화된 평가를 위해서는 검사 매체도 지필평가 위주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 활용 위주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차세대 학력평가 2.0, PISA 등에서도 컴퓨터 기반 평가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평가는 모든 학습 과정에서 성공한 결과를 질적으로 기록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학생의 학습 성과를 기록한 포트폴리오는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원제도 및 교육지원시스템의 혁신

학생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교원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정해진 대로 가르치는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멘토, 코치, 컨설턴트’의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의적인 교원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창의적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의 양성과정, 자격, 임용, 연수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교원의 양성과정에서는 미래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육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사 자격체제도 변화가 필요한데, 현재 교원양성대학에서 정해진 교과를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평생 유지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률로 규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격의 갱신을 위해서는 교육경력과 전문성 계발 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학교 환경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 지식 암기 위주의 임용고사를 통한 교원의 임용과정도 혁신하여 교사에게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임용 이후에 초임교사의 수업 역량이나 생활지도와 상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로 채용된 이후 다양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연수를 통해 실무 역량을 기르고 학교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직 중인 교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학습공동체 활동과 현장연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유연한 학교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적인 행정구조도 혁신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학교의 위기를 전반적으로 극복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이 요구된다. 유연한 학교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의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수준별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첨단형 미래 교실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학교와 개인의 현황에 대해 거시적이면서 동시에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여 미래형 교육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유연한 맞춤형 학교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자원을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학교교육 체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에 대비하여 학교교육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성과 사회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길러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둘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고, 모든 학생이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학교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교교육의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이다. 기존의 학교교육 개혁 방안들은 단선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학교교육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에 그쳤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학교교육을 개선하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교육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는 미래형 학교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어 미래 학교교육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범사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전국의 학교교육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수많은 현안 과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구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정 정파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범사회적인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기와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미래 학교교육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2003년에 ‘학교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교육대토론회를 운영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 및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학회, 국책연구소, 대학 등 교육전문가, 교원 등 현장 교육 전문가,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형 학교 모형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적용해 보



지 않은 계획은 허상이며, 계획에 대한 토론만으로는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특히 학교교육의 다양한 하위 시스템간의 연계 관계 속에서 미래형 학교제도 모형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검증과 평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 유연한 학교제도,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학습자 중심 평가 체제 및 지능정보형 학교 시설의 시범 적용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경근, 성열관, 김정숙(2007). 학력 부진 아동의 특징 및 발생 원인에 대한 면담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7(3), 27-52.
- 김동환. (2011). 시스템 사고. 경기: 선학사.
- 김성일, 윤미선, 소연희(2008). 한국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 - 실태, 진단 및 처방. *한국심리학회지*, 14(1), 187-221.
- 김영철, 임천순, 반상진, 오현석, 신준섭(2004). 정보지식사회에 따른 학제 다양화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옥, 박봉권, 노영우, 임성현(2016). 2016 다보스 리포트 : 인공지능발 4차 산업혁명.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김주아(2011). 기초, 심화과정 등 고교 교육력 제고 정책 실행 상에 나타난 교육과정 쟁점 분석. *교육과정연구*, 29(2), 1-22.
- 김창욱, 김동환(2006). 정책 부작용의 원인과 유형: 시스템 사고에 입각한 분석. 제1회 복잡계 컨퍼런스.
- 박은아, 박선화, 이채희(2013). 행복한 교실 구현을 위한 성취평가제 적용. 성태제 외 (Eds.), 2020 한국 초·중등교육의 향방과 과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 박종현, 방효찬, 김세한, 김말희, 이인환, 최병철, 이강복, 강성수, 김호원. (2014). 사물인터넷의 미래. 서울: 전자신문사.
- 성의철, 양혁승(2015). 절대평가 대비 강제배분 상대평가 방식이 피평가자의 외재적 동기에 미치는 직, 간접 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8(3), 1009-1027.
- 양정호, 서정화, 김영철, 백순근(2008).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학습부진 책임지도 정책 추진 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윤정일, 김계현, 한승희, 윤여각, 우마고시 도오루(2001). 학교교육 붕괴의 실상과 원인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2015). *교육행정학원론* (6판). 서울: 학지사.
- 윤철경, 이인규, 박창남(1999).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서울: 교육부.
- 이종재, 김성열, 돈 애스덤(2010). *한국교육 60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종재, 정제영(2003). 학업부실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관한 연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1(3), 237-254.
- 정제영, 강태훈, 김갑성, 류성창, 윤홍주(2013a).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 시사점 탐색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제영, 강태훈, 김성기, 류성창, 이덕난, 이주연, 황준성(2013b). 정규학교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 정책 연구. 전라남도교육청.
- 정제영(2016a).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학회 교육정
책포럼 발표자료집 (pp. 23-46). 서울: 한국교육학회.
- 정제영(2016b).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 시스템 재설계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4(4), 49-71.
- 조지민, 김명화, 최인봉, 송미영, 김수진(200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 2003~
2006년 변화 추이.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주삼환(1997). 21세기를 위한 교육개혁과 학교경영의 발전. 교육연구논총, 18(1), 337-358.
- 최상근, 박효정, 서근원, 김성봉(2004). 교육소의 계층의 교육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
교육개발원.
- 허경철(2001). 미래사회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교육과정연구, 19(1), 67-93.
- Banathy, B. H.(1995). Designing social systems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Plenum.
- Bernstein, B.(1977). Social class, language and socialization. In J. Karabel and A.H.
Halsey(eds.),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1973).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R. Brown(ed.),
Knowledge, education, and cultural change. London: Tavistock.
- Bowles, S. & Gintis, H.(1986). Democracy and capitalism: Property, community, and the
contradictions of modern social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 Bowles, S. & Gintis, H.(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Educational reform and the
contradictions of economic life. New York: Basic Books.
- Cavus, N., & Kanbul, S.(2010). Designing of Web 2.0 tools expected by the students on
technology-based learning environment.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5824-5829.
- Coleman, J.(1966).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1), 37-77.
- Creemers, B.(1996). The school effectiveness knowledge base. NY: Routledge.
- Edmonds, R.(1979). Effective schools for the urban poor. Educational Leadership, 37(1), 15-24.
- Fullan, M.(2010). All systems go: The change imperative for whole system reform. Thousand
Oaks, CA: Corwin.



- Giroux, H.(1983). Theory and resistance in education: A pedagogy for the opposition. Amherst, MA: Bergin & Gavey.
- Glickman, C. D., Gordon, S. P., & Ross-Gordon, J. M.(2010). SuperVision and Instructional Leadership. Boston: Pearson.
- Hargreaves, A., & Shirley, D. L.(2012). The global fourth way: The quest for educational excellence. CA: Corwin.
- Illich, I.(1970).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Harrow Books (Harper & Low).
- Jencks, C. et al.(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Kornhaber, M. L.(2004).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forms of testing, assessment, and accountability. Educational Policy, 18, 45-70.
- Laitsch, D.(2006). Assessment, high-stakes, and alternative visions: Appropriate use of the right tools to leverage improvement. The Great Lakes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 Practice.
- Linn, R. L.(1998). Assessment and accountability. CRESST/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 OECD.(2001). Education policy analysis 2001.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 Peterson, P. E., & West, M. R. (2003). No Child Left Behind? The politics and practice of school accountabilit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Rachel, R.(2002). Scaffolding as a teaching strategy. Adolescent Learning and Development, A, 500, 1-13.
- Reimer, E.(1971). School is dead: Alternatives in Education. New York: Penguin Books.
- Rotherham, A. J., & Willingham, D. (2009). To work, the 21st century skills movement will require keen attention to curriculum, teacher quality, and assessment. Educational leadership, 9(1), 15-20.
- Sashkin, M., & Egermeier, J.(1992). School change models and processes: A review of research and practi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sco.
- Scruggs, T. E., & Mastropieri, M. A.(1996). Teacher perceptions of mainstreaming /inclusion, 1958-1995: A research synthesis. Exceptional Children, 63(1), 59-74.
- Senge, P. M.(1990). The fifth discipline: The act and practice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New York: Doubleday/Currency.

- Smith, J., & O' Day, J.(1991). Putting the pieces together: Systemic school reform. CPRE Policy Brief. New Brunswick, NJ: Eagleton Institute of Politics.
- Sterman, J. D.(2001). System dynamics modeling: Tools for learning in a complex world.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3(4), 8-25.
- U. S. DOE.(2010). Education Technology Plan 2010.
- Wood, D., Bruner, J. S., & Ross, G.(1976). The role of tutoring in problem solv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7(2), 89-100.

2016년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 기초연구보고서

기획

김성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윤신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연구팀 장학관
 김유상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연구팀 장학사
 박수봉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연구팀 장학사
 이지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연구팀 주무관
 김은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연구팀 주무관

전문위원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전략특임팀 팀장
 양애경 한서대학교 교수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정창권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

위원

이혜련 인현고등학교 교장(위원장)
 김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 센터장(부위원장)

미래역량

정선숙 서울신석초등학교 교장
 강인경 서울화곡초등학교 교사
 강진자 윤중중학교 교감
 김윤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이경아 서울내발산초등학교 교감
 임유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장대진 서울천왕초등학교 교사
 정향심 상암고등학교 수석교사
 홍제남 영림중학교 교사
 황형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정책보좌관

미래교육체제

윤호상 신도림고등학교 교장
 문병화 서울윤중초등학교 교감
 박명숙 강남중학교 교감
 손동빈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관
 이병호 영등포평생학습관 행정지원과장
 이은갑 불암고등학교 행정실장
 이희숙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 파견교사
 임세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미래교육의제

함영기 서울특별시교육연구수원 교육연구관
 김유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김정빈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성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순철 역삼중학교 교사
 한만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정책담당보좌관
 한희정 서울유현초등학교 교사

MOU 기관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유엔미래포럼

발행일 2017. 1. 발행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자인·인쇄 (주)삼영디엔피 T.02-725-6697

